

2022 경기도공론화 종합결과 보고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Contents

『2022 경기도공론화 정책권고안』

제1장 공론화 개요

I. 2022 경기도공론화	1.
II. 공론화추진단	3.
III. 공론화추진단 주요 회의결과	5.
IV. 공론화 추진 일자	12.
※. 경기도공론화 보도자료	13.

제2장 전문가 워크숍

I. 1차 전문가 워크숍	17.
II. 2차 전문가 워크숍	18.

제3장 도민여론조사

I. 도민여론조사 개요	21.
II. 도민여론조사 결과	23.
III. 도민여론조사 설문지	36.

제4장 도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I. 도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43.
------------------	-----

제5장 숙의토론회 진행

I. 숙의 설계	51.
II. 퍼실리레이터 선발 및 교육	52.
III. 숙의 토론회 프로그램	54.
IV. 숙의토론회 질의응답	56.
V. 분임토의 내용 정리	72.
※. 숙의토론회 스케치	104.

제6장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

I. 조사 개요	113.
II. 조사 결과 분석	115.
III. 도민참여단 자유의견	125.
IV. 도민참여단 만족도	129.
※.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지	132.
※. 도민참여단 만족도 설문지	137.

부록. 발제 자료

2022 경기도공론화

-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관련-

정책권고문

2022.12.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제 출 문

경기도 귀하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은 두 차례 전문가 워크숍과 2,000명 대상 도민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원역·연령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101명의 도민참여단의 2회 숙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주간(10월 24~28일 사전 학습, 10월 29일 1차 숙의, 11월 12일 2차 숙의)에 걸쳐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숙의를 진행했고 1차 101명, 2차 97명 참석 등 책임감과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95.9%)를 형성했고, ▲소음 및 진동 피해대책, ▲안전 및 재산권 제약 개선 등 관련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군공항 원격지 이전방안, ▲현 공항 유지 및 점진적 폐쇄·통합 방안, ▲군공항 이전 외 민간공항통합 방안 등을 검토했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 역할에 대해 중지를 모았습니다. 도민참여단 대부분은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다고(87.6%) 평가했고 나의 의견과 달라도 숙의 결과를 존중(93.8%)한다고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도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오니,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12. 20.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추진단장 최순영

고선영 김태영 김현수 오충현

이승욱 이정훈 조성배 황정주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97명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총 97명

강창기	김혜숙	윤태희	정은정
고병연	김효정	윤현숙	정진영
고유민	남진철	이보형	정학복
권기철	민지혜	이수민	정희용
권종금	박미	이순병	조경희
길선아	박민수	이연상	조윤영
김광현	박상숙	이인문	조향옥
김기한	박성수	이재구	주영자
김동원	박준자	이창민	주원장
김동호	박시웅	이혁용	지원열
김명희	박형순	이혜영	창은주
김민중	배태주	임병철	최섬미
김병선	백승진	임성재	최성인
김복동	서지연	임승숙	최어진
김석우	성안나	임준희	최점복
김선희	송용하	임향원	최진희
김성태	송후섭	장다연	최형주
김옥분	신영섭	전광수	최혜린
김원우	안장근	정도영	한경선
김은아	양은영	정미연	한규현
김은희	오동충	정성태	홍범석
김인규	오상민	정수진	홍승표
김재희	오희옥	정영자	황지은
김택기	우기희	정유희	황지혜
김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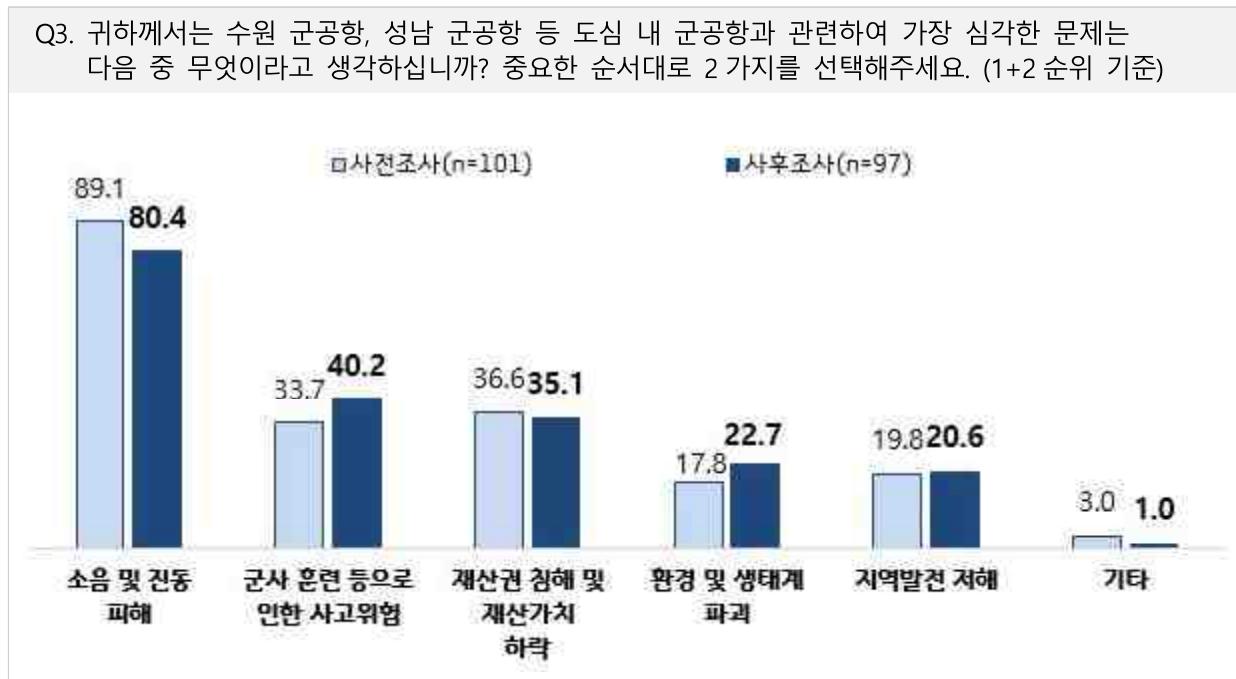
2022 경기도공론화에 따른 정책 제언

1. 경기도는 성남, 수원 등 도심 내 군공항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소음 및 진동 피해대책』, 『군사훈련에 따른 안전 대책』, 『재산권 제약 개선대책』, 『환경오염 대책』 등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도민참여단은 사전·사후 설문 조사 결과 모두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숙의를 통해 심각하다는 인식은 10%(사전 84.2%→사후 95.9%)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군공항의 주요 문제점은 ▲소음 및 진동피해(80.4%), ▲군사훈련 등 사고위험(40.2%), ▲재산권 침해 및 재산 가치 하락(35.1%) 등으로 인식했습니다.
- . 군공항 피해지역에 필요한 대책 및 지원과 관련해서 도민참여단 설문 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피해를 낮추기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76.3%), ▲정확한 피해 범위 측정 및 보상강화(67.0%) 의견이 높았고 그 밖에 분임토의를 통해서 ▲주기적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군공항 시설 내 환경오염조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표 1]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심각한 문제 사전·사후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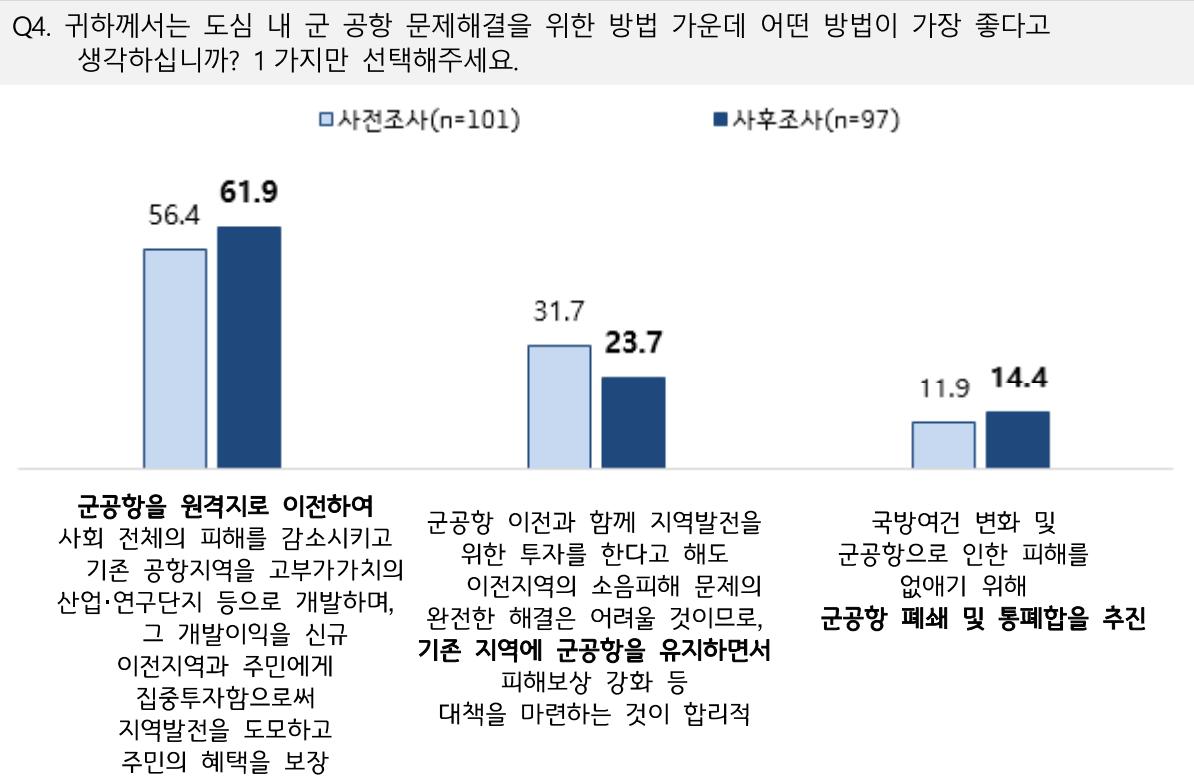
Q3. 귀하께서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등 도심 내 군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2 순위 기준)



2. 경기도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군공항 원격지 이전 방안』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지역 군공항 유지』, 『군공항 폐쇄 및 통합 방안』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도민참여단은 ▲군공항 원격지 이전 방안(61.9%)을 가장 선호했으나 ▲기존 지역 군공항 유지 방안(23.7%), ▲군공항 폐쇄 및 통합 방안(14.4%)을 선택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군공항 폐쇄 및 통합 의견은 사전조사(11.9%) 대비 사후(14.4%) 소폭 증가했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활용하더라도 ▲군공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합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그 밖에 도민참여단은 2차 속의 분임토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절차 활용방안의 주된 이유로 국가 기반시설로 이전계획에 따른 효과성 등을, ▲군공항 점진적 폐쇄 및 통합방안의 주된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문제점, 장비고도화 등을 ▲기존 공항 유지하되 피해 최소화 방안의 주된 이유로 군공항 이전 및 폐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표 2] 도심 내 군 공항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 조사결과



[표 3]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2차 숙의 분임토의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분임토의 주요 내용
군 공항 이전 절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공항은 국가기반시설로 백년대계. 이전 계획 활용이 효과적 ■ 특별법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 준수해야(구체적 선정기준 공개) ■ 이전 후보지에 대한 대책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군 공항 점진적 폐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문제점을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이 합리적임(점진적 폐쇄 적극 검토해야) ■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 공항 축소 및 첨단화 ■ 장비고도화(무인기지) 및 전술작전 변경 등으로 점진적 축소해야
현 공항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공항 이전과 폐쇄(국가 안보) 등 모두 문제점 있기에 현 지역에 존치하되 주민 삶의 질 향상(피해보상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3. 경기도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군공항 원격지 이전방안』 활용 시『입지 적절성 및 절차적 수용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군공항 이전절차 추진과정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군공항 외 다양한 선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도심 내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도민참여단은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50.5%)과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47.4%)을 사전·사후 조사 결과 모두 일관되게 중요하게 인식했습니다. 또한, 도민참여단은 분임토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절차의 문제점으로 ▲군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의 투명성 미흡, 이전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미흡 등을 지적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과밀이 없는 곳으로 이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입지 적합성 등 이외에 지역주민 합의 선행 등 소통 확대와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 . 한편, 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이외에 다양한 선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사전(84.2%)·사후(94.8%) 모두 매우 높았고 2차 도민 숙의 과정에서 도민참여단은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방안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등 추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표 4]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관련 사전·사후 설문 조사 결과

Q8. 만약 군 공항을 이전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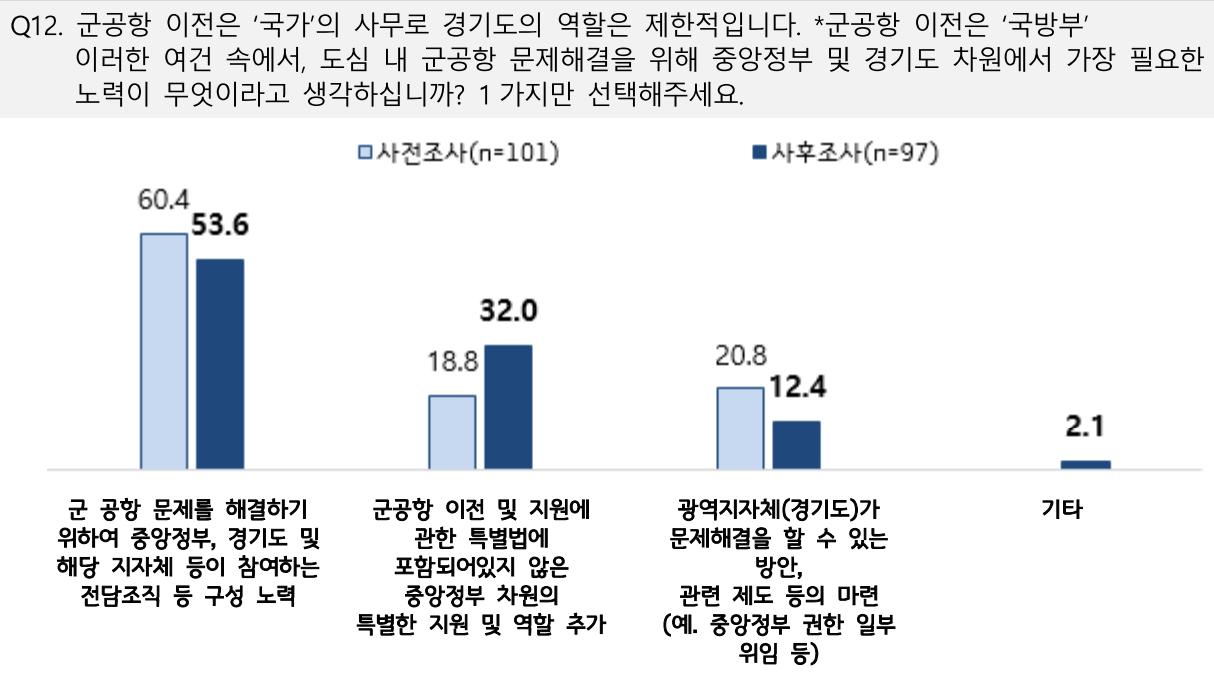
[표 5]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2차 숙의 분임토의 주요 내용

핵심 키워드	분임토의 주요 내용
군공항 외 민간공항 통합 등 추가 대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문제 야기. 민간과 군공항 공동 건설해야 ▪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으로 주변 인프라 향상 도모, 미래지향적인 시설 확충 통해 세계 중심의 경기도(경기 남부 민간항공수요 대응 포함) ▪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혜택(복합 상업 시설, 블록센터 건립 등 주변 지역 일자리 공급, 경제적 혜택) 및 새로운 도시 창조 ●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항 진행 시 이전지 재검토 (인구밀도 적은 곳, 남부 간척지, 섬 등 통합 가능한 부지 확보 노력)

4. 경기도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구성 및 갈등 관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소통 및 주민 의견 수렴절차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관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참여단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해야 할 노력으로 ▲중앙정부, 경기도,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53.6%) 인식했고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사전 조사(18.8%) 대비 상승했습니다(사후조사 32.0%). 또한, 경기도 내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소는 중앙정부(국무조정실)(66.0%) > 경기도(59.8%) > 국방부(45.4%) 순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 . 도민참여단은 2차 속의 분임토의를 통해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전담기구 구성 및 주도적 갈등관리, ▲주민투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론화,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의 등을 제안했고, 중앙정부는 ▲소통증진 및 책임성 강화, ▲특별법개정, ▲군공항 필요성 및 이전 관련 적극적 홍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표 6] 도심 내 군 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노력 관련 사전·사후 설문 조사결과



[표 7] 도심 내 군 공항 문제해결 관련 경기도/중앙정부 역할 2차 숙의 분임토의 주요 내용

구분	의견 내용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주도적 갈등 해결 노력,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 등) ■ 주민 의견 수렴절차(주민투표,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론화 등) ■ 피해 방지책(이전부지 재검토, 피해 최소화, 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 피해지역 주민 인센티브 보장, 군 공항 주변 인허가 규제)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증진 및 책임성 강화(전담 통합팀 구성, 이해관계 자자체와의 구체적 소통 채널 확보, 책임성에 입각한 정책추진) ■ 특별법개정(기부 대 양여방식, 구체적 보상방안, 투명한 정보공개) ■ 홍보(군공항 필요성 및 이전 관련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소통)

5. 경기도는 도심내 군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 경기도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공론화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 도민참여단은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도민참여단이 2차 숙의 과정에서 기타의견으로 제안한 ▲성급한 결정을 미루고 다양한 연구와 비교, 관련 데이터를 통한 폐쇄 및 이전 여부 결정, ▲국민적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다양한 공론형성의 필요성 등은 향후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따라서 경기도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추가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이에 ▲군공항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관련 데이터 활용, ▲군공항 이전절차 활용 시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군공항 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군공항 문제 관련 중앙정부,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 기간 확보 등을 준수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 추진 프로세스

공론화 의제선정

의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 경기도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추진단
구성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구성
공론화 모델 설계(공공토의¹⁾와 숙의형여론조사²⁾ 통합)

도민여론조사

공론화 의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진행
(경기도민 2,000명, 유/무선 RDD 방식의 전화면접조사)

도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4개 권역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라 100명 구성

전문가 워크숍

1차 워크숍 "도심 내 군 공항 현황과 문제"	2차 워크숍 "도심 내 군공항 문제 대안 탐색"
------------------------------	-------------------------------

사전 숙의

2022 경기도공론화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숙의
(<http://survey.panel.co.kr/ggd2022>)

숙의토론회

1차 숙의토론회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과 이슈"

10월 29일(토) 13시~18시
도민참여단 101명 참석

2차 숙의토론회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1월 12일(토) 13시~18시
도민참여단 97명 참석

도민참여단 사전 설문조사

도민참여단 사후 설문조사

공론화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 숙의 및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종합
공론화추진단 정책권고안 작성

1) 공공토의 모델 : 정책형성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 및 정책수단, 주요과제, 수용성 제고방안 등을 도출
2) 숙의형여론조사 : 의제에 대한 찬·반 쟁점 사항, 선호도 조사 및 의견 변화 분석

2022 경기도공론화 :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론화 개요

I 2022 경기도공론화

1. 추진배경

- 경기도는 도내 각종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형 도민 참여 및 숙의 공론화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 공론화 과정 및 절차의 체계적 설계와 추진을 통해 도민 주도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정책 효능감 및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 ▷ 추진방향 :
- 道 각종 정책 추진 시 도민 참여 절차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협치에 기반한 특색있는 공론화 모델 구축 · 실행
 - 도정 운영 핵심 기조인 민관협치의 성공적 정착 · 확산을 위해 소통 · 협력의 협치 친화적 정책 추진 및 대안 마련

2. 공론화 의제선정

- 경기도는 의제선정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3가지 후보 의제를 도출한 후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민에게 듣습니다.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최종 의제³⁾로 선정함.

< 2022 공론화사업 의제선정자문회의 현황 >

- ▷ 구성근거 :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4항
- ▷ 구성인원 : 총 10명 (전문가 6, 협치위원 2, 경기연구원 1, 갈등 1)
- ▷ 운영기간 : 2022. 6월 ~ 7월초 (총 3회 운영)
- ▷ 주요기능 : 공론화 대상 분야 선정, 공론의제 후보군 도출 및 자문 등

3) 2022.09.01.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론화추진단에서 의제 명칭 보완

< 공론화 의제선정 진행 경과 >

▷ (6.14.) 제1차 의제선정자문회의 개최

- 공론화 의제선정 방향(기초 발제), 공론화 이론 및 사례 교육

▷ (6.21.) 제2차 의제선정자문회의 개최

- 7개 분야* 후보 의제 발표 및 공론화 대표 3개 분야** 선정

* 노동, 복지, 환경, 여성, 경제, 교통, 도정 현안

** 환경, 노동, 도정 현안(수원 군공항 이전)

▷ (7.12.) 제3차 의제선정자문회의 개최

- 3개 분야 대표 후보 의제선정

① 수원 군공항 이전 ② 자원회수시설 설치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플랫폼노동자 권리확보방안

▷ (7.27.) 공론화 실시 제안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 선정

▷ (8.3.) 공론 의제 명칭 향후 실시 단계에서 보완하기로 결정

(민관협치위원회⁴⁾)

▷ (9.1.)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제 명칭 보완

- (공론화추진단⁵⁾) 道에서 추진하는 공론인 만큼 포괄적 접근 제시

4)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공론화위원회 역할 대행

5) 제1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 참고

II 공론화추진단

- 공론화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화 과정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 경기도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음.
- 공론화추진단은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민관협치위원 4명과 분야별 전문가 6인이 포함됨.

<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위원 >

분야	성명	소속	분야	성명	소속
민관협치	최순영(여) 단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환경	오충현(남)	동국대 교수 바이오환경과학과
	이정아(여)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도시계획	김현수(남)	단국대교수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고선영(여)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정책	이정훈(남)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
	황정주(여)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이사장	공론화	조성배(남)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군 공항	이승욱(남)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통계	김태영(남)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운영 개요>

- ▷ 구성근거 :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공론화위원회설치) 및 제11조(공론화추진단의 설치 등)
 -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⁶⁾ '2022년 공론화추진단 구성안' 의결(22.8.3.)
- ▷ 운영기간 : '22.8~12월(기간만료 후 자동해산)
- ▷ 구성인원 : 10명(민관협치위원 4명, 전문가 6명)

6)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사무대행

<주요 기능>

- ▷ 공론장 운영 방식 및 절차 설계, 참여자 구성, 공론장 공개 및 홍보
- ▷ 도민여론 수렴, 정책권고안 도출
- ▷ 그 밖의 공론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행

- 원활한 공론화 사업추진을 위해 실무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지원팀에는 경기도 민관협치과 및 과업수행사의 책임연구원이 포함됨.

< 2022 경기도공론화 실무지원팀>

소 속	직(위)급	성명	비 고
경기도 민관협치과	과장	박연경	공론화 총괄 부서
	팀장	김병연	
	주무관	정인규	
(주)엠브레인퍼블릭	수석부장	송미진	용역대행업체
	차장	정재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강원	
	이사	양미경	

III 공론화추진단 주요 회의결과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1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09.01.)

- 제1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7인이 참석했으며, 공론화 의제 명칭 선정, 도민여론조사 진행방안, 전문가 워크숍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함.

안건1) 공론 의제 명칭 선정

- 대주제는 “경기도민에게 듣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확정함.
 - : 본 공론화는 수원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탐색 및 사전 공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논의 범위를 “수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넓게 설정하는 것이 도민 공론화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제1차 워크숍 제목은 “도심 내 군공항 현황과 문제점”, 제2차 워크숍 제목은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잠정 결정하고, 경기도와 용역사에서 최종 정리하기로 함.

안건2) 도민 여론조사 진행방안

- 여론조사는 2,000명 1회 조사 진행으로 확정함.
- 표본설계는 수원시, 화성시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진행하되, 권역 구분은 8개로 조정하기로 함.
-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하고, 유/무선 RDD 비율을 3:7로 함.
- 설문 문항은 15문항内外로 하며, 9월 20일 1차 전문가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설문 초안을 9월 22일까지 추진단에 전달하기로 함. 설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2차 추진단 회의(9월 23일)에서 진행하기로 함.



안건3) 전문가 워크숍 진행방안

- 워크숍 주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 1차 - 군공항 현황과 문제점, 2차 -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 워크숍 참석자로는 국방부 등 사업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등이 포함되어야 할것임.
 - :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활동한 숙의 전문가, 화성 이전 반대 대책위 등 시민사회를 섭외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에서는 국방부의 군공항 관련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해 주시도록 촉구드림.
 - : 공론화 대주제가 "경기도 내 도심 군공항 문제"로 확정됨에 따라 1차 워크숍 참여자의 범위도 수원 외 군 공항이 존재하는 성남, 평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
- 공론화추진단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1차 워크숍 일정은 9월 20일로 변경**하며, 가급적 추진위원들이 워크숍을 참관하고 향후 공론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안건4) 주요 일정 확정⁷⁾

- 제2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9월 23일(금) 오후 2시
- 전문가 워크숍 : 1차 - 9월 20일(화), 2차 - 10월 14일(금)
- 숙의토론회 : 1차 - 10월 29일(토), 2차 - 11월 12일(토)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2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09.27.)

- 제2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5인이 참석했으며, 도민여론조사 설문 및 화성시 간담회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함.

안건1) 도민 여론조사 설문 관련 사항

- 설문 내용에 대한 논의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공론화추진단 위원들이 각자 검토하여 의견을 공유하기로 함.
 - : 이전을 전제로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중립적으로 문항 구성, 경기도의 역할을 묻는 문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의견이 논의됨.
- 여론조사 설문지는 9월 29일(목요일) 중으로 확정하기로 함.

7) 2차 추진단회의 및 1차 전문가 워크숍은 9월 27일로 일정이 변경됨.

: 공론화추진단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을 검토하여 **9월 28일(수요일) 오후 4시까지**

1차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고,

용역사(엠브레인퍼블릭)에서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문지를 다시 공유한 후 공론화 추진단의 최종 의견을 받아 **9월 29일(목요일) 중으로 설문지를 확정하기로 함.**

안건2) 화성시 범대위와 간담회 추진

- **화성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공론화추진단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이나 화성시와의 간담회 등이 필요함.**

: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가 아닌 군 공항 문제 자체를 이슈로 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화성시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함. 공론화추진단이 직접 화성시에 방문하여 반대 측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 참여 요청을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 보기로 함. 화성시의 여러 단체 중 공식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화성시 범대위에 경기도가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보기로 함.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3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10.12.)

- 제3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8인이 참석했으며, 제2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및 도민여론조사 경과보고, 도민참여단 구성 시 권역 구분 방안에 대해 논의함.

안건1) 제2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관련 의견

- 군 공항에 대한 피해로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개발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으면 함.
-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심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서 지양 했으면 함.

: 군 공항 이전 반대 측에서 공론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론화 추진 의도와 다르고, 화성 이전을 위한 사전 공론화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

안건2) 공론화 참여단 구성 시 권역 구분 관련 의견

-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 이정훈 위원이 제시한 4대 권역¹⁾과 5대 권역²⁾으로 구성하여 13일 중에 공론화추진단에 공유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함.

1안) 4대 권역

- 경부권 :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안성
- 동부권 : 하남,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
- 북부권 :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구리, 남양주

- 서해안권 : 김포,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오산, 시흥, 화성

2안) 5대 권역

- 경부권 : 수원, 성남,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성
- 경원권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 경의권 : 고양, 김포, 파주
- 동부권 :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가평
- 서해안권 :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4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10.14.)

- 제4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3인이 참석했으며, 1차 숙의토론회 진행방안, 도민참여단 권역 구분 확정 내용, 도민참여단 사전 숙의 자료에 대해 논의 함.

안건1) 제1차 숙의토론회 진행방안

- 1차 숙의토론회는 1차 전문과 워크숍과 동일하게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 주제발표 자료는 공론화추진단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함.
 - : 국방연구원의 논찬은 별도의 자료 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임.

안건2) 도민참여단 구성 시 권역 구분 관련 의견

- 10월 12일 3차 추진단 회의 후, 권역 구분에 대한 의견을 10월 13일에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함.

< 도민참여단 100명 구성 방안 >

권역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경부권	6	5	6	7	8	32
동부권	1	2	2	2	3	10
북부권	4	4	5	5	7	25
서해안권	6	6	7	6	8	33
합계	17	17	20	20	26	100

※성별은 고르게 하되, 특성 성별이 60%이상 되지 않게 함

- 경부권 :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안성
- 동부권 : 하남,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

- 북부권 :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구리, 남양주
- 서해안권 : 김포,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오산, 시흥, 화성

안건3) 도민참여단 사전 숙의 자료 관련 의견

-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하되, 사전 학습자료는 1차 및 2차 워크숍 발제 자료와 도민여론조사 결과, 1차 및 2차 워크숍 진행 영상 전체를 제공하기로 함.
 - : 워크숍 발제 자료를 스크립트화하여 제공하는 방안, 요약/정리하는 방안, 일부 발언을 편집하여 영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경우 발제자 및 패널의 의도와 다르게 도민참여단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어 별도의 편집/가공 작업을 하지 않고 전체영상을 제공하기로 함.(단, 워크숍 영상 시청이 의무사항은 아님.)
 - : 그 밖에 통계 자료(예. 경기도 내 군 공항 현황, 피해 현황)나 연구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 참여단의 숙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음.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5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10.19.)

- 제5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6인이 참석했으며, 도민여론조사 결과 배포,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및 도민참여단 웹페이지, 자료집,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함.

안건1) 도민 여론조사 결과의 숙의자료 활용

-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부가적인 설명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숙의 자료로 활용하기로 확정함.
 - : 지역(8개 권역), 성별, 연령을 기본 분석 배너로 제시함.

안건2)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및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 관련 의견

- 숙의토론회 프로그램은 이견 없이 확정하기로 함.
-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는 공론화추진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공론화추진단 위원들의 ID를 등록하여 개별 접속이 가능하게 하기로 함.
 - : 도민참여단 웹페이지는 10월 24일에 참여단에게 공개되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안건3)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 구성 방안

○ 최종 설문은 26일까지 확정하기로 함.

- : 공론화추진단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설문 초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용역사(엠브레인퍼블릭)에서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설문을 다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10월 26일(수) 중으로 최종 설문을 확정하기로 함.
- : Q3번(도심 내 군공항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별 공감도) 문항에 대해서는 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기로 함.
- : Q7, Q8번(경기도/정부의 역할) 문항에 대해서도 경기도/정부의 역할·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 추가 의견이 있었음.

안건4) 도민참여단 숙의자료

○ 도민참여단 숙의 자료는 제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작성하기로 함.

- : 1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는 10월 24일까지 취합하여 추진단이 내용을 확인하기로 함.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6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11.08.)

- 제6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5인이 참석했으며, 2차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및 발제 자료에 대해 논의함.

안건1) 2차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관련 의견

- 2차 숙의토론회 프로그램은 의견 없이 확정하기로 함.
- 참여단이 발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자가 간략한 설명을 하기로 함.

안건2) 2차 숙의토론회 발제자료 관련 의견

- (주)유신 허성태 부사장 발제자료에 포함된 경기도 로고가 경기도의 입장에서 발표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로 함.
 - : 로고 삭제 후 도민참여단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완료함.

2022 경기도공론화 사업 제7차 공론화추진단 회의결과(2022.11.21.)

- 제7차 공론화추진단 회의에는 최순영 단장 등 총 6인이 참석했으며, 숙의토론회 정책 권고안에 대해 검토함.

안건1) 권고안 관련 의견

- 권고안 앞 부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1~4번)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함.
 - :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위해 추진단의 해석을 최소화하기로 함.
 - : 1번과 2번 사이에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내용(예. 이전 논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함.
- 표2, 표4의 워딩을 압축하여 정리하기로 함.
 - : 워딩이 많은 표2, 표4의 내용을 보기 좋게 압축하여 정리하기로 함.
- 권고안의 5번 '추가 공론화'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정리하기로 함
 - : 향후 경기도에서 추가 공론화를 진행할 때, 군공항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관련 데이터 활용, 군공항 이전절차 활용 시 주민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기로 함.
- 권고안의 5번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의견은 온라인(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함.

안건2) 권고안 전달 방법

- 경제부지사 일정을 확인하여 차담회 형식으로 전달식 일정을 잡고, 참여 가능한 공론화추진위원들이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확정함.



IV 공론화 추진 일지

월	일	주요내용
6월	14일	제1차 의제선정 자문회의
	21일	제2차 의제선정 자문회의
7월	12일	제3차 의제선정 자문회의
	27일	공론 실시 제안 의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 선정
8월	3일	22년 공론화 실시 결정 (민관협치위원회 심의·의결)
	18일	2022 공론화추진단 구성 (민관협치위원 4명, 분야별 전문가 6명)
9월	1일	제1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의제 명칭 확정 "경기도민에게 듣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7일	제1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도심 내 군공항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제2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도민여론조사 진행방안 협의
	1일~11일	도민 여론조사 실시
10월	12일	제3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2차 전문가 워크숍 및 참여단 구성방안 협의
	13일	도민참여단 구성 시, 권역 구분 방안 협의
	14일	제2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도심 내 군공항 문제 대안 탐색) 제4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숙의 프로그램 및 사전숙의 자료 협의
	15일~21일	도민참여단 선정 및 안내
	19일	제5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자료집, 사전·사후 설문 논의
	21일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웹페이지 구축
	24일	도민참여단 온라인 사전 숙의 안내
	26일	퍼실리레이터 사전 교육
	28일	숙의토론회 행사장 구성
	29일	1차 숙의토론회 진행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11월	8일	제6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2차 프로그램 및 발제 자료 검토
	11일	숙의토론회 행사장 구성
	12일	2차 숙의토론회 진행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8일	도민참여단 조사결과 및 정책권고안 초안 제출
	21일	제7차 공론화추진단 회의 : 권고안 검토
12월	20일	공론화추진단 정책권고안 부지사 전달



경기도공론화 보도자료

전문가 워크숍 보도자료

<1차 전문가 워크숍>

인천일보

홈 > 정치 >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장'...다양한 현장 목소리 듣다

박지혜 기자 | 0 승인 2022.09.28

경기도 공론화 1차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다른 지역과 특성 달라"
시민 "보상중심 해결방식 문제"



▲군공항 소음권역인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잇따라면서 주민의 소음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상공으로 천후기가 비행 충돌을 하고 있다./김철민 기자
narodo@incheonilbo.com

<2차 전문가 워크숍>

인천일보

홈 > 사회 > 경기

수원시 군공항 이전 찬반부터...축소폐쇄분산배치 주장도

박지혜 기자 | 0 승인 2022.10.17

[경기도 공론화 2차 전문가 워크숍]

항공·국방·갈등조정 전문가 참석
'지자체주민 동의' 필요성 입모아



▲14일 오후 2시반 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 경기도 공론화 2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모습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숙의토론회 보도자료

<1차 숙의토론회>

연합뉴스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문제' 1차 숙의토론...첫 도민
공론장

입력 2022.10.31. 오전 10:43

| 도민참여단 101명 참석...내달 2차 토론 거쳐 도지사에 정책 제언

(수원=연합뉴스) 최찬홍 기자 = 경기도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1차 숙의 토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심내 군공항 문제' 1차 숙의토론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차 숙의토론회>

연합뉴스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숙의 토론 마쳐...내달
정책제언

입력 2022.11.14. 오전 9:47

| 도민참여단, 대안 탐색...공론화추진단, 최종 권고안 김동연 지사에 전달 예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홍 기자 = 경기도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2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열어 도민여론 수렴 절차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숙의토론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 워크숍

I 1차 전문가 워크숍

- 1차 전문가 워크숍은 9월 2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진행되었으며
 - ①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도민 여론조사 설문지 구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1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및 영상은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참석대상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발제	행정과 갈등연구소(대표)	홍수정
전문가	한국국방연구원(연구원)	우정범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김주석
군공항 문제 피해 주민	수원(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장성근
	성남(서울공항 피해 지역 주민)	서석로
	평택(오산 미군 공군기지 피해 지역 주민)	홍성동
공무원	수원(공항 이전과장)	김태관
	평택(군소음 보상팀장)	소문희

□ 진행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30~14:35	5'	▷ 개회 및 환영사	공론화추진단장
14:35~14:40	5'	▷ 워크숍 일정 안내	진행자
14:40~15:00	20'	▷ 주제발표(도심 내 군공항 현황과 문제)	홍수정 대표
15:00~16:20	80'	▷ 패널 토의	
16:20~16:3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II 2차 전문가 워크숍

- 2차 전문가 워크숍은 10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①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②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 구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2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및 영상은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숙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참석대상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발제 패널	대구경북연구원(연구원)	김주석
	한국국방연구원(연구원)	우정범
	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	강철구
	한국교통대(교수)	이근영
	지방자치연구소(박사)	이종필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육식
	(유)갈등조정센터(상임이사)	이경순

□ 진행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30~14:35	5'	▷ 개회 및 환영사	공론화추진단장
14:35~14:40	5'	▷ 워크숍 일정 안내	진행자
14:40~15:10	30'	▷ 주제발표(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김주석 연구원
15:10~16:10	60'	▷ 패널 토의	
16:10~16:30	20'	▷ 질의응답 및 폐회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민여론조사

I 도민여론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인식 및 공론화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⁸⁾를 실시함.
-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의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5.5%(무선 6.8%, 유선 3.9%)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명
표본 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 2.19% Point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전화면접 70% + 유선전화면접 30%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 : 유·무선 RDD 활용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권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법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전화 RDD + 유선전화 RDD
응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무선전화 6.8%, 유선전화 3.9%)
통계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8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엠브레이인퍼블릭

8) 경기도민 여론조사는 지역(권역),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라 결과를 분석(2,000명 기준)하였고, 도민참여단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도민여론조사는 실제 2,000명 이상 진행함.

2. 표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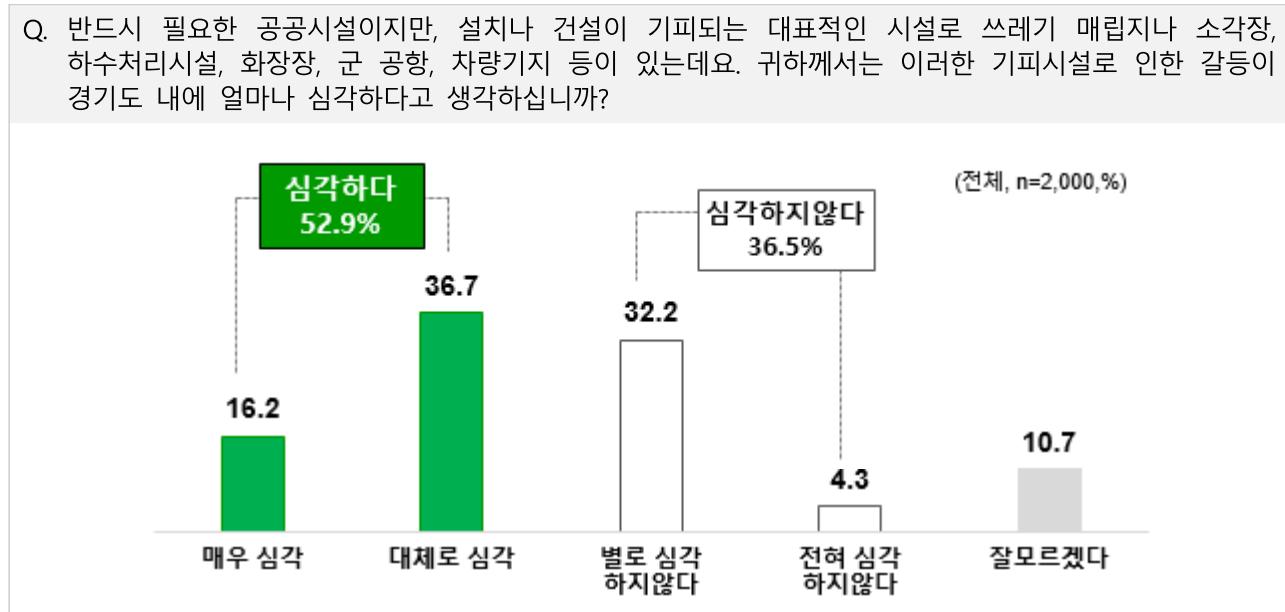
		사례수	%
■ 전체 ■		(2,000)	100.0
성별	남성	(999)	50.0
	여성	(1001)	50.1
연령	18세~29세	(359)	18.0
	30대	(327)	16.4
	40대	(399)	20.0
	50대	(400)	20.0
	60세 이상	(515)	25.8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19.6
	남부임해권	(308)	15.4
	동남내륙권	(292)	14.6
	동북내륙권	(166)	8.3
	서북부권(경의권)	(301)	15.1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7.4
	남부인접권	(158)	7.9
	서부인접권	(236)	11.8
직업	농림어업	(28)	1.4
	자영업	(373)	18.7
	블루칼라	(320)	16.0
	화이트칼라	(661)	33.1
	주부	(291)	14.6
	학생	(165)	8.3
	무직/퇴직/은퇴 등	(149)	7.5
	거절/무응답	(13)	0.7

- 남부내륙권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 남부임해권 : 평택시, 안산시, 화성시
- 동남내륙권 :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 동북내륙권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 서북부권(경의권)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 북부내륙권(경원권)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 남부인접권 :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 서부인접권 :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II 도민여론조사 결과

1.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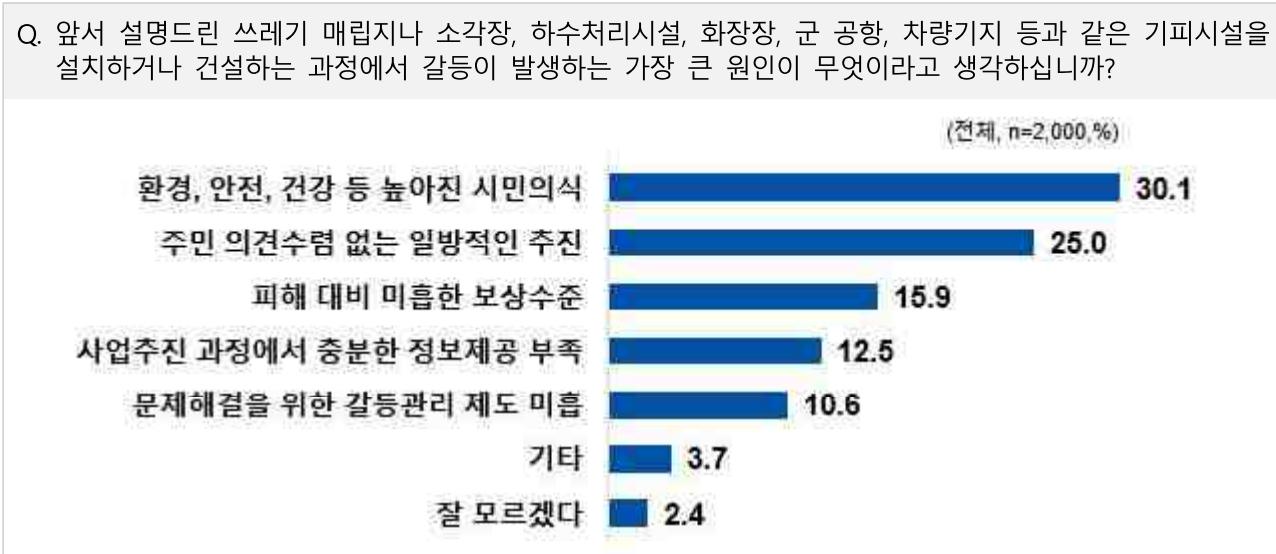
- 기피시설로 인한 도내 갈등에 대해 절반 이상(52.9%)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명 중 1명(36.5%)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함.



(%)		사례수	매우+대체로 심각하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52.9	36.5	10.7
성별	남성	(999)	49.2	41.6	9.1
	여성	(1001)	56.4	31.3	12.3
연령별	18세~29세	(359)	47.9	42.6	9.5
	30대	(327)	52.9	39.1	8.0
	40대	(399)	57.1	33.1	9.8
	50대	(400)	54.0	34.0	12.0
	60대이상	(515)	52.0	35.0	13.0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54.3	33.2	12.5
	남부임해권	(308)	60.1	32.5	7.5
	동남내륙권	(292)	45.9	37.7	16.4
	동북내륙권	(166)	50.0	38.6	11.4
	서북부권(경의원)	(301)	49.5	44.5	6.0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56.5	34.7	8.8
	남부인접권	(158)	52.5	35.4	12.0
	서부인접권	(236)	53.8	35.6	10.6

2.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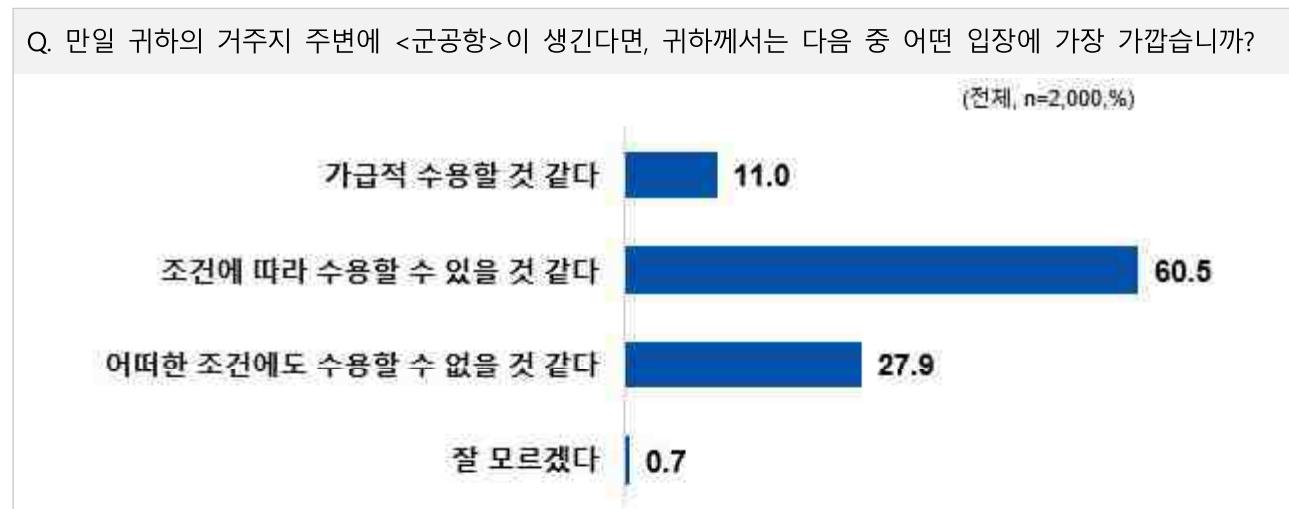
-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높아진 시민의식'이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25.0%), '피해 대비 미흡한 보상수준'(15.9%),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12.5%),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제도 미흡'(10.6%) 등의 순으로 언급함.



(%)		사례수	환경, 안전, 건강 등 높아진 시민의식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	피해 대비 미흡한 보상수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제도 미흡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30.1	25.0	15.9	12.5	10.6	3.7	2.4
성별	남성 여성	(999) (1001)	23.4 36.7	25.6 24.4	19.7 12.0	12.2 12.8	10.8 10.3	5.3 2.1	2.9 1.8
연령별	18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359) (327) (399) (400) (515)	27.6 29.7 25.1 26.5 38.6	19.8 18.3 27.6 31.8 25.6	26.2 24.8 15.5 10.3 7.6	7.8 10.4 15.0 15.3 13.0	15.6 11.9 12.0 7.3 7.6	1.1 3.7 3.5 6.5 3.5	1.9 1.2 1.3 2.5 4.1
권역별	남부내륙권 남부임해권 동남내륙권 동북내륙권 서북부권(경의원) 북부내륙권(경원권) 남부인접권 서부인접권	(392) (308) (292) (166) (301) (147) (158) (236)	31.1 31.5 31.2 27.7 27.2 29.3 31.6 29.7	24.5 26.0 23.3 25.9 25.9 29.3 24.1 22.9	17.9 17.2 13.4 17.5 13.0 15.6 13.9 17.8	11.7 10.4 12.7 13.3 15.9 12.2 14.6 10.2	8.7 11.0 13.7 8.4 10.3 6.8 10.1 13.6	4.3 2.3 3.4 3.6 5.3 4.1 3.2 3.0	1.8 1.6 2.4 3.6 2.3 2.7 2.5 3.0
갈등수준 인식별	심각 심각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1057) (729) (214)	30.5 28.5 33.2	25.5 24.0 25.7	15.5 17.4 12.1	13.0 12.1 11.7	10.8 11.0 7.9	3.4 4.1 3.7	1.3 2.9 5.6

3. 거주지 주변 군공항 인식

- 거주지 주변에 군공항이 생길 경우,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가 60.5%로 가장 많았음. '어떠한 조건에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27.9%, '가급적 수용할 것 같다'는 1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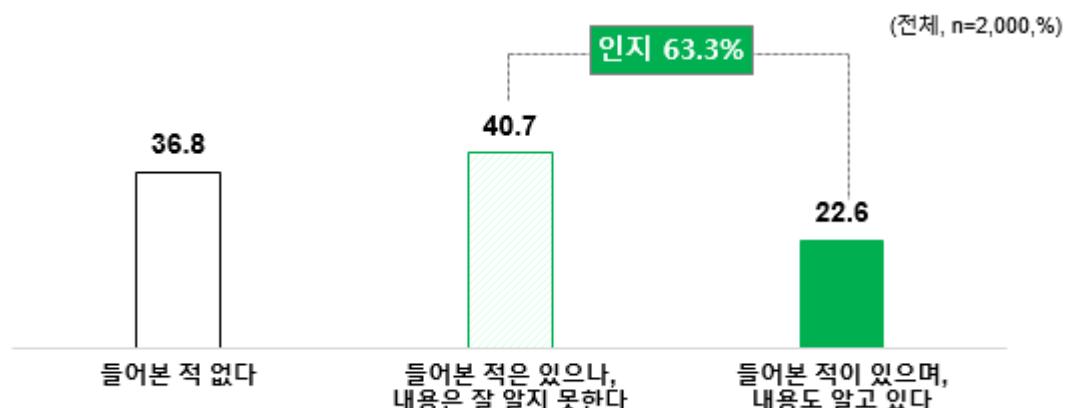


(%)		사례수	가급적 수용할 것 같다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떠한 조건에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11.0	60.5	27.9	0.7
성별	남성	(999)	14.0	62.4	23.2	0.4
	여성	(1001)	7.9	58.5	32.6	1.0
연령별	18세~29세	(359)	12.0	73.5	13.9	0.6
	30대	(327)	7.0	72.5	20.5	0.0
	40대	(399)	7.5	59.1	33.1	0.3
	50대	(400)	14.0	56.0	29.8	0.3
	60대이상	(515)	13.0	48.2	36.9	1.9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9.7	59.7	29.8	0.8
	남부임해권	(308)	9.7	56.8	32.1	1.3
	동남내륙권	(292)	11.0	63.4	25.3	0.3
	동북내륙권	(166)	9.6	62.7	27.1	0.6
	서북부권(경의원)	(301)	13.0	60.5	25.9	0.7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16.3	62.6	20.4	0.7
	남부인접권	(158)	5.1	61.4	33.5	0.0
	서부인접권	(236)	13.6	59.3	26.3	0.8
갈등수준 인식별	심각	(1057)	9.6	57.0	33.0	0.4
	심각하지 않음	(729)	13.2	67.6	18.4	0.8
	모름/무응답	(214)	9.8	53.3	35.0	1.9

4. 수원 및 성남 군공항 문제 인지도

- 수원 및 성남 등 도심 내 위치한 군공항 문제로 인한 폐쇄, 이전 요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가 40.7%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22.6%, '들어본 적 없다'는 36.8%임.

Q.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평택오산 공군기지 등 다수의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 수원 및 성남에 소재한 군공항의 경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 및 안전문제 등으로 폐쇄, 이전 요구 등이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사례수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전체		(2,000)	36.8	40.7	22.6
성별	남성	(999)	31.0	37.6	31.3
	여성	(1001)	42.5	43.8	13.8
연령별	18세~29세	(359)	57.9	31.2	10.9
	30대	(327)	43.1	39.8	17.1
	40대	(399)	31.8	38.8	29.3
	50대	(400)	27.5	43.8	28.8
	60대이상	(515)	28.9	47.0	24.1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27.0	39.8	33.2
	남부임해권	(308)	29.2	42.5	28.2
	동남내륙권	(292)	36.6	42.1	21.2
	동북내륙권	(166)	48.2	36.1	15.7
	서북부권(경의원)	(301)	45.2	39.5	15.3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40.8	40.1	19.0
	남부인접권	(158)	34.8	43.0	22.2
	서부인접권	(236)	42.8	41.5	15.7
갈등수준 인식별	심각	(1057)	31.8	42.6	25.6
	심각하지 않음	(729)	41.3	38.4	20.3
	모름/무응답	(214)	45.8	39.3	15.0

5. 군공항 피해 접근 방향

-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가 49.4%, '정확한 피해 내용과 범위를 측정하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가 46.9%로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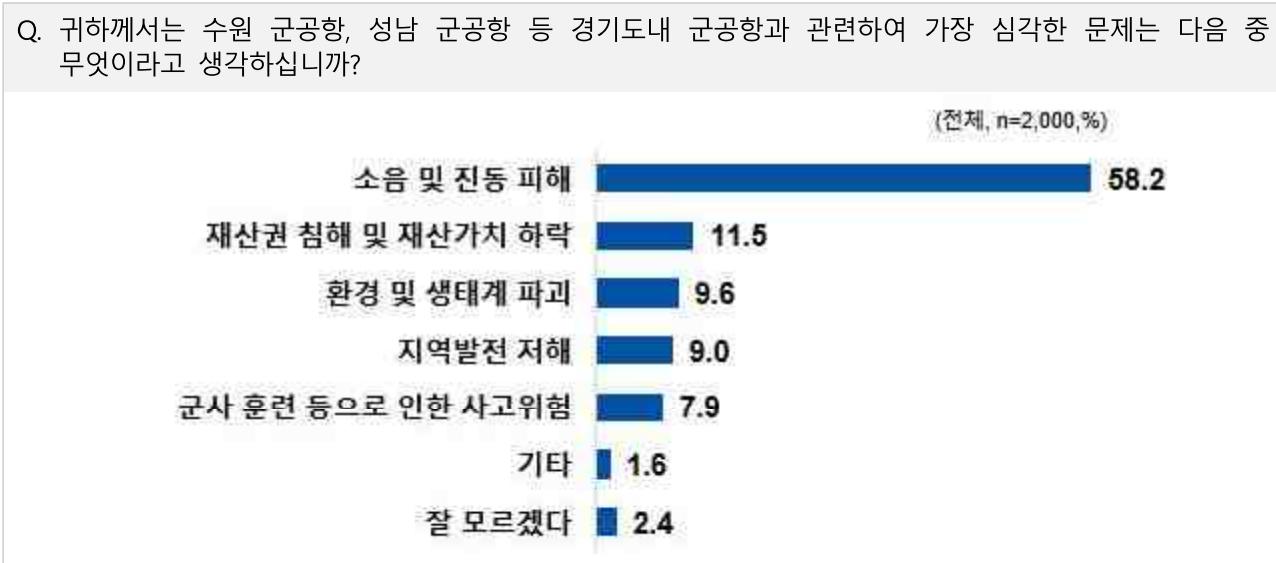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례수	정확한 피해 내용과 범위를 측정하고 보상을 강화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선제적 조치를 강화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46.9	49.4	3.8
성별	남성	(999)	50.1	45.8	4.1
	여성	(1001)	43.8	52.8	3.4
연령별	18세~29세	(359)	58.5	39.0	2.5
	30대	(327)	57.8	40.7	1.5
	40대	(399)	47.4	51.6	1.0
	50대	(400)	39.0	56.0	5.0
	60대이상	(515)	37.7	55.1	7.2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46.9	49.2	3.8
	남부임해권	(308)	52.3	45.1	2.6
	동남내륙권	(292)	43.2	53.1	3.8
	동북내륙권	(166)	43.4	53.0	3.6
	서북부권(경의원)	(301)	42.5	53.5	4.0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53.7	40.8	5.4
	남부인접권	(158)	50.6	48.1	1.3
	서부인접권	(236)	45.8	48.7	5.5
거주지 주변 군공항 인식	가급적 수용	(219)	34.2	58.4	7.3
	조건에 따라 수용	(1209)	50.5	46.7	2.9
	수용 불가	(558)	44.8	51.6	3.6
	잘 모르겠다	(14)	21.4	50.0	28.6

6. 군공항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

-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음 및 진동피해'를 꼽은 응답이 58.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재산권 침해 및 재산 가치 하락'(11.5%), '환경 및 생태계 파괴'(9.6%), '지역발전 저해'(9.0%),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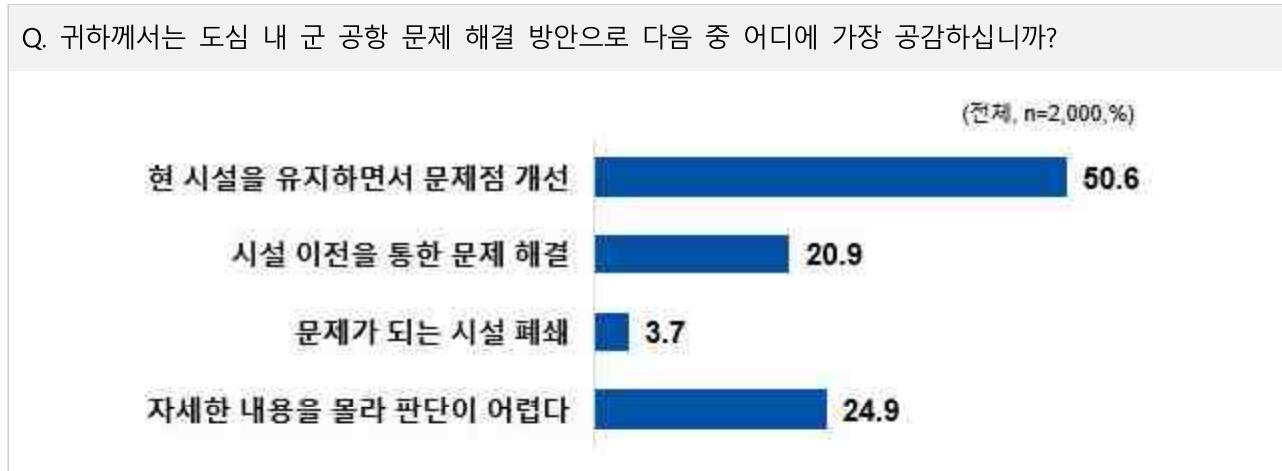


(%)		사례수	소음 및 진동 피해	재산권 침해 및 재산 가치 하락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 발전 저해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58.2	11.5	9.6	9.0	7.9	1.6	2.4
성별	남성	(999)	59.5	12.7	7.2	10.4	5.5	2.5	2.2
	여성	(1001)	56.9	10.2	12.0	7.5	10.2	0.7	2.5
연령별	18세~29세	(359)	62.7	11.7	10.3	6.7	6.4	0.8	1.4
	30대	(327)	66.7	13.1	4.6	5.2	9.2	0.9	0.3
	40대	(399)	57.9	11.0	9.5	9.0	8.8	1.5	2.3
	50대	(400)	57.5	10.8	10.3	10.8	6.8	1.8	2.3
	60대이상	(515)	50.5	11.1	11.8	11.5	8.2	2.5	4.5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63.0	11.2	8.4	7.7	5.6	2.0	2.0
	남부임해권	(308)	63.0	9.7	7.8	8.4	7.5	1.0	2.6
	동남내륙권	(292)	60.6	9.6	8.6	10.6	7.5	1.4	1.7
	동북내륙권	(166)	56.0	8.4	10.8	10.8	9.0	0.6	4.2
	서북부권(경의원)	(301)	54.5	13.0	12.3	7.6	8.3	2.0	2.3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42.2	13.6	12.2	16.3	10.2	2.7	2.7
	남부인접권	(158)	58.9	13.3	10.1	5.7	8.2	1.9	1.9
	서부인접권	(236)	56.8	14.0	8.9	7.6	9.3	1.3	2.1

7.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 방향

-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이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이전을 통한 문제해결'(20.9%), '문제가 되는 시설 폐쇄'(3.7%) 순임.
- 한편, '자세한 내용을 몰라 판단이 어렵다'는 경우도 24.9%임.

Q.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		사례수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	시설 이전을 통한 문제 해결	문제가 되는 시설 폐쇄	자세한 내용을 몰라 판단이 어렵다
전체		(2,000)	50.6	20.9	3.7	24.9
성별	남성	(999)	53.6	23.5	3.5	19.4
	여성	(1001)	47.6	18.3	3.9	30.3
연령별	18세~29세	(359)	59.3	10.9	2.5	27.3
	30대	(327)	52.0	20.5	3.7	23.9
	40대	(399)	51.9	22.6	3.3	22.3
	50대	(400)	48.8	29.3	3.0	19.0
	60대이상	(515)	43.9	20.4	5.4	30.3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47.4	27.6	4.1	20.9
	남부임해권	(308)	46.1	25.3	3.9	24.7
	동남내륙권	(292)	55.1	18.2	3.8	22.9
	동북내륙권	(166)	52.4	20.5	1.2	25.9
	서북부권(경의원)	(301)	54.2	15.9	5.0	24.9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53.1	16.3	2.0	28.6
	남부인접권	(158)	47.5	22.8	4.4	25.3
	서부인접권	(236)	50.4	15.7	3.4	30.5
군공항 문제 인지별	들어본 적 없음	(735)	46.7	13.7	3.4	36.2
	내용은 알지 못함	(814)	52.2	22.0	3.4	22.4
	내용도 알고 있음	(451)	53.9	30.6	4.7	10.9

8.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관련 주장별 공감도

- ‘군공항 이전은 인프라 조성이나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수	매우+대체로 공감	별로+전혀 공감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72.5	25.1	2.5
연령별	18세~29세	(359)	69.6	26.5	3.9
	30대	(327)	74.6	24.5	0.9
	40대	(399)	72.2	26.3	1.5
	50대	(400)	75.5	22.3	2.3
	60대이상	(515)	71.1	25.6	3.3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73.0	26.5	0.5
	남부임해권	(308)	73.1	23.7	3.2
	동남내륙권	(292)	72.9	22.6	4.5
	동북내륙권	(166)	73.5	25.3	1.2
	서북부권(경의원)	(301)	73.4	24.6	2.0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70.1	27.2	2.7
	남부인접권	(158)	78.5	18.4	3.2
	서부인접권	(236)	66.1	30.9	3.0
거주지 주변 군공항 인식	가급적 수용	(219)	75.3	22.4	2.3
	조건에 따라 수용	(1209)	76.3	21.5	2.2
	수용 불가	(558)	63.4	33.9	2.7
	잘 모르겠다	(14)	64.3	21.4	14.3
군공항 문제 인지별	들어본 적 없음	(735)	67.5	28.6	3.9
	내용은 알지 못함	(814)	75.3	22.9	1.8
	내용도 알고 있음	(451)	75.6	23.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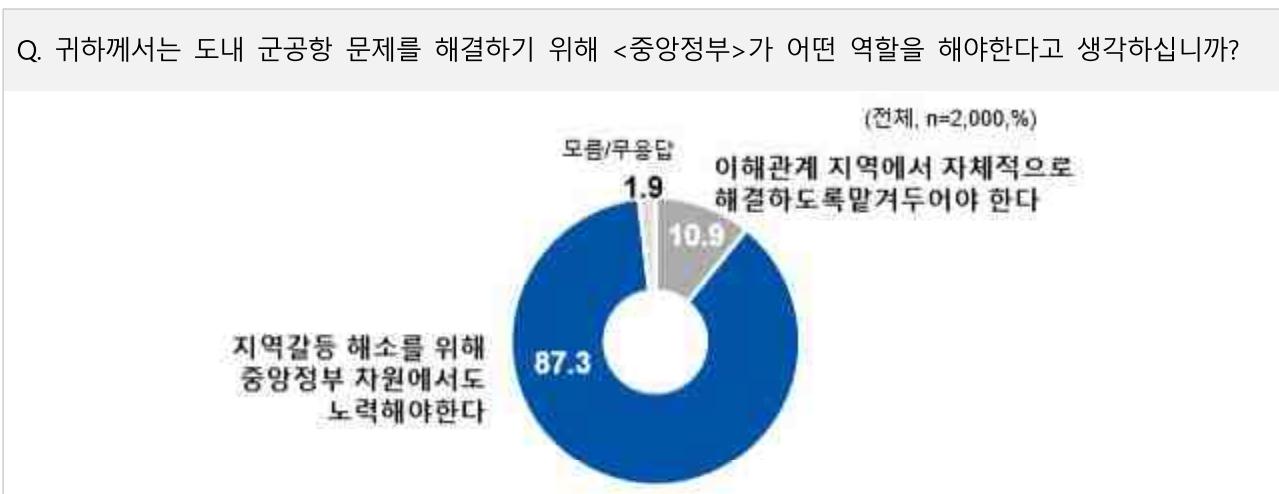
- ‘군공항 이전 논의는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새로운 지역으로 전가할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수	매우+대체로 공감	별로+전혀 공감하지 않음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77.5	20.3	2.3
연령별	18세~29세	(359)	79.9	19.2	0.8
	30대	(327)	81.0	17.1	1.8
	40대	(399)	82.5	16.5	1.0
	50대	(400)	78.5	19.0	2.5
	60대이상	(515)	68.7	26.8	4.5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77.6	20.2	2.3
	남부임해권	(308)	79.9	18.2	1.9
	동남내륙권	(292)	79.8	18.5	1.7
	동북내륙권	(166)	77.1	18.7	4.2
	서북부권(경의원)	(301)	79.7	18.3	2.0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71.4	26.5	2.0
	남부인접권	(158)	73.4	24.7	1.9
	서부인접권	(236)	75.0	22.0	3.0
거주지 주변 군공항 인식	가급적 수용	(219)	73.5	25.1	1.4
	조건에 따라 수용	(1209)	78.2	19.7	2.1
	수용 불가	(558)	77.8	19.4	2.9
	잘 모르겠다	(14)	57.1	28.6	14.3
군공항문 제 인지별	들어본 적 없음	(735)	74.8	21.6	3.5
	내용은 알지 못함	(814)	80.7	17.6	1.7
	내용도 알고 있음	(451)	75.8	22.8	1.3

9. 군공항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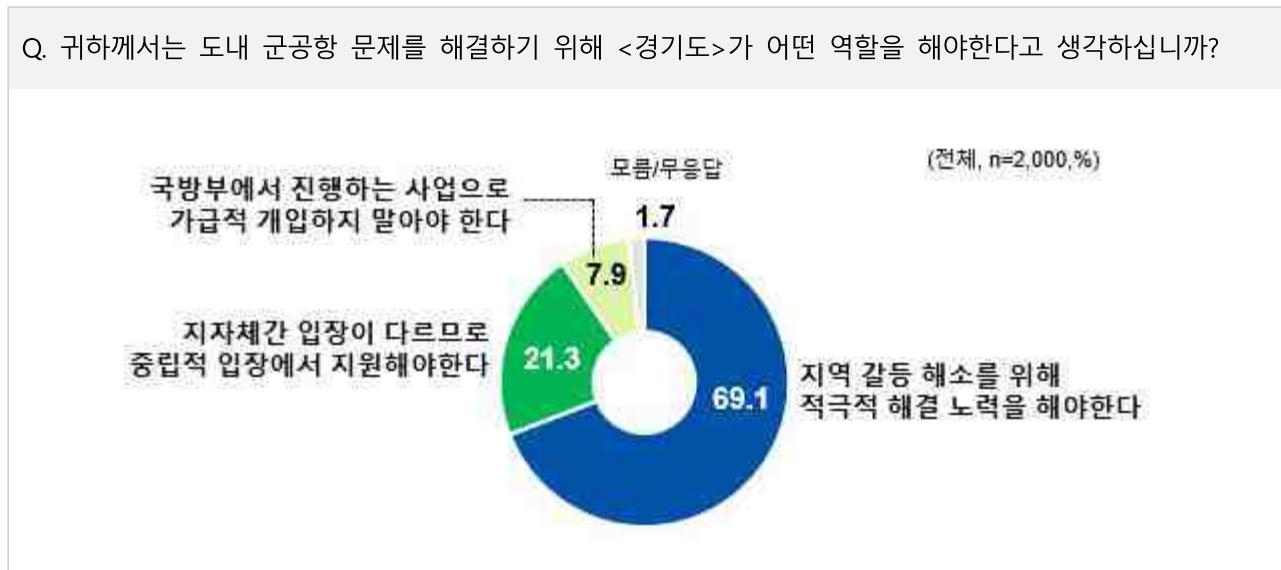
-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87.3%로 압도적임.



(%)		사례수	이해관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10.9	87.3	1.9
성별	남성	(999)	11.4	87.4	1.2
	여성	(1001)	10.3	87.2	2.5
연령별	18세~29세	(359)	12.3	86.6	1.1
	30대	(327)	7.3	92.4	0.3
	40대	(399)	10.3	88.2	1.5
	50대	(400)	9.3	89.5	1.3
	60대이상	(515)	13.8	82.1	4.1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11.0	88.0	1.0
	남부임해권	(308)	9.7	88.3	1.9
	동남내륙권	(292)	10.6	87.3	2.1
	동북내륙권	(166)	11.4	87.3	1.2
	서북부권(경의원)	(301)	12.0	85.7	2.3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11.6	85.7	2.7
	남부인접권	(158)	7.6	91.8	0.6
	서부인접권	(236)	12.3	84.7	3.0
갈등수준 인식별	심각	(1057)	9.8	88.6	1.6
	심각하지 않음	(729)	12.6	85.5	1.9
	모름/무응답	(214)	9.8	87.4	2.8

10. 군공항 문제에서 경기도의 역할

- 도심 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1%로 대부분임.



(%)		사례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해결 노력	지자체간 입장이 다르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69.1	21.3	7.9	1.7
성별	남성	(999)	66.4	22.5	10.2	0.9
	여성	(1001)	71.8	20.1	5.6	2.5
연령별	18세~29세	(359)	59.1	32.9	6.7	1.4
	30대	(327)	74.3	21.4	3.7	0.6
	40대	(399)	76.7	16.8	5.5	1.0
	50대	(400)	75.8	16.3	6.5	1.5
	60대이상	(515)	61.7	20.6	14.4	3.3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68.9	21.7	8.4	1.0
	남부임해권	(308)	69.2	20.8	6.8	3.2
	동남내륙권	(292)	70.5	20.9	7.5	1.0
	동북내륙권	(166)	68.1	22.3	7.8	1.8
	서북부권(경의원)	(301)	65.8	24.9	7.6	1.7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70.7	20.4	8.2	0.7
	남부인접권	(158)	75.3	15.2	8.2	1.3
	서부인접권	(236)	67.4	21.2	8.9	2.5
갈등수준 인식별	심각	(1057)	72.2	18.6	7.7	1.5
	심각하지 않음	(729)	66.4	24.3	8.2	1.1
	모름/무응답	(214)	63.1	24.3	7.9	4.7

11. 경기도 공론화 추진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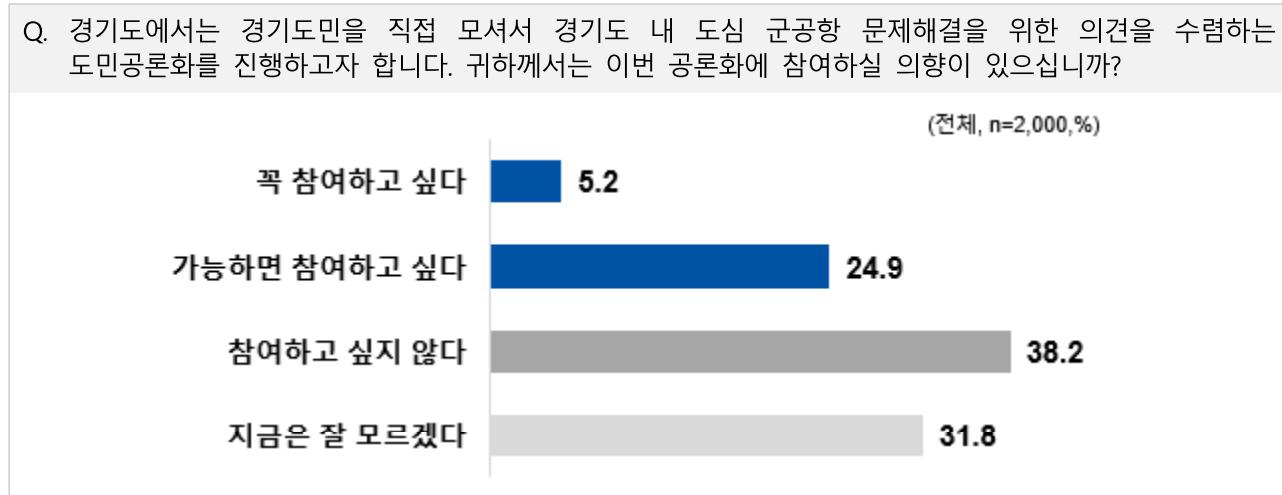
-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탐색을 위해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수	매우+대체로 공감한다	별로+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84.3	14.6	1.2
성별	남성	(999)	84.6	15.0	0.4
	여성	(1001)	83.9	14.1	2.0
연령별	18세~29세	(359)	78.8	20.6	0.6
	30대	(327)	88.7	11.0	0.3
	40대	(399)	84.2	15.0	0.8
	50대	(400)	85.3	14.0	0.8
	60대이상	(515)	84.5	12.6	2.9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84.4	14.3	1.3
	남부임해권	(308)	83.8	15.3	1.0
	동남내륙권	(292)	83.2	15.4	1.4
	동북내륙권	(166)	84.3	13.3	2.4
	서북부권(경의원)	(301)	84.4	15.0	0.7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83.0	16.3	0.7
	남부인접권	(158)	86.7	12.7	0.6
	서부인접권	(236)	84.7	13.6	1.7
군공항 문제 경기도 역할 인식별	적극적 해결 노력	(1382)	88.8	10.5	0.7
	중립적 입장 지원	(426)	80.5	17.4	2.1
	가급적 개입말아야	(158)	58.2	40.5	1.3
	잘 모르겠다	(34)	67.6	23.5	8.8

12. 경기도 공론화 참여의향

- 도심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참여의향은 '꼭 참여하고 싶다'가 5.2%,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다'가 24.9%로 30%가량의 도민이 공론화 참여의향을 보임.



(%)		사례수	꼭 참여하고 싶다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전체		(2,000)	5.2	24.9	38.2	31.8
성별	남성	(999)	6.2	28.0	36.2	29.5
	여성	(1001)	4.2	21.8	40.1	34.0
연령별	18세~29세	(359)	3.3	22.6	31.8	42.3
	30대	(327)	4.0	28.7	30.0	37.3
	40대	(399)	4.0	26.3	36.8	32.8
	50대	(400)	8.3	23.8	38.0	30.0
	60대이상	(515)	5.8	23.9	48.9	21.4
권역별	남부내륙권	(392)	7.1	27.8	32.1	32.9
	남부임해권	(308)	5.8	26.9	33.8	33.4
	동남내륙권	(292)	3.8	25.3	38.4	32.5
	동북내륙권	(166)	1.2	20.5	42.8	35.5
	서북부권(경의원)	(301)	3.7	24.6	42.5	29.2
	북부내륙권(경원권)	(147)	7.5	25.9	40.1	26.5
	남부인접권	(158)	7.6	24.1	34.8	33.5
	서부인접권	(236)	4.7	20.3	45.8	29.2
공론화 추진 공감별	공감	(1685)	5.3	27.8	34.1	32.8
	공감하지않음	(291)	4.5	9.6	58.8	27.1
	잘 모르겠다	(24)	4.2	8.3	70.8	16.7

III 도민여론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현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꼭 필요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10.01~10.12

SQ0.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 입니까?

- 1) 경기도
- 2) 그 외 지역 → **조사중단 (죄송합니다. 본 조사는 경기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SQ1.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현재 경기도 어느 시/군에 살고 계십니까?

- | | | | | |
|---------|--------------------|---------|---------|----------|
| 1) 가평군 | 2) 고양시 | 3) 과천시 | 4) 광명시 | 5) 광주시 |
| 6) 구리시 | 7) 군포시 | 8) 김포시 | 9) 남양주시 | 10) 동두천시 |
| 11) 부천시 | 12) 성남시 | 13) 수원시 | 14) 시흥시 | 15) 안산시 |
| 16) 안성시 | 17) 안양시 | 18) 양주시 | 19) 양평군 | 20) 여주시 |
| 21) 연천군 | 22) 오산시 | 23) 용인시 | 24) 의왕시 | 25) 의정부시 |
| 26) 이천시 | 27) 파주시 | 28) 평택시 | 29) 포천시 | 30) 하남시 |
| 31) 화성시 | 99) 그 외 지역 → 조사 중단 | | | |

SQ2. 성별 **(질문하지 말고 듣고 체크)**

- 1) 남성
- 2) 여성

SQ3.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세

- | | |
|---------------------|---------------|
| 1) 만 17세 이하 → 조사 중단 | 2) 만 18 ~ 29세 |
| 3) 만 30 ~ 39세 | 4) 만 40 ~ 49세 |
| 5) 만 50 ~ 59세 | 6) 만 60세 이상 |

※ 먼저 지역사회 갈등 이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 수준]

Q1.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설치나 건설이 기피되는 대표적인 시설로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화장장, 군 공항, 차량기지 등이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러한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이 경기도 내에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대체로 심각하다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기피시설로 인한 갈등의 원인]

Q2. 앞서 설명드린 쓰레기 매립지나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화장장, 군 공항, 차량기지 등과 같은 기피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주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
-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 부족
- ③ 피해 대비 미흡한 보상수준
- ④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제도 미흡
- ⑤ 환경, 안전, 건강 등 높아진 시민의식
- ⑥ 기타 : _____
- ⑦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거주지 주변 군공항 인식]

Q3. 만일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 <군 공항>이 생긴다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입장에 가장 가깝습니까?

- ① 가급적 수용할 것 같다
- ② 조건에 따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③ 어떠한 조건에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지금부터는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수원 및 성남 군공항 문제 인지도]

Q4.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평택오산 공군기지 등 다수의 군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 수원 및 성남에 소재한 군공항의 경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 및 안전문제 등으로 폐쇄, 이전 요구 등이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들어 본 적 없다
- ②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 ③ 들어본 적이 있으며, 내용도 알고 있다

[군공항 피해 접근 방향]

Q5. 귀하께서는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정확한 피해 내용과 범위를 측정하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 ②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선제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군공항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

Q6. 귀하께서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등 경기도내 군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① 소음 및 진동 피해
- ② 환경 및 생태계 파괴
- ③ 지역발전 저해
- ④ 재산권 침해 및 재산가치 하락
- ⑤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 ⑥ 기타 : _____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도심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Q7. 귀하께서는 도심내 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공감하십니까?

(보기 1,2,3 로테이션)

- ①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
- ② 시설 이전을 통한 문제 해결
- ③ 문제가 되는 시설 폐쇄
- ④ 자세한 내용을 몰라 판단이 어렵다

[주장별 공감도 1]

Q8. 귀하께서는 '군공항 이전은 인프라 조성이나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의 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대체로 공감한다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주장별 공감도 2]

Q9. 귀하께서는 '군공항 이전 논의는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새로운 지역으로 전가할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대체로 공감한다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군공항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Q10. 귀하께서는 도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 로테이션)

- ① 이해관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
- ②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군공항 문제에서 경기도의 역할]

Q11. 귀하께서는 도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3 로테이션)

- 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해결 노력을 해야한다
- ② 지자체간 입장이 다르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해야한다
- ③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 지금부터는 공론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 공감도]

Q12. 귀하께서는 도심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탐색을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란, “여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결합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입니다.

-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대체로 공감한다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⑨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공론화 참여의향]

Q1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직접 모셔서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민 공론화는 10월 29일 토요일, 11월 12일 토요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공론화 장소는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제과학진흥원 1층”입니다.

공론화에 참여해주신 도민들께는 소정의 사례비(2회 참석기준 ##만원)가 지급됩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꼭 참여하고 싶다
- ②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다
- ③ 참여하고 싶지 않다 (☞DQ1로 이동)
- ④ 지금은 잘 모르겠다

[정보제공 동의]

Q14. 도민참여단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총 100명이 선정이 되는데요, 도민참여단으로 선정될 경우,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성함 및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도민참여단 선정 및 공론화 안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개인정보는 도민참여단 선정 및 구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정보 보유 기간은 6개월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① 예(제공 동의)
- ② 아니오(동의하지 않음) (☞DQ1로 이동)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림/어업
- 2) 자영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4) 생산/기능/노무직
- 5) 사무/관리/전문직
- 6) 주부 (가사에만 종사)
- 7) 학생
- 8) 무직/퇴직/은퇴 등
- 9) (읽지 말 것) 거절/무응답

DQ2.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3) 별로 신뢰할 수 없다
- 4)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9) (읽지 말 것) 잘 모르겠다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4장

도면참여단 구성 및 관리

I 도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1. 도민참여단 구성

- 도민참여단 구성 방안은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음. 도민참여단은 여론조사⁹⁾에 참여한 도민 가운데 공론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4개 권역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라 총 100명(예비 10명 포함)을 선정하였음.

< 도민참여단 100명 구성 방안¹⁰⁾ >

권역(명)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경부권	6	5	6	7	8	32
동부권	1	2	2	2	3	10
북부권	4	4	5	5	7	25
서해안권	6	6	7	6	8	33
합계	17	17	20	20	26	100

- 경부권 :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안성
- 동부권 : 하남, 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
- 북부권 :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구리, 남양주
- 서해안권 : 김포,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오산, 시흥, 화성

- 도민참여단 선정은 10월 15일부터 진행했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유선 접촉을 시도하여 공론화 참여의향을 다시 확인한 후, 최종 참여의향을 밝힌 경우에만 도민참여단으로 확정하였음. 이후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특성을 가진 도민참여단으로 대체하였음.

9) 2022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파악함.

10) 10월 12일 3차 추진단 회의 후, 권역 구분에 대한 의견을 10월 13일에 취합하여 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등 총 4개 권역으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함.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선정 안내>

[접근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뢰로 전화를 드리는 엠브레인퍼블릭의 면접원 OOO입니다.

OOO님 맞으신가요?

지난번 경기도민 여론조사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으로 선정이 되셨기에 전화드립니다.

[도민참여단 활동 의향 재확인]

Q1. 선생님께서는 10월 29일 토요일과 11월 12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해주시는 도민들께는 소정의 사례비(2회 참석 기준 ##만원)가 지급됩니다.

- 1) 예 (참석)
- 2) 아니오 (참석불가)

[구체적 활동 내용 안내]

Q2.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참여단 여러분은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 등의 공론화 숙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심사숙고한 후,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사전학습 안내 등을 위한 연락처 재확인]

Q3. 향후 선생님의 휴대폰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하고 있는 이 번호로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 1) 예
- 2) 아니오 (핸드폰 번호 재확인 : _____)

2. 도민참여단 관리

-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별도의 웹페이지 (<https://survey.panel.co.kr/ggd2022>)를 구축하여, 숙의토론회 진행 전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학습을 한 후에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음.
- 도민참여단으로 추출/선정된 도민들만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유하였으며, '공론화 개요', '공지사항', '학습 및 자료실' 등을 기본 메뉴로 구성하였음.



- 학습 및 자료실에는 전문가 워크숍 영상과 워크숍 발제 자료,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 등을 제공하여 도민참여단이 사전에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도민참여단으로 선정이 된 도민들의 공론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 숙의토론회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 독려/안내(문자)>

[2022 경기도공론화 : 웹페이지 및 토론회 장소 안내]

도민참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경기도공론화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와 관련한 공지사항, 공론화 개요, 학습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 주소를 전달드립니다. 웹페이지 접속 후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s://survey.panel.co.kr/ggd2022>
토론회 참석 전 학습하셔야 할 자료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차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2022년 10월 29일 낮 12:30 ~ 18:00(오후 6시) 참석자 등록은 1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장소>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오시는길> https://www.gbsa.or.kr/pages/contact_gbsa.do

* 준비물 : 신분증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 : 사전학습 안내]

도민참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론회 참석 전까지 도민참여단 전용 웹페이지의 '학습 및 자료실'에서 1차 숙의토론회 발제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전용 웹페이지> <https://survey.panel.co.kr/ggd2022>

원활한 숙의토론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 : 리마인드 안내]

도민참여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진행되는 1차 토론회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진행됩니다.

<일시> 2022년 10월 29일 낮 12:30 ~ 18:00(오후 6시) 참석자 등록은 12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장소>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오시는길> https://www.gbsa.or.kr/pages/contact_gbsa.do

* 준비물 : 신분증(이번 공론화는 경기도민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토론회 참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3. 도민참여단 사전 숙의 자료

1차 전문가 워크숍 영상



2022년 공론화 제 1차 전문가 워크숍
군 공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이슈

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이슈

01 국내 군공항 현황

-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16개의 육군공항, 8개 공군공항, 2개 해군공항 등 총 30여 개의 공성이 운영 중이며 7개의 공항사업이 추진 중
- 미증 경기도에는 육군공항 9개소, 공군공항 2개소, 해군공항 1개소 등이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의되는 항공작전기지 중 군용 전술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시설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써 「군공항」(관련법상 정의)
 - 경기 4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2곳, 충청 2곳, 강원 2곳, 광주·전라 2곳이며,
 - 인구 100만 이상 거주 대도시에 4개(부산, 대구, 광주, 수원),
 - 인구 80만 이상 도시에 2개(성남, 청주) 기지 위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기록부터 너울까지

1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2022 경기도 공론화 워크숍 전문가 발표

군 공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이슈

2022.09. 27.

홍수정 행정과 갈등연구소 대표

01 국내 군공항 현황

-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16개의 육군공항, 8개 공군공항, 2개 해군공항 등 총 30여 개의 공성이 운영 중이며 7개의 공항사업이 추진 중
- 미증 경기도에는 육군공항 9개소, 공군공항 2개소, 해군공항 1개소 등이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의되는 항공작전기지 중 군용 전술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시설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써 「군공항」(관련법상 정의)
 - 경기 4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2곳, 충청 2곳, 강원 2곳, 광주·전라 2곳이며,
 - 인구 100만 이상 거주 대도시에 4개(부산, 대구, 광주, 수원),
 - 인구 80만 이상 도시에 2개(성남, 청주) 기지 위치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기록부터 너울까지

1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

도심 내 군공항 주요 쟁점

전 형 준 연구위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아시아 평화 분쟁 연구센터)

군공항 이전 논의의 배경

- 2002년 5월 서울지방법원은 김포국제공항 소음 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공항공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최초로 인정하였음 (2002기합645)
- 이 판결은 2005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05다49566), 주목할 점은 85 웨를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볼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임
-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최초의 소송은 군산 미 공군 기지를 상대로 진행되었음
- 2004년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군산 미 공군 기지 인근주민 2,0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 ~ 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878명에게 3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함 (2002기합33132)
- 「군산 비행장에 민간항공이 취항한 후 전입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알았거나 실수로 모르고 설치했다고 보이므로 손해액의 30%를 줘야 배상하라」고 결정함

2차 전문가 워크숍 영상

2022년 경기도 공론화 제2차 전문가워크숍

이강원 한국사회 갈등해소센터 소장

LIVE 2022년 공론화 사업 제2차 전문가워크숍 개최계획

2022년 경기도 공론화
제2차 전문가워크숍

경기도

2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2022년 경기도 공론화 사업
제2차 전문가워크숍(2022.10.14(금))

대구공항(K-2) 이전사업 시사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

도심공항의 문제점

전국최대의 소음피해 우발

피해면적
49.1km²
대구시 면적의
약 5.6%

피해규모
24만 명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소음피해 노출
39개 학교
11년 해서초 이전

K-2 운용기준(F15K) 특성상 경주의 3.4배, 수원의 6.2배의 추락으로 소음피해 전국최대
※ 소음피해예상액 : 4,275억 원(2010~2019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걸림돌

고도제한
114.33 km²
대구시 면적의
약 13%

인접지역 등
도시발전 걸림돌



2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

도심내 군 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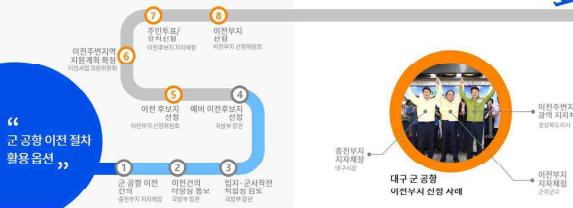
군 공항 이전 절차 활용 옵션

한국국방연구원 우정범

2022 경기도 공론화 2차 도민속의 /'22.11.12(토)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각적**이며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간 합의 정신



도심내 군 공항 이전 문제의 대안적 접근

- 수원군공항이전 점진적 폐쇄를 중심으로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눈

· 공군기지 인근 주민의 고충 해소

· 이전 후보 지역 주민의 반발 고려

· 국익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하다.

7조원 안팎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감내할 정도로 안보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검토 (군공항외 국제공항건설을 통한 도시발전)

2022. 11. 12

(주) 유신 부사장 허태성

목차

1. 발생 가능 수요 -----	3
2. 공항 건설 동향 -----	15
3. 검의 내용 -----	21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숙의토론회 진행

I 숙의 설계

- 2022 경기도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공론화가 아니라, 경기도 내 군공항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사전 공론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공론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풍 공론화로 진행하였으며,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주요 문제점과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질의응답, 도민참여단의 상호토의를 통해 숙의적 의견을 모으고자 하였음.
- 이번 공론화를 통해 지자체 간 갈등 및 이견이 있는 군공항 문제 논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향후 공론의 장 연계 등 후속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2022 경기도공론화 숙의토론회 >

□ 대주제

“경기도민에게 듣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 어떻게 할까요?”

- 주요쟁점과 고려사항 -

□ 소주제

【1】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1차 숙의)

Q) 도심 내 군공항 입지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소음·진동 피해 및 재산권 제약 등 주민피해
- 군공항 관련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 브레인스토밍

【2】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2차 숙의)

Q)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지) 및 정부,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심 내 군공항 피해 및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탐색의 자리를 마련함(대안 탐색, 중앙정부, 경기도 역할 등)

II 퍼실리레이터 선발 및 교육

1. 퍼실리레이터 기본 역할

- 도민참여단 맞이하기
- 참여자가 목적하는 바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중립성, 자율성, 균형성)
- 분임별 토의 안내와 진행
: 개인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다른 구성원의 의견 존중과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증진
- 군공항 문제 관련 중립성 유지

2. 퍼실리레이터 선발

- 「서울시 공론화」 포함 대규모 공론화 사업 유경험자로 선발
: 경기도공론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론화 및 인천시 공론화 참여 인력을 우선 선발함.
: 특히 2020년 이전 대규모 오프라인 숙의 유경험자, 갈등적 이슈, 기피시설 관련 공론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퍼실리레이터를 선발함.
- 선발 인원 : 12명(분임 당 9~10명의 참여단→11개 분임 운영+관리자 1명)

3. 퍼실리레이터 교육

- 온라인 교육 : 10월 26일(수) 공론화 의제 관련 사전 교육(zoom)
- 현장 교육 : 10월 29일(토) 및 11월 12일(토) 오전 11:00~12:00
 - (사전 설문 조사) 도민참여단 의견 확인
 - (1차) 학습/토의 : 도심 내 군공항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의(브레인스토밍)
 - (2차) OT : 1차 도민 숙의 주요결과 환기 및 2차 숙의 목적 안내
 - (2차) 학습 : 전문가 발표 3인(문제해결 옵션) 및 도민참여단 질의응답
 - (2차) 토의 :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 옵션(선택지) 및 경기도/정부 역할
 - (사후 설문 조사) 도민참여단 의견 변화 여부 및 공론화 만족도 등

< 숙의토론회 퍼실리레이터 교육자료(예시) >

- 참여자 등록 및 접수 13:00~13:30(30')
 - ▶ 분임 맞이(조 확인 등), 사전 설문 조사 참여 안내 및 자료집 사전학습
- 개회식 13:30~13:45(15')
- 인사 및 기대 나누기 13:45~13:55(10')
 - ▶ 분임별 간단한 소개와 기대 나누기(10')
 - ▶ 기대공유 추천 : 분임별 기대 발표 희망자 취합
- 소개 및 기대공유 13:55~14:00(5')
- 주제발표 14:00~14:40(40')
 - 분임토의1 14:40~15:15(35) 대표질문 만들기 : 포스트잇
 - 1) 새로 알게된 점 나누기(10')
 - 2) 추가로 알고 싶은 것(20')
 - 3) 대표 질문 선정(5') ▶ 질문선정 : 분석 센터에서 취합 후 선정
- 휴식 15:15~15:30(15') 질문주차장 게시 및 투표(분임별 게시판)
- 질의응답 15:30~16:10(40') 6-7개 분임 질문 + 유튜브 질문(있을 경우 2개)
- 분임토의2 16:10~17:10(60')
 - 1) 주요 문제점(25') : 전지에 내용 정리하여 기록
 - 2) 개선 방향(25') : 키워드별 그룹핑
 - 3) 소감 및 평가(10') : A4 작성(조 표기, 알기 쉽게)
- 분임토의 결과 공유 17:10~17:25(15') 본인 의견 자제, 퍼실 키워드 마커
- 1차 숙의 소감 및 평가 공유 17:25~17:30(5')
- 향후 일정 소개 및 폐회 : 2차 숙의토론회 안내(5')

III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1. 1차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 10월 29일 1차 숙의토론회는 전형준 연구위원의 발제와 우정범 연구원의 논찬, 질의응답, 도민참여단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됨.
- 1차 숙의토론회 개회 전, 사전 설문 조사를 진행함.

부 터	시 간 까 지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고
13:00	13: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단 착석 및 사전 설문 조사(모바일 조사) • 자료집 확인 	진행자
13:30	13:4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국민의례 • 공론화추진단장 환영사 • 토론회 일정 안내 	
13:45	14:0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참여단 인사 및 기대 나누기 	
14:00	14:4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현황과 대안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연구위원) • 논찬 :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14:40	15:15	35	[1차 분임토의] 대표 질문 도출	*질문선정 과정에서 숙의
15:15	15:30	15	휴식	
15:30	16:10	40	<p>[질의응답] 분임대표 질문 : 참여단과 발표/논찬자 질의응답</p>	분임/유튜브 질문
16:10	17:10	60	[2차 분임토의] 군공항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의	*개선방향은 브레이인 스토밍 차원
17:10	17:2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토의결과 공유 - 분임 내 토의결과를 참여단이 각각 발표 	
17:25	17:3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숙의토론회 소감 및 평가 	
17:35	17:4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일정 안내 및 폐회 	

2. 2차 숙의토론회 프로그램

- 11월 12일 2차 숙의토론회는 우정범 연구원, 정육식 대표, 허태성 부대표의 발제, 질의응답, 도민참여단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됨.
- 2차 숙의토론회 종료 후, 사후 설문 조사를 진행함.

부 터	시 간 까 지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고
13:00	13:20	20	· 도민참여단 착석 및 사전학습(자료집 확인)	
13:20	13:30	10	· 개회 및 1차 도민 숙의 결과 환기 · 토론회 일정 안내	
13:30	13:45	15	· 도민참여단 인사 및 2차 숙의 기대 나누기	
13:45	14:25	40	· 주제발표 : 군공항 문제해결 다양한 옵션 검토 - 군 공항 이전절차 활용 옵션(우정범 연구원) -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대안적 접근(정육식 대표) -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검토(허태성 부사장)	
14:25	15:00	35	· [1차 분임토의] 대표 질문 도출	
15:00	15:15	15	· 휴식	
15:15	15:55	40	· [질의응답] 분임대표 질문 : 참여단과 주제발표자 질의응답	분임/유튜브 질문
15:55	16:55	60	· [2차 분임토의] 군공항 문제 합리적 해결 고려사항 - 대안(옵션)과 경기도-중앙정부 역할 - 2차 숙의 평가 및 소감 나누기	
16:55	17:10	15	· 분임토의결과 공유 - 분임 내 토의결과를 참여단이 각각 발표	
17:10	17:20	10	· 사후 설문 조사 및 참여단 만족도 조사(모바일 조사)	
17:20	17:30	10	· 2022 경기도공론화 소감 공유 · 공론화추진단장 감사 말씀 · 폐회 및 귀가	

IV 숙의토론회 질의응답

1. 1차 숙의토론회

<전문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전형준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우정범 연구원

Q) 1조 박민수

안녕하세요. 1조 의왕시에서 온 박민수입니다. 먼저 군공항 지역 주민 피해, 소음으로 인해서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리고요. 군 이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최소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먼저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A) 전형준 연구위원

- 오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이 숙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피해가 논의되고 있고 제가 앞서 이제 소음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음과 이제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피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가 소음이 가장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착륙하는 그런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밤중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이 조금 더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밤중은 그러다 보니까 야간훈련을 최소화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없는 그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로 외국에 소개된 것 중에 수능 시험 볼 때 영어 듣기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 항공에 비행기가 안 날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일절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제 합의가 돼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이제 군공항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밤중에 일하므로 낮 동안에는 자야 하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내가 낮에 잠을 제대로 못 봐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민원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좀 이따 답변해주시겠지만, 개인의 사정까지 고려해 주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소음을 좀 줄이는 방법 아니면은 그 훈련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 또 때때로는 그 정비를 그러니까 비행을 처음 시작할 때 소음이 또 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을 온종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시간에 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군에서 조금 고민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군과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서로 논의하는 건데 군 같은 경우에 항공 안전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분과 관점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A) 우정범 연구원

- 먼저 피해 보상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군 소음 보상법이 있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을 웨클이라는 단위로 측정을 해서 95웨클 이상에서는 월 6만원 그리고 90에서 95웨클 사이에서는 월 4만 5천원 그리고 85에서 90웨클 사이는 3만원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클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서 소음 기를 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심 내 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85웨클을 기준으로 삼았고 일반 중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80웨클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보상해야 되는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민간공항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데 민간공항은 공항의 운영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군 공항은 수익이 없다 보니까 전액 다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공항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방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전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피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피해가 굉장히 괴롭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전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수준에서 야간 훈련의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비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군 국방부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비행장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지만 특히 갈등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물론 공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공군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그리고 공군이라든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법이라든가 보상이나 세금 나가는 문제는 또 기재부와 또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틀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 3조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3조 경기도 화성 봉담에서 온 안장근입니다. 저희 질문은 군공항 관련된 제반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오랜기간 동안 지속돼 왔는데, 왜 이렇게 도시가, 도심이 인구 과밀화가 되는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돼 왔는지 궁금합니다.

A) 전형준 연구위원

- 인구 과밀화 그러니까 기존 공항이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지역에 건설이 됐는데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전입을 해가는 걸 왜 내버려 둬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의 확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들이 인구가 도시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그러면서 도시가 커졌는데 커질 때 이게 좀 방향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니까 많이 커지는 쪽의 방향이 있어서 그 커지는 쪽의 방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공항 쪽까지도 포함을 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수원, 대구, 광주하고 비슷한 전략 항공기지라고 불리우는 곳들이 17곳인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돼 버린 곳이 대표적인 게 수원, 광주, 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곳은 사실 상대적으로 도시의 팽창 방향이 좀 덜했거나 아니면 팽창이 좀 많이 안 일어났거나 그렇게 돼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전의 요구가 있겠지만 수원, 광주, 대구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 의견 조율을 할 때는 이게 이제 과거 화성시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그거를 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사무가 맞느냐 이것이 이제 수원시에 지자체 사무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판단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현재에서는 이거는 국가사무는 맞다라고 한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 자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작전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하는 역할이고 반면에 이거를 국방부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부지를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전 부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라는 국방부와 기재부로 대표되는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로 대비되는 기존 부지 종전 부지하고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A) 우정범 연구원

- 먼저 첫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군공항 관련 제반 문제들이 왜 방치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군공항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음에 대한 구역이나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안전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이 돼 있지만 그 지역 내는 고도 제한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아까 이제 보상 군소음보상법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음보상법에는 1989년 1월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상금의 30%를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전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막았지만 그래도 협의를 통해서 막았지만 그래도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1년 1월 이후의 전입자는 또 50%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이제 공론화가 된 상태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송을 해야지 보상 배상을 받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한 경우에는 그걸 다 보상하는 것이 또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50% 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서 질문이랑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하고 전입한 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군공항을 이전하고 싶은 지자체가 이렇게 이전 신청을 해서 국방부랑 이렇게 잘 협의가 되면 나중에 먼저 국방부를 위해서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고 나중에 그걸 다 지어줘서 내가 이거를 다 기부를 할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지금 있는 땅을 나에게 달라 이런 방식이 이제 기부 대 양여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이전 건의를 했을 때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자는 이제 수원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주체적인 주체권이 수원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생겼을 때 주도권은 이제 수원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의 절차가 이전 건의를 하고 국방부가 이전 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라는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입지의 적합성이라든가 이제 작전의 적합성을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렇게 선별을 한 다음에 관련 후보지, 관련 지자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후보지 선정을 하는 게 이전 부지 선정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 부지 지자체 그리고 이전 부지 지자체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기재부, 국토부 이 외에 관련된 중앙부처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 내에서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어떤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이전 부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누구 하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걸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Q) 10조 남진철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남진철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원에 거주하면서 계속 수원 군공항이 이전이 확정됐다는 국회 당선자들의 플래카드까지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론화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인지 갈 데가 어디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 무효가 돼서 다시 또 처음부터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이 공론화를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월 어떻게 얻을 건가를 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전형준 연구위원

-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전공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갈등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 보도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도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기자들을 저는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취재원들을 인터뷰를 하지만 저는 기자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 중에서 공유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지만 인간인지라 오류가 참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에요. 아주 낮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언론 보도가 많이 틀리는 걸 보고서 실망한 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 이전 확정됐다는 플래카드도 봤는데 현 주소가 어떻게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을 하는 것이 이제 담판을 짓는 방식으로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담판 방식으로 이건 안되니 이거는 법을 만

들어서 절차를 쭉 한번 구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고 본다면 다음번 숙의 시간에 여러분께서 받으실 그 절차가 쭉 있을 거예요. 한 10에서 15단계 정도를 거치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자료를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 10에서 15단계 정도로 구성된 절차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수원 군공항은 한 2단계 정도입니다. 앞에서. 뒤에서가 아니에요. 앞에서 2단계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첫 삽을 떴으니 그러니까 1단계가 통과됐으니 이전이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법상으로 봤을 때 10에서 15단계가 다 끝났으니 확정이다까지 얘기가 가려면 너무나 먼 얘기고 그 마지막 단계 쪽에는 이전을 받겠다라는 쪽의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전받겠습니다.” 요 단계가 거의 맨 끝에 단계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대구가 대구는 거기까지 갔다. 제가 이제 오늘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게 대구는 쪽 많잖아요. 그게 다 그 단계들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대구는 신청까지도 한 거예요. 지자체장들이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런 신청을 받겠다까지 간 게 이제 대구고 수원은 앞에서 한 2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 우정법 연구원

- 군공항 이전 확정 가짜 뉴스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총 세 가지 단계로 이전 부지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예비 이전 후보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후보지라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 선정 그렇게 되면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국방부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군공항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예비 이전 후보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 이전 후보지 중에서 그러면 예비 이전 후보지 지자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능할지 지자체에서는 이게 수용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제 이전 후보지라는 것을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 지역에 각각의 어떤 지원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해줄지에 대해서 다 구체화를 해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주민들이 그 확정된 내용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나중에 이전 부지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일 첫 단계 예비 이전 후보지가 이제 선정된 단계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두 번째 10단계가 있다면 앞에서 두 번째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원 군공항이 있어야 되냐 사실 제가 이 대답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목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럼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 기지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공군 기지의 핵심 키워드는 혹시 아시나요. 24시간 무중단 작전입니다. 지금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공군 기지들이 우리 공군은 그물망처럼 전국을 다 덮고 영공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중단이어야 됩니다. 항상 중단 없이 그 무중단이라는 얘기는 다른 기지가 대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0시 20분까지 북한 군용기 10대가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남하했을 때도 우리 공군은 긴급 출격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무중단 작전이 없다면 대응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폐쇄에 대한 주장이 201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 인수위인가요 거기에 정책으로 수원 군공항 폐쇄가 주장이 돼서 국방부가 대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응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기지는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최전방 기지로 북한 전방 비행기지에서 기습 공격으로 기습 공격이 진행됐을 때 5분 이내에 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북으로 격퇴를 한 다음에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북 도서 국지 도발 시 초동 대응 및 전시에 전개되는 미 증원 전력 수용 등 연합 항공전력 운영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한미 공동 작전 기지입니다. 실제로 수원 기지 내에는 21.2%의 면적을 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금방 넘어옵니다. 그래서 적의 기습 공격이 단 몇 분 내의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수원 기지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기지 폐쇄는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가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시에 이런 기능을 그럼 줄이면 되지 않나 요즘에 기종도 좋아지니까라는 질문을 좀 전에 어떤 분께서 하셨는데 기능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영공 방어를 조금 방어하겠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기능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옮겨야 됩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 5조 한규현

안녕하세요. 경기 오산에서 온 5조 발표자 한규현입니다. 군공항을 화성과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 말고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10비행단을 평택이나 오산의 작근단이나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여쭙고 싶습니다.

A) 전형준 연구위원

-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접근하는 거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통폐합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기지들을 통폐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사회적인 측면 외에

도 작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훨씬 더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우정법 연구원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쪽으로도 갔다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게 목표로 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런 좋은 방법. 좋은 길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지역을 대안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수원 군공항 이전인데 아시다시피 화성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부가 입지랑 작전 적합성을 검토한 부분이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이렇게 갈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 인근에 있는 다른 도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을 한다면 아까 했던 입지랑 작전 적합성을 새롭게 검토는 해보겠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차 숙의토론회

<전문가> 한국국방연구원 우정범 연구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주)유신 허태성 부사장

Q) 9조 지원열

안녕하십니까, 광명에서 온 지원열이라고 합니다. 우정범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가 3단계로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지금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A) 우정범 연구원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전 부지로 선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비가 다 마련돼 있느냐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발표된 것에 대한 취소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번 국감에서 새로운 지자체 만약에 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인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지원 사업이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음 피해라든가 재산권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있는 피해는 이제 군공항과 지역 사회가 바로 불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전할 경우에는 많은 부지를 주변에 사서 소음이 심한 지역 그리고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다 매입을 해서 울타리가 그 밖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Q) 7조 김효정

우정범 연구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질문은 조금 포괄적이라서 답변 시간이 좀 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지난번 숙의 때 저희 조에서 수원 군공항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정범 연구원님께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물까지 벌컥벌컥 들이키면서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는 그 대안으로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특별법의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정욱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참신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폐쇄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정범 연구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정육식 소장님의 토론도 부탁드립니다.

A) 우정범 연구원

- 먼저 폐쇄가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전투기를 미사일이나 군사용 드론, ULB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라든가 폐쇄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가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통폐합도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인근 기지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투기를 미사일이나 군사용 드론으로 ULB로 대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전투기는 항공 우세를 점하고 해상 및 지상부대에 협동하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북쪽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날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사일로 요격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까 여기 보면 마하 0.8 ULB가 나왔는데 마하 1 넘는 비행체가 왔을 때 이거를 따라가서 식별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하 1.5인 물론 노후화된 전투기라고 얘기하지만 마하 1.5인 전투기가 가서 식별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이제 조치를 유도 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요격을 해야 되겠죠. 전투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무기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그러면 줄일 수는 있다. 대수를 줄여서 근데 군공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활주로는 10대가 있든 1대가 있든 활주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군공항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지원 시설도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전투기 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걸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폐합이 가능한가? 통폐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분과 초를 다투는 영공 방어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생존성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 전투 비행단이 있는 기지가 지금 수원과 오산이 있는데 만약에 수원이 파괴가 되었으면 오산 하나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폐합을 해서 오산으로 하나만 있다. 그러면 오산이 파괴되면 어떻게 하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 공용이라든가 아까 슬롯이라든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통폐합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임무와 기능은 그대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약에 인근에 있는 비행단의 활주로도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전력이 다 넘어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찬성할 수 있는 주민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더 어려운 갈등을 만드는 것은 좀 이제 사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민간공항과는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다 다르니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군공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항은 진짜 조금만, 시설이 여객터미널만 사실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군공항은 다양한 시설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북한과 지금 현재 위협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의 제가 잠시만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로마의 전략가 베제테우스는 이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화를 원한다고 그 무기를 줄이고 저희가 준비를 하지 말자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및 현재 위협 상황에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대칭 전력을 좀 줄이고 거기에 지원을 좀 덜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전투 준비 태세를 낮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 정육식 대표

- 제가 지금 한국의 굉장히 강력해진 미사일 전력의 전투기의 임무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한 400대 안팎 정도 되는데 f4, f5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한 전투기 한 50대 정도 감축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금 수원 전투 비행장에 아마 한 30대 내지 4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도태될 전투기들의 도태 시기를 좀 앞당겨서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완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미사일이 그 임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군사적인 상식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 갖고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이 미사일 전력을 극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이 열세에 있잖아요. 근데 객네들은 두 군데의 대규모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북한보다 압도적인 공군력이 위에 있는 우리가 16개의 공군기지 가운데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그게 국가 안보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볼 때 제가 뭐 그 제가 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걸 이미 상쇄할 만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군사적인 능력은 이미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은 일종의 중복 투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투자, 과잉투자에 해당되는 왜냐하면 다른 전력이 이미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전력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이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불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어떤 비용을 치러가면서까지 이전을 추진해야 할 안보적인 실익은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건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군에 대한 문민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주체는 국민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있는 정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2조 최성인

제가 주식회사 유신의 허 부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현재 민간공항이 한계에 도달해서 포화 상태라는 설명으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포화 상태인지는 현재 제가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군공항을 일부 활용을 하여서 민간공항의 현재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A) 허태성 부사장

- 그 포화 상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아니고 현재는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되고 2030년경에 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항의 검토 시기가 언제냐면 60%에서 70%의 가동률이 발생할 때 새로운 공항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나 김포는 이제 거의 한계에 와 있고 인천공항은 거의 한 60%의 가동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 경이 되면은 그 가동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재부터 새로운 공항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야 된다 2030년에 포화가 되면은 그때 공항을 검토해서는 이미 공항 건설 시기가 한 7, 8년 되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새로운 공항을 검토할 새로운 시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공항을 건설하는데 공항을 하나 건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지가 약 200만 평 가까운 공항 부지가 필요한데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또 200만평 부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이 수원시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군 비행장들 두 개나 있는데 도내에 그런 공항들이 또 움직여진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부지가 또 200만 평입니다. 그러면 그 도내에서 400만 평이나 되는 그 부지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옮길 바에야 새로운 공항에 민간공항도 들어가고 군공항도 들어가서 통합공항으로 만들고 가능 유지는 그 활주로가 저 이 양쪽에 그 북쪽에 아까 그 대구통합공항에서 쓰듯이 군공항 전용 그 다음에 민간공항 전용 이렇게 같이 복합공항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Q) 8조 조경희

정육식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의 공항 큰 대형 공항들 두 곳이 폐쇄됐다. 그리고 농장화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면 폐쇄된 두 곳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저희 안보와 관계된 곳만큼의 거리는 아닌 듯한데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농장화됐다는 근거 자료나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농장화됐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전술적으로 확장과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의 기사가 (최근에) 좀 있어서 그걸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무인기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우정범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찰과 공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무인기가 과연 우리 안보에 어느 정도 공대공에 해당 되는 전술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정육식 대표

- 북한이 대규모 공군기지를 두 곳을 채소 농장을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발표에도 있고 미국의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그 위치 중 하나가 연실인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확히 지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는 평안남도 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하나는 함경남도 쪽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북쪽까지는 아니고 이제 북한의 중부 정도 중남부 정도에 해당되는 위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지명은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 1개념으로 예를 들면 미사일이 전투기 임무를 대응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건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기가 유인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f4나 f5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f35라든지 f15라든지 f16이라든지 또 지금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 kf21 이런 부분들은 f4나 f5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수원과 같은 근접 거리에 공군기지가 있지 않더라도 좀 후방에 있더라도 작전 소요 시간은 신형 전투기의 속도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작전 반경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f4, f5에 비해서 작전 반경도 훨씬 더 넓어지고 있고 탑재하는 무기의 정밀도와 사정거리도 훨씬 더 강해지고 있죠. 이런 어떤 종합적인 능력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f4와 f5를 도태 시기를 앞당겨서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해서 어떤 한국의 전반적인 전력이 저하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지금 엄청나게 군비 증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지

고 있다. 별로 그런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언론을 보면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니까 무기가 꼭 다다익선이냐 하는 것이죠.

Q) 6조 우기희

안녕하십니까, 허태성 부사장님께 여쭙니다. 제가 수원 주민으로서 수원 군공항 이전이 힘들다는 얘기가 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서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합쳐진다면 문제점이 있을까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이 생긴다면 아마 주민들 반대도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A) 허태성 부사장

- 현재 공항 위치에서 민간공항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오천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같은 규모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수원 기지에서 그만한 규모를 만들어낼 활주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이 가능하다면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기지 안에서 민간공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수요가 큽니다. 다른 지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 말단 부위에 군공항의 활주로 말단 부위에 여객터미널 조그맣게 한 이만 평 정도의 그 시설물을 만들어서 공항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고 천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천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활주로 한 번을 더 놓으려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덕도 공항으로 가듯이 그 기존 공항에서 천만 명 이상의 아니면 지금 같이 오천만 명 이상의 수용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그에 따르는 소음 피해는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원에 민간공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반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Q) 사회자

유튜브에 특별한 질문은 없으시고요. 유튜브 질문을 보니까 갈등을 잘 조정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이 건설됐으면 좋겠네요. 라는 그런 제안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답변자분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갈등 해소 관점에서 군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를 3분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A) 우정법 연구원

- 군공항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셨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군공항 이전 절차 특별법에 따른 이전 절차는 사회적으로 합의도 있고 문제를 다각적이며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니가 경기도 공무원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웃음) 근데 아까 8조 질문하신 분은 저희 연구원분 같습니다. 그래서 f5 도태가 빨리 되느냐 이거를 사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수원에 왜 f5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수원에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들은 워밍업 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전방에서 당장에 출격하기 위해서는 f5가 가장 빠르게 적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제 수원에 만약에 또 민간(공항)을 추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민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 정육식 대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양상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북한의 전투기가 북쪽 지역에서 떠 갖고 이쪽으로 날아오면 한참 날아온 다음에 알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뜨자마자 압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 출격에 나서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연합 훈련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고 주로 즉각적으로 출격하는 게 f35, f15, f16 이런 첨단 전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탐지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해졌고 또 전투기 자체가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고 하는 근접 지역에 공군기지를 유지해야 될 군사적 필요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또 지역 공항에 지금 뭐 이렇게 텅텅 빈 공간들도 많은데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드는 게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이제 지역은 소멸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 균등 발전이라는 관점에 수도권에 또 대규모의 공항을 짓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이 필요하고 또 끝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제가 다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이 한 30~40대 한 40대 정도의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40대의 전투기가 연간 20회 정도의 비행 훈련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수원 군공항에서 내

뿜는 탄소량이 탄소량을 상쇄하려면 30년 이상 소나무를 한 150만 그루에서 200만 그루 정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폐쇄하고 민간용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탄소 제로 이건 국가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후위기 대처 미래 세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성세대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도 같이 녹여내서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A) 허태성 부사장

- 저는 이 민간공항만 설계를 한 40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항 그러니까 공항 하나가 군공항이나 민간공항이 다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공항과 기하 구조가 틀립니다. 그리고 활주로 길이도 틀리고 그 현재 만약에 수원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활주로 길이가 한 삼천오백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 군공항 기지는 이천칠백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항들은 어떻게 짓냐면 활주로 말단부에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야산으로 떨어졌다. 공항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 공항을 건설하는 목적의 주요한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지을 때는 요즘은, 활주로 말단부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이 활주로 말단에서 500m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 끝에서부터 약 2km 정도는 안전 구역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음 문제도 그렇지만 안전성 확보. 민간 활주로가 지금 마의 5분 마의 8분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착륙 8분 이내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 기존 공항 기지에서 1km에서 2km 정도 추가적으로 공항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아마 민간공항 들어오는 것도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활주로 폭도 틀리고 지금 떨어지는 이격 거리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폐쇄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건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멸되는 그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손실 비용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옮기는 게 좋고 공항이 만약에 수도권 인구가 2600만이나 되는데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공항이 2개나 3개 정도의 민간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수도권 권역에서 처리를 하지 그 부분이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공항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 가고 다른 대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수요는 전부 이 수도권 주민들의 손실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시기에 현재 시기에 공항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V 분임토의 내용 정리

1. 1차 숙의토론회

1) 1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분임	분임별 대표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공항 피해 접근 방향,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각종 선제적 조치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수준 측정방법과 피해 인정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제반 문제를 왜 오랜 기간 국가 및 정부기관에서 방치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성시 또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국방전략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여주, 양평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공항 이전 이외에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지자체 간 의견조율 시, 누가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는지요? (각각 떠넘기기는 없는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군공항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선정 절차 관련 타당성·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에 대한 세분화 된 구분이 있는지 알고 싶고, 피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군공항 이전의 현재 상황과 공론화 배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 당사자들 주관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군공항(현재 사이즈 기준) 개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2) 2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 ①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
피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문제(소음, 난청, 진동, 빛), 질병 입증절차, 교육권 침해 보상비용의 적절성 (군공항과 민간공항 배상기준 상이) 환경 문제 (폐유, 분진, 오폐수 처리) 교통문제 (군부대 돌아가야 함) 사고의 위험성 (24시간 무중단 훈련, F5 노후, 탄약고 자연발화, 미사일 낙탄, 전쟁위험) 비선호 시설 (지역발전 저해, 집값 하락, 재산권 행사제한) 이전 후 경기침체 문제
절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대응 기구 필요 (국방부와 정부/지자체의 행정적 협의기구) 행정절차 기준, 소통의 문제 (주민 의견수렴 부족, 도민 갈등 유발, 문제점 공유의 장 필요) 이전 절차 및 추진 어려움 매뉴얼화 된 보상체계 수립
다양한 선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공항 유치
정부/ 지자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의 문제 (국가안보 필요성 인식 교육) 홍보 노력 부족 (공익광고, 대중 채널, 경제성, 지역 이익, 정확한 소음 데이터 등 공유) 인구 유입 제한 필요 이전 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 과학적 국방문제 해결

2) 2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 ②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방안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
피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무상 24시 병원운영, 건강관리 키트 발급) 차단막 설치(소음, 진동, 방음), 안전교육 강화 피해지역 주민 의견수렴 (이사비용 지원 또는 보상지원) 환경보존에 대한 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다변화) 건축규제완화 법제화, 신도시 이주 특혜 (특별공급) 비행시간 및 정비시간 주민통보 주변 건물 설계시 방음시설 규제화 노후화된 군 시설 최신화 (저소음 비행기, 방진시설)
절차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과정 투명하고 명확한 공개 이전 지역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현 지역과 이전지역 주민의 대화의 장) 군공항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위한 지속적 토론의 장 (사회적 합의) 민, 군, 정의 소통 확대
다양한 선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관련 관광지 개발, 스포츠 개발지역, 상업 시설로 변경 (삼성, LG, SK 등 대기업 유치) 군공항 지역을 국영기관이 인수 (마을 매입) 일정 기간만 유치 인구과밀 없는 곳, 주민이 없는 곳 선정. 인공섬이나 매립지, 항공모함 이용 군공항과 국제공항 유치 인접 지역 충분한 인프라 구축
정부/ 지자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홍보 (피해 정도와 범위 공개 및 경제성, 지역 이익 제안, 군 견학 프로그램 실시) 리서치 등 이용 다양한 의견수렴 수원시와 국방부 사이 경기도 조정역할 군 견학

3) 분임별 주요 토의 내용

1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과 안전에 대한 보상문제가 필요함 • 24시간 무중단 훈련에 대한 문제,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의 인식 전환 필요(홍보) • 소음과 안전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건강권 문제 심각함, 앞으로 2차 논의 필요 • 도심에 공항을 위치함으로써 문제가 소음, 진동 등 저감 시설 없었음 • 군공항이전법 현실적이지 않음. 보상의 비용 문제 비현실적 즉, 군공항 이전 문제 현실적일 필요 • 수원의 군공항 문제로 인한 건강권(난청)에 대한 문제 • 군공항 위치가 대도시 중앙에 있다는 문제점 • 향후 건축시설(거주) 소음에 노출될 여지가 많음, 소음방지를 안전하게 할 규제책이 필요 • 소음피해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인 군공항 시설 인프라 구축 즉,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문제점 공유의 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없었음, 이전 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 필요와 과학적 국방 문제해결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질환(ex. 난청)에 대해 금전적 보상 이외에 주기적인 검사와 같은 follow up이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 • 정기적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무상 24시 병원) • 소음, 진동, 방음, 차음 시설 설치로 소음 저감, 백색소음으로 상쇄 등/주기적 건강검진과 건강관리키트 발급 등 •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판단과 시행착오의 현실적으로 영구히 이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음 저감된 비행기(전투기) 개발(발명) • 폐쇄나 통합이 안될 시 이전에 드는 비용을 기존시설 보완이나 보상, 시설 확충 사용에 노력 필요 • 군공항 주변 거주지역 건물 설계 시 구체적인 방음 시설 규제화 •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관계로 소음진동 피해가 큰 주택, 아파트 위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는 놀이기구나 상가로 재분양하는 것

2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유치를 기피하는 점, 비 선호 시설(ex. 병적, 소음 심각) • 소음: 실제 거주민은 워낙 익숙해져서 문제의식 희미, 피해파악 우선해야 • 소음, 진동 느낌에 개인차 있음(객관적인 측정방법) • 공군으로서 군공항에 대한 문제의식 없음, 거론되는 이유 궁금(정훈장교), 안보의 문제인데 거론되는 것 의심, 음모 같음 • 정부의 책임 정도, 정치권 이권, 홍보 부족(피해사례 정도 및 절차) • 인구 과밀지역에서 군공항의 중요한 역할 상실 • 사고 위험지, 군공항은 적국의 목표지, 인구 희박한 지역 거의 없음, 유치 회피, 민간공항 함께 유치하면 방법이 될 수도 • 너무 오랜 기간 갈등 방치 • 정부(공군)의 무중단 지역인데 너무 무책임 • 예비 이전 후보지 '화성시'의 지자체보다 시민 목소리 청취 부족 • 이전 시 비용 등 예산 재원 마련, 편의시설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하는 것 부적절(안보를 위한 군공항에 웬 편의시설?)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범위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설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구체적 제안 • 이전 지역을 관광지 개발, 스포츠 개발지역으로(필리핀 군기지에 관광시설 많음) • 군공항 민간 개방, 시설 민영화 연관(군인들 때문에 먹고사는 지역) • 이전 지역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 이전해야 할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어떤 이익을 줄 수 있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및 협조, 환경보존에 대한 방안 마련 • 정부와 지자체 간의 명확한 절차 필요, 도출되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정부, 지자체, 도민) • 군공항 소음 진동 지역을 정부 지자체 국영 기관이 인수 • 지자체가(중앙정부 지원) 공항 주변의 마을 매입해서 주변의 주민들의 소음을 최소화하면 어떨까? • 20년 혹은 30년 일정 기간 동안만 군공항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전 지역을 선정 • 정부의 책임 의식 제고를 통한 주민들의 군공항 인식 개선(경제성, 지역 이익, 소음 정확한 데이터 공유)

3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전투기 소리가 너무 크다) • 집값 하락 • 환경(습지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 소음 뿐 아니라 진동도 보상범위에 넣어서 • 보상기준을 낮춰야 함 •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피해(폐 기능 저하), 위험사고 노출(F5-노후), 탄약고의 자연발화 위험성 • 시민과 국가 간 갈등 발생(국방부와 정부, 지자체의 행정적 협의 차 기구 필요) •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 없이 계속 듣고 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힘들다(육아 어려움) • 군공항이라고 무조건 이전보다 협의 도시 이전의 공항이므로 국가안보 필요성 인정과 교육 • 어린이 청력 저하, 통합 가능(국방부 입장과 다름)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진피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군공항 인근 지역에 흉부외과 등 전문병원 설립 및 검사, 치료비 지원 • 유, 초등 청력장애 방지 및 청력 기능 발달을 위한 관련 무상교육기관 설립 • 공항 이전을 기대했지만 1,2단계라 하니 인접 지역에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한다. 국방부 차원의 보상은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 노후화된 주거시설 상업 시설로 변경 • 소음 피해 보상기준 하향 조정, 더 많은 지역주민 혜택 소음 피해 주민 위원회 설치 •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 및 규모를 과학적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예방 조치 및 사후관리 필요 • 소음 분진 발생 시 주변 인접인들의 건강상 피해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서(분기별) 안심할 수 있는 방안 요청 • 소음에 대한 보상 방안? 다각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외곽지역으로 이전(임야, 산악, 섬) 인구 과밀이 없는 곳으로 • 노후화된 군 시설을 최신화해서 피해를 줄인다(전투기를 최신화, 방음, 방진 시설 확충) • (장기적으로) 정부가 국방기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방기술을 질적으로 높여서 소음 분진 등 도민들이 입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임

4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환경 문제로 인해 피해(질병) • 소음문제로 인한 건강(주민 보건) 문제 • 군 관련 사고(미사일 낙탄 등)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불안 • 비행기 사고 등에 대한 불안 • 무기고, 사고(안전), 폐유 방류 등 환경오염문제 •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보상 • 기피시설(군 공항 포함)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 누적된(소음, 빛 등)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정신적, 신체적 문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을 기준으로 피해 범위 부지 조사, 국유지 매입, 공공지역 (현찰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식, 매입 아님) • 고도제한이나 기피시설 문제로 지역 발전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 지역 인프라 측면에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편의시설, 의료시설) • 공공주택 및 이사비용 지원, 월 6만원 지급도 장기화 되면 매우 큰 비용 발생됨(한번에 비용 발생) • 소음, 환경적 문제(무기고 화학물질), 인체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보상, 삶의 질 향상(복지혜택, 물질적 보상) • 안전에 대한 불안, 최근 미사일 낙탄 등 군 사고 지속적 발생, 이전만의 피해 최소화 • 군부대 시설 내 환경 오염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고 환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음이나 여러가지 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치료를 요함 • 주택 건설 시 방음 장치 설치 지원, 의료시설 확충(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에 따른 진단 의료체계 확립) •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 인구 밀집 지역은 공항 후보지 제외, 인구 감소 지역 공항 설치(소음 감소, 사고위험 제거) • 소음 문제, 이전 문제 해결 위해 소음저감장치 개발, 소음 수준 및 거리에 따른 기지시설 배치(소각장 화장터)

5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피해(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 푸는 방법의 문제(시간, 노력, 재정) 이득 보는 사람의 입장 • 소음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 군공항 존재 의식/인식 부족(안보 대응, 대처가 우선 가치) • 소음, 진동 문제, 건강 침해, 건강영향평가 보상액 판정 기준 활용 • 국방부 홍보 노력 부족(공익광고 국민, 대중 채널) • 경제 피해 심각(지역발전, 지가 하락) • 보상금 외에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공감하면서 보상해줘야 함 • 보상금으로 내 삶의 질을 보상받을 수 없다 • 20년 혹은 30년 일정기간 동안만 군공항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전 지역을 선정 • 정부의 책임 의식 제고를 통한 주민들의 군공항 인식 개선(경제성, 지역 이익, 소음 정확한 데이터 공유)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무조건 이전이 답이다. 영흥동(인천공항) • 인천공항 성공 사례 응용, 군공항을 주민들이 없는 지역으로 건설 • 군공항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갖는다 • 이해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의 측정 수단 합의됐는가? • 현 군공항 지역주민과 예비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과 함께 서로 원하는 점, 개선점을 얘기해 협의점을 찾는다 • 소음, 진동 보상보다 더 소음방지 벽 등 방지하는 방법 모색 • 피해계층에게 피해보상에 단편적인 소음의 수준이 아닌, 건강 영향,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다면화가 필요함 • 직접 피해 대상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요구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 난 이사를 가겠다 →이전 지역 비용지원, 사흘 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으며 살고 싶다) • 현실적인 보상금(겨울 난방비 50만원) • 경기도는 조정역할(수원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 국방부가 유튜브 같은 SNS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해야만 한다

6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 소음 문제 • 유류품 사용, 미군부지 이전 문제점 등의 환경 문제 • 주민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 (도시화, 전입 등) 인, 허가 문제의 기준, 절차 등 •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침체 문제 발생 • 행정절차 상의 기준, 소통 등 문제 • 항공법 등의 절대적 적용에 따른 경제권 행사 제약 • 군공항, 민간공항의 배상기준 상이(형평성의 차이) •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제약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으로 건축규제 완화법의 법제화가 필요함 • 군공항 주변(반경) 도시화 방지, 국방부 권한(인, 허가 문제)으로, 인센티브 대신 이주 지원으로 주변 확보(이주하지 않을 경우) 이주비용으로 • 방음 창문, 방음문으로 전면 교체, 여름엔 에어컨 무상제공(전기세 포함) • 개인 보장도 중요하나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기초시설 (방음시설)을 확보하길 바랍니다 • 이전 전→공항주변 주택에 관하여 개보수 절차 완화, 이전 후→행정상 인허가 금지(주택에 관하여) • 주변 로컬 생산되는 먹거리의 안정성의 지속적인 확인(행정의 역할) • 모든 것이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법령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완화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기우려 볼 필요성(의견수렴) • 주택 인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혹은 이전한다면 교통편 의뢰 지원(난청, 스트레스 등) •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 원인을 파악 후 의료지원 정책이 필요함

7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공항 이전 절차와 관련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점, 추진 이전(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큼(개인의 자산 문제해결 개선 필요)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군용기 엔진 소음 및 이착륙 소음) 심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심각(24시간 수시 발생 가능) 이전 절차와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 부족 도민 간, 지역 간 충돌 갈등 유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을 정기적 건강검진을 해줘야 함(소음 등 진동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이전할 지역에 군공항과 국제공항 위치 이주 대책 마련, 기존 농사는 지을 수 있게 기존 군공항 매매, 돈으로 보상해줘야 함 군공항 피해 주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해서 이주 특혜를 줌, 특별공급, 기존 계획된 신도시 공급분 중 일부를 피해 주민에게 특별공급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근시안적 접근보다 근본적 해결, 보상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 매립이나 인공 섬 조성하여 공항 이전 이전 휴가 시 주변 주민들의 재산(부동산) 매입, 이전 시 이전 지역에 막대한 예산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이전 전→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액을 의견수렴, 보상액 높이고 지급방법 바꾸거나 등 이전 후→최대한 피해지역이 없도록 면적 확보, 이전 주민들의 높은 보상 이전에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공항 이전 행정기관장 종합 의견수렴(화성시장 국회의원), 공항 이전 세제혜택 부여, 삼성/LG/SK 등 대기업 유치, 공항요금 지역주민 50% 감면 비행기 정비시간 주민통보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 저감 방안

8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정신적 문제(불안, 호흡 곤란, 초조), 청각(이명) • <소음, 진동 관련> 유아기부터 시작되기 때문 • <환경 관련> 밀폐된 군기지 내 (폭약) 환경 문제, 오/폐수 관련 • <재산권 행사제한 문제> 고도제한, 개발 제한 • <안전성> 화약고 폭발, 추락 등 사고 관련 • <교육권 침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 • <보상금액의 적정성 문제> 민간공항 대비 현실성 있는 조정 • <인구 유입을 제한하지 못한 문제> • <소음, 진동에 의한 질병의 입증절차가 어려움>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증절차 완화 • 신체, 정신적 보상한다(소음, 진동),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우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가정방문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기록을 남긴다 • 소음, 진동 피해보상 관련 세세한 보상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주민에게 자금 지원해 준다. • 안전시설(진동완화구역)의 확충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국방안전을 담보로 당해 도시가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소홀이라 봄, 피해보상 규모를 증가시켜주고 다양한 혜택 제공 • 핵심은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봄 • 도심 내 군공항 주변 주민 피해보상 내용 및 보상금액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국방부, 지자체, 정부 모두 관여 • 교육권 - 군공항 주변 학교 학생의 수업 저하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환경 - 군공항 주변 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토지와 수질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감시한다. • 국가안보 환경이 비슷한 외국사례도 검토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성 높은 것 선택 • 주변 환경 개선 혐오 시설 이미지 개선,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상업 시설, 주거시설 등등) • 국방부, 지자체, 중앙정부 서로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 • 군공항 지역에만 이 문제를 전가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임

9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 지역의 발전 저해 우려 • 유치 지역의 안전에 대한 문제 • 재산권(집값) 하락 • 소음, 진동, 재산권, 먼지 피해(건강, 재산) • 유치 지역 주민 반대 • 고도제한 문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 지역에 선호시설을 지어 인프라 구축 • 유치지역 발전, 지역발전, 주민 취업, 지역 문화 지원, 인프라 구축 • 정기적인 건강검진(공항 주체) • 군공항 주변 시민 충분한 보상, 건강 관리 검사 •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단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 당사자(군, 민, 정)간의 소통 확대 • 비행기 소음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비행기 소음을 줄 일 수 있는 기술연구, 개발) •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현재보다 더욱 현실적인 보상안(소음피해에 대한 검사비 또는 치료비) • 소음, 발전 저해 등에 대한 충분한 대안 제시(기준에 맞춰 보상안 제시) • 실질적 이익(채용, 세금)

10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주민) • 재산권 행사 제한(고도제한에 따른) • 교통권 문제(군부대 때문에 돌아가야 함) • 군사훈련에 대한 사고위험(현재 일어나고 있음) •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정책적 문제 • 지역의 미래발전 가능성 저하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를 제기 안 하더라도 보상금 자동지급, 피해보상액 증액, 소음방지시설 및 연구 • 국가 재원으로 보상과 이전, 재산권 행사제한을 풀어야 여러 단체가 아닌 한 곳의 통합 시스템으로(투명성) •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작전 전 항상 군인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 공항 주변에는 간격이 넓은 산업, 시설 단지, 과학 단지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AI산업이나 자동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 도심에 있더라도 소음이 있는 공항 반경 몇 km 이내, 입주민이나 주민들이 살지 않게 하는 법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 주변 지역을 소음과 무관한 시설 입주 등 다각도 활용 모색(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 • 소음 영향이 높은 주거지역 이외 용도로 토지를 활용(공장, 산업단지, 공원, 생활 근린시설 등) • 무인도나 섬을 매입하여 군공항으로 개발한다 • 도심이 아닌 최전방과 최후방에 공군기지를 위치시키면 함(인천공항 활용) • 군공항 이전을 주민이 적고 휴전선이 가까운 강원도로 옮기는 거

11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주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피해(학습, 휴식 등 가장 기본적인 욕구 해결 문제) • 진동 피해(비행기 출격 시 진동 발생) • 지역발전 문제(도시의 확장성 대비, 군사시설 제한에 따른 균형 발전의 어려움) • ejection에 대한 조종사 피해(안전문제. 비상탈출시 도심을 피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전 필요) • 자자체의 도시계획(군사 보호시설 지역, 고층아파트 승인 보류 및 근처 재산권 보전이 정책 필요) • 비선호시설이라는 인식(탄약고가 화성시와 걸쳐 있어 단어부터 두렵다) • 소음과 비선호시설, 재산권 행사 어려움 • 보상문제(해당 주민의 체감할 수 있는 보상금, 보상제도 낮음) • 매뉴얼화 된 보상체계의 부재(정책적으로 대입될 수 있는 보상체계 수립 필요) • 안보 문제라 인구분포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유지하기 위한 근본대책보다 정확한 진단(현상) 필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진동이 가장 심각한 지역의 주택을 자자체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영공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군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곳으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군공항 점진적 통폐합, 중앙정부, 국방부, 자자체 시스템화된 보상체계 매뉴얼(별도의 소송 필요 없도록) •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공모제 진행으로 해결(일자리, 공원, 수용성 높이기) •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를 하여 이전이든 보상이든 처우 개선을 하였으면 한다. • 군공항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임을 오픈하고 보여줌(시민과 함께하는 시설임을 인식시킨다) • 항모를 10만톤으로 만들어 바다에 전투기를 배치하면 소음피해 보상도 해소되고 주변 지역 과밀 시 재차 공항 이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 비행시간을 선택해서 비행하면 어떨지? 야간, 훈련시간 비상시 제외

4) 1차 숙의토론회 소감나누기

핵심 키워드	주요내용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 몰랐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알게 됨 군 관련 문제는 정부 문제인 줄 알았음.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 논의됨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도민의 대표라 부담 갈등 심화 전에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론화 참여로 피해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방안보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필요함을 느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전(유치)에 대한 합의(해법)를 찾아갈 수 있길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이 많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시민 의견 수렴하는 경기도 공론화 바람직
개선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정부 역할 모호. 대응 미비. 정리되어야 인센티브 문제 거론도 해야 도심 내 군공항이라는 단어와 공론화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2차 토론은 명확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차에는 수원시와 경기도 의견을 듣기를 바람 회의시간을 한 시간만 줄이면 좋겠습니다 기존 문자는 간단한 내용만 숙지했는데, 실제로는 깊은 내용이었음.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발표전문가가 실질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관련자가 와야 한다. 행정처리 하시는 분도 참여해야 함. 이해당사자 모두 참여했으면 한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발제가 어려웠다

2. 2차 숙의토론회

1) 1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분임	분임별 대표 질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군공항 경우 민간·군공항 통합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공항 시설의 부족함으로 군공항의 시설을 활용(일부)하여 여객 수요 및 화물 수요를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해결방안이 있긴 한 것인가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공항 사례처럼 민간공항을 같이 유치할 경우, 향후 인구 과밀에 따른 소음 등 기본적인 문제 발생 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식 대표는 여러 측면에서 수원공항의 점진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방연구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 공항이 북한 도발과 국제전(중국 등)에서도 필요한 위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공항 이전이 힘들다 하는데... (지금 군공항을) 민간공항과 같이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닌지요?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식 대표는 수원 군공항이 필요없다고 하셨고 우정범 연구원은 국가안보상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상이한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군공항 폐쇄가 안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론도 있는데 폐쇄를 주장하시는 근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후에 취소가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전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지금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공항과 통합시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신공항 이전부지 기본 계획수립 완료하는데, 군공항과 관련한 주민 (피해)문제 발생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는지요?

2) 2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 ①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
군공항 이전절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은 국가기반시설로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이전 계획대로 진행 특별법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 준수(구체적 선정 기준 공개)해야 이전 후보지에 대한 대책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보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 공항 입지 적합성 등 이외에 지역주민합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 정부와 경기도가 맞춤형으로 "수도권 군공항 이전 및 지원관련 특별법" 제정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군공항 점진적 폐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문제점 줄이거나 인센티브 제공이 합리적임(점진적 폐쇄 적극 검토해야) •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공항 축소 및 첨단화 • 장비고도화(무인기지) 및 전술작전 변경 점진적 축소해야 ▶ 보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축소 및 고도화 통해 합리적 데이터 마련 선행해야
군공항외 민간공항 통합등 추가 대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 민간과 군공항을 공동 건설해야 •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으로 주변 인프라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세계중심의 경기도로(경기 남부 민간항공수요 대응포함) •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혜택(복합 상업 시설, 블록센터 건립, 주변 지역 일자리 공급 등 경제적 혜택) 및 새로운 도시 창조 ▶ 보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공항 진행 시 이전지 재검토(인구밀도 적은 곳, 남부 간척지, 섬 등 통합 가능한 부지확보 노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공항 유지 및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 및 국가안보 고려 폐쇄 등 문제점 있기에 현 지역에 존치하되 주민 삶의 질 향상(피해보상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지속적인 공론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구와 비교를 통해 폐쇄가 가능하면, 폐쇄. 이전부지 주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군공항 이전 등 적극 추진 • 국민적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충분한 다양한 공론을 토대로 결정

2) 2차 분임토의 주요결과

: ②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핵심 키워드	주요 내용
경기도	<p>▶ 주요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주도적 갈등 해결 노력, 갈등 예방을 위한 홍보,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 갈등지역 간 조정 및 합의 조율 기능) • 주민 의견수렴 절차(주민투표,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론화, 후보지에 정보 공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 • 피해 방지책(이전부지 재검토, 피해 최소화, 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 피해지역 주민 인센티브 보장, 군공항 주변 인허가 규제) •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의 • 공항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 현안과 관련된 부지 활용
중앙정부	<p>▶ 주요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증진 및 책임성 강화(전담 통합팀 구성, 이해관계 지자체와의 구체적 소통 채널 확보, 책임성에 입각한 정책 추진, 국민 의견수렴, 통합의 역할, 국방, 항공 관련 주민 행사) • 특별법 개정(기부 대 양여 방식, 구체적 보상방안, 투명한 정보 공개) 홍보(군공항 필요성 및 이전 관련 적극적 홍보를 통한 주민소통) • 국방부(적극적 해결 의지 및 소통 필요), 환경부(탄소제로를 위한 논의, 기후위기 대처), 복지부(주변 지역주민 건강 관련 꾸준한 관리), 국토부(충분한 인프라 구축 등)

3) 분임별 주요 토의 내용

1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보상금의 사용을 좀 더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개별보상을 지역 전체 이득을 추구하는 공익적인 관점으로. • 군공항 이전 시 대구 공항 사례를 교훈 삼아 이전부지 지방자치 단체와 종전부지 지방자치 단체의 협의 하에 이전할 수 있게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진행한다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 문제는 통폐합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좀 더 신중한 보안과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정육식 소장님의 생각과 판단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통합공항 추진(조건: 대체지원사업 충실) •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되(이전지 재검토) 민간공항과 통합 건설을 함. 왜냐하면 민간 공항의 포화 상태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 될 수 있음 • 도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폐합 가능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 • 수도권에도 민간공항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군공항이 면적도 적고 현재 수원 도심지에 공항은 피해(소음 등 진동)를 많이 준다. 그래서 인공 섬이나 대부도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경기 남부 천안입니다. 거기에도 공항이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공항도 새롭게 사람이 없는 곳에 있어야지 피해가 줄어듭니다. 울릉도에도 공항이 생기고 경남에도 있고 수도권에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민간 군공항이 생기면 부가가치가 크고 산업 효과가 큅니다.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방부에서는 폐쇄를 반대하고 이전도 고려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부지를 이용하여 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선택지는 없는지 • 군공항 이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군공항의 현재 문제점을 줄이거나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을 보인다

1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군공항은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비이전 후보지가 화성(화옹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경기도에서 주도적 역할(운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 해결 •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군, 민간공항 통폐합 가능한 공항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 강구 • 경기도민 의견수렴 절차 통해 이전지 재검토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 피해 대책 적극 강구 • 이전에 대한 갈등을 위해서 관련된 관계 부처에 대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 협의 주도 • 이전 하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의 랜드마크로 파급효과, 투자 필요함, 규제 완화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중앙정부의 적극 예산 지원) • 적극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 필요(새로운 방안 필요) • 피해 보상법 개선방안 입법(의료지원, 대체사업 법령에 대한 입법 예고) •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력

2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절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전 ▶ 점진적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군공항은 폐지 후 공원화나 자연상태로, 하지만 새로운 이전지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갯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시 선정 • 정책 결정을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수원 군공항 축소 및 고도화 통해 축소 합리화의 데이터 마련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문제점 및 장점 데이터 마련) • 점진적인 군공항 축소 • 군공항 폐쇄, 항공모함 도입(민간공항 경기 남부에 짓고 싶은 속내) ▶ 민간공항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없는 곳으로 이전. 민/군공항 같이 • 민/군공항 만들려면 이전 찬성한다(면 훗날 포화 상태를 위해) •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신규 부지를 활용해서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민간공항, 군공항이 새로 건설하지 않는 한 같이 갈 수 없다면 이전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제대로 된 판단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 이전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공간, 플랫폼 마련해야 뉴스의 일방적인 정보제공 우려(편중된) ▶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공항 철수 불가, 신규부지 어렵다면 신도시(ex. 국토부) 같은 개념으로 계획, 설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 먼 훗날 기후 위기로 인천공항 침수 이야기가 있다. 이전 위해 군이나 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필요 • 행정부 산하 국방부 있음. 국방부가 제시하는 이전부지 볼 때 군에게 치외법권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정부가 탄소, 해양생태계 문제 고민해야 한다. 전 세계 6위 군 전력 비춰, 선정 후보지 선택지도 넓혀야 한다 • 전력 순위 의미 없음. 정부의 안보 의식, 수원 확장해서 오히려 더 큰 군공항 지어야 혹은 민간공항 수용 가능한 부지 좀 더 찾아봐야 한다. • 국방부 위주 이전 장소 등 안보만 강조 우려, 우리의 공항 많음(ex. 여수) 있는 공항 활용해야(헬세 낭비) • 신도시 개발할 때 중앙정부 도움 필수, 인구대비 수도권 흡수할 수 있는 도시, 굳이 갯벌일 필요 없음(ex. 섬)

3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하고 그 대안으로 복합상업시설, 블록센터 등 건립하여 후보지 거주 주민에 대한 일자리 우선 공급 및 각종 경제적 이익이 후보지 거주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군공항 이전이 답이다. (현 주민 반대가 심하고 이전부지는 환경분야 및 중국과의 마찰 등이 있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군공항은 불가피하다) • 2014년에 제정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광주 공항 등에 적용하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은 인구 과밀화 진행 중이고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군공항이든 민간공항이든 국민(특히, 이해관계 주민)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ex. 대구, 군위 : 인구 2~3만명, 광주, 장성 : 인구 3~4만명), 대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맞춤형으로 '수도권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 및 제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신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 지역이 정해진다면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합의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원 군공항 기존 전투기의 가용량을 1/3로 축소하여 무인기 중심기지로 활용하고, 축소된 전투기는 성남 서울 공항을 활용하는 군 작전 및 전술 변경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축소하는 기존 지역주민 대상으로 보상(혜택)을 늘린다. 실제로 축소가 되는 것이 보이면 불안 잠식 가능할 듯, 국제공항과 군공항 신설하는 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를 미리 계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건설해야 함. 그럼에도 발생하게 될 피해는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서 보상할 것 •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으로 주변 인프라 향상을 도모, 미래 지향적인 시설 확충. 경기 중심에서 세계로 나가는 기반으로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이나 폐쇄가 아닌 현재 위치에서 규모의 축소와 첨단화를 통해 현지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피해를 정확히 측정해서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제공.

3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 또는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 다른 지역도 참여할 수 있게 함, 다양한 의견 수렴(객관적인 시각 필요) • 연구, 조사 통해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측정, 피해 방지 해결책과 예방책 마련 • 군공항 이전, 이후 공항부지 활용방안과 기존부지에 비용에 대한 경기도, 중앙정부의 투명한 제시가 있어야 주민 수용 가능 • 수원시, 화성시 합의 없었으나 주제발표 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데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보다 두 도시의 합의점 필요, 제시 바람 • 군공항 이전 시 그 부지에 녹지 공원 조성 필요함 • 절차상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의 공론화 어렵다. 후보지 선정에서 공론화 했어야 함. 결론 도출하고 가고 있는 느낌, 프로세스에 기초(초기 단계)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 방향이 중간 이상 상태에서 형식적 공론화인 것 같아 어렵다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소멸의 군공항 이전과 인구 과밀화의 경기도와는 다르다. 보상금액도 다르다. 수도권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해 이전해야 함 (맞춤형 수도권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 소통이 폐쇄적인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한 정보 필요

4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대상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이전 필요성, 인센티브(지역 발전) → 주민 설명회, 인터넷(SNS), 지역 언론(방송) 등, 이전 설문조사 결과로 반대가 많았음(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 반대) 군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도심화로 인해 수원에 군공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비록 설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안대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민간과 군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 문제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에게 합리적 복지혜택 등을 제시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축소해야 한다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과 민간공항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합공항(토지 매입 어려움, 경비 절감, 전투기 등 무기의 첨단화, 미사일 등의 대량 보유)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문제 야기가 더 큰 것 같다. 민간과 군공항 공동 건설이 앞으로 좋을 듯,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니 열린 마음으로 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조율, 체계적인 계획과 다양한 소리 듣고 문제를 최소화시킨다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공항을 보수하고 면적을 더 확보하여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하면 경제적 부담과 또 다른 갈등이 커질 것 같기 때문임 새롭게 군부지 선정과 새 공항 설립, 그리고 이전 등이 오히려 혈세 낭비임, 이전하는 부지 역시 또 다른 지역사회와 갈등을 야기함. 지금 있는 곳 지역주민들과 적절한 보상 협의로 그냥 유지하는 것에 동의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안에 대한 숙의 과정 다양화 전담기구를 통한 홍보 강화 정책의 책임성 담보(공정성, 투명성) 주민투표(필수) 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정보 및 홍보 제공, 구체적 보상방안 정보제공 예산 지원(보상) 책임성에 입각한 정책 추진 특별법 개정 이해관계 지자체와의 구체적 소통 채널 확보

5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인구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서 1인당 돌아가는 보상 액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 현재 10명이 10만원을 받는다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인 월급 늘어난 원리와 같다 • 군공항 시설에서 경기도 지역주민 공론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의견 공유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국민적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충분한 다양한 공론을 토대로 결정하길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상의 전환 필요. 점진적인(장기적인) 폐쇄 방안 모색 필요 • 정육식 소장 의견 지지함. 변화는 빠르고 불확실함→지연시키는 것도 한 방안, 이전은 새 민간공항 등 엄청난 투자의 비용 수익 분석, 비가역적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남부 간척지에 군과 민간공항 설치 요망 •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민간공항과 통합하여 유치했을 때 얻는 이익을 홍보해서 새로운 이전지를 정해보는 과정을 갖는다 •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했을 때, 혜택에 대해 이전지에 홍보함으로 이전지에 혜택을 부각해 추진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필요경비와 피해 지원액과 기부 대 양여 방식 또는 민/군공항 건설 시 생기는 예상 이익에 대한 분석 및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 수도권(인구 집중 가속화), 담비 현상, 지역 이기주의→왜곡, 과장의 과거 사례와 눈덩이처럼 커지는 투자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부지 제공 • 갈등관리, 숙의, 조정, 대화, 공론화 지속 • 홍보(중요성과 필요성의 객관화) • 투명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과 공유,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개방, 공개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전액 지원, 보상 • 필요성 홍보 • 정부의 적극적 협업, 중앙정부는 지역과 집단 이기주의 초월해서(공항 이전 신공항 건설 등) 투자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 경기도의 입장과 니즈를 정부에서(국가) 논의 시행 추진 • 안보 문제 논의 필요 • 기부 대 양여 방식 재검토(경기도 진행 안정화를 위해), 통폐합 검토, • 정보 공개 투명성, 국민 의견수렴

6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폐쇄가 힘들 듯하니 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으면 합니다 •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군공항 유지는 필요하나,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새로운 이전지 필요 •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공정성 측면에서 수원이나 화성 주민들 모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같다고 하면 협의와 이해를 통해 어쨌든 공항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전이 필수이므로 수도권 다른 국방부 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땅이 없는 건지)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의 통합 재편이 필요해 보임.(이유: 현 공항들의 설치 시기에 비해 전투기와 군사 장비가 현대화되어 중복 발생)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민간공항이 필요한 만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환경을 생각한 복합 상업 시설 운영) • 수원의 군공항의 이전과 유치할 곳의 사회적 합의 통하여 의견수렴. 민/군의 복합 신공항 유치할 것으로 하되 외곽 지역(도시 외곽 지역) 인센티브 및 인프라 구축 진행 • 이전에 동의, 군공항과 화물 전용 민간공항(화성, 평택 항공 물류가 많음으로)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이 지속되고 준전시 상황이 지속 된다고 할 때 향후 군공항은 또 다시 건설될 수 있는지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 있는 4개의 군사 공항을 개편, 통합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이전과 유치지역의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등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합의를 위한 틀 마련 필요(재원) • 경기도, 중앙정부, 국방부의 소유지를 활용 이전 시 보상 마련(선제적 제안) 필요 •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국방부지)를 매매해서 조성 예산 확보 • 특별법의 절차를 따라 투명한 이행 필요(이권 개입X)

7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군공항을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간공항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외로 이전(민간 국제공항 결합), 국방부 이타성 확보한 화옹 지구가 최선→송산 테마파크 건설 예정(해외 관광객 유치 가능) • 민간과 군공항 옵션으로 최소 필요 면적, 환경 적합한 후보지 다수 선정 후 각 지역별 공론화 진행 후 취합. 인센티브는 국민 공론화 (세금이므로) • 군/민간공항 통폐합하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동의 유도, 기타 소음과 환경 오염 문제 등의 확실히 해결방안을 공표할 것 • 군 공항을 후보 지역으로 이전 시 민군 통합공항으로 피해보상액을 기업들의 부담금을 참여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결합은 추상적이니 객관적으로 돌아갈 이익을 공개, 공항 조감도 등 구체적 제보를 좀 더 제시, 공유 • 군공항 현 상태 유지 및 개선→안보적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주민피해 저감 대책 수립, 진동과 공항 소음 개선과 주민 보상 예산 확보, 자자체는 군공항 인근 주민 혜택 부여 • 현재로써 안보 문제로 인한 당장의 이전, 폐쇄 등의 방안은 어렵다 따라서 주민의 보상이나 삶의 질은 향상 시키는 방안 쪽으로 가야 함 • 현재 경기 남부 지역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가능성 낮으므로 소음 및 문제 축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대안 마련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초단체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이전부지 확보 관련) 공청회 등 확대(장려), 종전 지역과 이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 군공항 피해주민 혜택 부여 높이기 • 현 군공항 이전 진행 상황, 공론화 진행 등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설립 • 이전 후보지를 늘리기 위한 방안 • 종전 지역과 이전 지역 주민 간 갈등관리 ▶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공감대 형성 (홍보, 정보제공) •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함 • 공항 이전에 따른 교부금(자금) 확보해 증액해주어야 함 • 공항 소음 개선, 주민 피해보상 예산 확보 • 북과의 관계 개선(통일 등) 필요(군공항이 필요 없게) • 군 현대화를 통한 근본적 정책과 대비. 군공항 수요 줄이기 노력 • 절차적 투명성/정보공개(이전 예정 부지 사전 주민투표를 먼저 시행, 공론화 시작해야 함. 공신력 확보)

8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될 곳에 파격적인 지원 없이는 안 될 것임. 그 지원금 재원은 결국 세금이므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합의 필요 • 탄소량과 기후 생각해서 군공항을 이전하면 활주로 늘려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 •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도모(사회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마련)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구와 비교를 폐쇄가 가능하다면 폐쇄하고, 종전과 이전부지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그 방법도 좋을 듯하다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군공항 이전 민간과 군공항 절차를 잘 지켜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공항 건설 • 군공항 이전,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대폭 증가, 테마파크, 상업 시설, 호텔, 안보 관련하여 군공항 견학 및 체험장 설치 • 수원 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과 함께 건설 시 관련 지자체 민원 감소 예상 • 군공항 부지와 민간공항에 필요한 부지를 검토하여 민, 군공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음.(비용 및 대체부지 최소화 가능) • 허 사장님 건의 내용처럼 민간과 군공항을 같이 이전해 현재 군 비행장 문제와 민간공항 포화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는 방향으로 추진 요망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동의 없는 이전 실현 불가능(도민의견 수렴), 중앙정부와 소통하여 적극적 역할 해야 함 • 사업추진 시기부터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논의로 설명, 설득해야 함 (청사진 제시) • 이전이 결정되면 수원 군공항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항 근처 인허가를 철저히 규제해야 함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 등 국민 모두의 문제를 종합적 검토 주도적 진행이 필요함 • 군공항 긍정적 이미지 개선, 이전 필요시 홍보 및 소통을 통한 설득 (알권리 층족) 필요함 • 재원 조달 방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보 공개를 해야함). • 경기도와 적극적인 소통 필요(복합 시설 함께) • 안건이 결정되면(이전 및 폐쇄) 정부와 경기도는 지속성(연속)이 되길, 정권 교체마다 백지화되곤 하니 믿음이 안감

9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쇄는 안보 불안 문제가 있고 이전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군공항 반경 2km를 점진적으로 안전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전의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의 희생이 전가되는 일로 해당 주민들이 최소의 희생과 납득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착륙 안전을 위해 해변가 유리, 이주 지역주민 민간공항 같은 시설 건설 시 주민 위주 취업 보장, 소음 완충에 대한 방지 충분한 시설 경기 남부권 거주민은 공항 이용이 힘듦(ex.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50분도 먼데 수원에서 김포공항이 1시간 30분 걸림). 군공항 이전과 함께 민간공항과 주변 시설을 건설하여 복합 시설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군공항의 단점 때문에 군공항을 없애는 것은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불가, 공항 주변 부지의 매입과 민간공항 설립과 주위 인프라 개발로 이전부지 지역과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전 지역에 군공항과 민간공항 함께 유치, 물류와 무역 관련 일자리 창출 예상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으로 전투기의 소음을 줄이는 연구 진행(ex. 전기 전투기) 환경 문제(정부의 역할, 탄소제로)논의 필요. 병행해서 논의해야 함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지역의 조성 기능 역할 대기업 유치, 충분한 자금(예산) 확보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필요 신공항 지역주민 우선 취업 보장, 신공항 특화도시 유치, 첨단 기획 단지 조성하여 주민에게 혜택 부여 공항 주변 자연공원(늪지 공원) 조성,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만들기(홍보 필요) 교육 시설(제2의 강남) 확충, 이전지역 주민의 최소 희생, 최대 이익이 되도록 노력 논의 필요, 정권 교체에도 사업 연계 지역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 적극적 해결 의지 및 노력 필요 환경부 - 탄소제로를 위한 논의 노력 복지부 - 건강 관련 꾸준한 관리 필요 국토부 - 충분한 인프라 구축(전철 연계)

10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계획대로 진행→국가 기반시설로 백년대계로 생각해야 하고 (충분한 부지확보로 재산권과 소음 사전 방지) • 군공항 이전하되, 3km 반경 실거래가 수용 및 방음 시설과 최다 인원 고도제한(시설 지하화) • 군공항 유치지역에 항공대학 설립, 항공산업 공장 설립, 군용품 공장 설립(수원 군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확한 군사 정보를 시민들이 인식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이전: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신사업) 여객, 화물 수용 가능,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및 일자리 이익 제공 가능 • 노후화된 공항은 확장 이전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민간공항 통합) • 민/군 통합공항을 통해 기피 vs 선호시설의 장점과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 But, 김포만큼(혹은 더) 이용 편의성이 존재할 부지가 있을지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수원 군공항 폐쇄 후 지역 민간공항 신축 및 다수의 소규모 군공항 배치(전투기 특성 고려)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주민 의견수렴, 다른 지자체 의견수렴(부지 선정을 위해 통합적 정보, 자료 수집),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실행) • 전담 통합팀 신설, 다양한 구성원을 모아 역할 분담, 통합팀의 수장은 실무 진행 능력이 있는 분 • 경기도는 숙의 공론화 장기적으로 추진, 중앙정부는 책임을 가지고 무조건 이전,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에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투명한 정보제공 • 독립된 특별 전담팀 구성(시민참여)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이념과 당을 떠나서 지방 정부와 연계, 지속적인 정책 추진, 경제적 지원(특별법에 근거), 지역주민 의견수렴 • 중앙정부는 리더. 통합의 역할 필요, 경기도는 주민들의 분쟁을 화해, 조정하는 역할 • 특별법(2017년) 2조 6장 2항에 '신설개정추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포함 • 주민들의 갈등 문제 해소

11조 토의 내용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방안)	<p>▶ 이전 절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인 해결방안으로 후보지 주민들의 공청회 •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에 선정과정에서 공항 입지 적합성, 군사 작전 적합성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복지 내용, 공항 주변 소음 발생 지역 매입 의지 등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지역에 대한 홍보 필요 <p>▶ 점진적 폐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가안보상 수원 군공항 완전 폐쇄는 불가능하기에 규모 축소와 무인기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들크 <p>▶ 민간공항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대안으로 선택되기 위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민간공항으로 얻어진 수익은 일정 부분 지역에 지역을 위해 사용, 공항 이전으로 재산권 침체에 대한 보상 •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를 창조했을 때, 그 지역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빠른 교통수단 제공, 숙소 제공 등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제공 • 이전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해소방법을 찾고 민간공항과 상업 시설을 함께 건설. 일자리를 늘리고 편의 제공 • 공항 주변 주택 시설(아파트, 주택)에 파격적인 비용 혜택(생애 첫 집 마련, 1인 가구,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현안 중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나중에 할게요~아니고 동시 제안)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역할	<p>▶ 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GTX, 교육 특구 등 현안에 대한 부지 선정을 세트로 • 사회적 합의와 완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여러 경로를 활용하는 시간을 적극적 활용(주민의 의견 듣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의견 청취) • 수원시 예비 이전 후보지와 합의 조율 • 민주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 ex. 공청회, 토론회, 투표 • 진행 과정 투명성 공개 지속적 주민소통의 장 마련 <p>▶ 중앙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의 열린 사고 의식 인식 개선 우선, 경기도는 촉매제로써 지역 주민 설득, 홍보 절차 진행(된다면 전제하에 사회적 합의 우선) • 홍보(혐오, 기피시설이 아닌 친숙한 홍보)→국방력, 항공 관련 공항과 주민 행사(국방부) ex. 청와대 인근 주민의 자부심 • 안보상 폐쇄는 힘들 것 같으므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이전하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군공항 이전에 관한 타당성 검토, 이전을 꼭 해야 하는지 당위성 필요 • 투자, 기업들의 유도 혜택

4) 2차 숙의토론회 소감나누기

핵심 키워드	주요내용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여러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됨 • 자료는 다소 편향적이라 생각했으나 의견을 나누니 다양한 의견 공유 과정의 중요성 인식 • 군공항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계기, 넓은 시각을 접함 • 일방적 형식적일 줄 알았는데 모두가 참여하는 긍정적 토론이었음 • 시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긍정적 결과 기대 •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기회 제공 감사 • 경기도민 30년 동안 처음 공론화 참여, 앞으로 더 많은 공론화 기대 • 시스템/준비가 체계적이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를 기대함 • 처음 참여한 (공론화) 과정에 의견 반영할 수 있어서 좋았음
개선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과정에서 확인필요(패널의 균형, 팩트체크 등) • 시민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브리핑하는 시간, 자유토론 필요 • 숙의 토론 홍보 부족(방송, 유튜브 등) • 당사자와 제3자가 나눠서 토론했으면 하는 아쉬움 • 특별법, 기부 대 양여 등 정치인들이 숨어있는 느낌, 정부와 국방부 역할 미흡 • 진행 과정을 앞으로 계속 알 수 있었으면 함 • 최종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 화성시가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 1차는 교육(학습), 2차는 토론으로 분리하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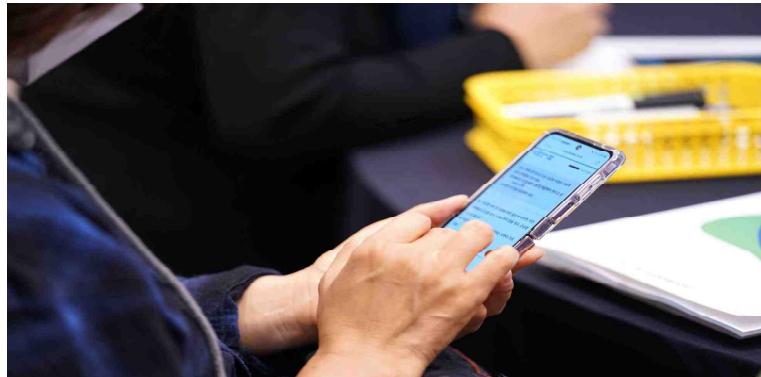
숙의토론회 스케치

1. 1차 숙의토론회 스케치(10/29)

1. 개회



2. 사전 설문 조사



3. 환영사 : 최순영 단장



4. 기대 및 소감 나누기



5. 주제발표
: 전형준 연구원



6. 논찬
: 우정범 연구원



7. 1차 분임토의



8. 질의응답



9. 2차 분임토의



10. 2차 분임토의 결과
공유



11. 1차 숙의토론회
소감 및 평가



12. 폐회



2. 2차 숙의토론회 스케치(11/12)

1. 개회



2. 환영사

: 염태영 경제부지사



3. 인사 및 기대 나누기



4. 주제발표(1)

: 우정범 연구원



5. 주제발표(2)
: 정욱식 대표



6. 주제발표(3)
: 허태성 부시장



7. 1차 분임토의



8. 질의응답



9. 2차 분임토의



10. 2차 분임토의 결과 공유



11. 사후 설문 조사



12. 소감 나누기



13. 폐회 및 감사 인사
: 최순영 단장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

I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2022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을 파악함.
- 도민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권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100명(10명 예비 포함)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이 중 101명이 10월 29일에 진행된 1차 토론회에 참석함.(참석율 101%) 2주 후 2차 토론회(11월 12일)에는 이 중 97명이 참석¹¹⁾하여, 최종 참석률은 97%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경기도공론화를 위한 숙의토론회(10월 29일 및 11월 12일)에 참석한 도민참여단
조사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설문 조사 : 101명(참석률 101%) ■ 사후 설문 조사 : 97명(참석률 97%)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 방식 : 조사 참여 링크를 도민참여단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 진행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른 구성 : 성별은 고르게 하되,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함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설문조사 : 10월 29일(오후 1시~1시 30분, 숙의 시작 전) ■ 2차 설문조사 : 11월 12일(오후, 5시 10분~5시 30분, 숙의 완료 후)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엠브레인퍼블릭

11) 코로나 확진, 해외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4명이 참석하지 못했음.

2. 도민참여단 참석 현황

- 1차 토론회에는 총 101명, 2차 토론회에는 총 97명이 참여함.
- 세부 참석자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도민참여단 구성에 큰 왜곡 없이 참여단이 확보됨.

전체		목표	1차 참석	2차 참석
		100명	101명	97명
성별	남성	고르게	49	48
	여성		52	49
연령별	20대이하	17	17	15
	30대	17	14	14
	40대	20	21	21
	50대	20	20	18
	60대이상	26	29	29
권역별	경부권	32	35	34
	동부권	10	11	11
	북부권	25	21	20
	서해안권	33	34	32

<1차 및 2차 숙의토론회 세부 참석 현황>

(명)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체	목표	17	17	20	20	26	100
	1차 참석	17	14	21	20	29	101
	2차 참석	15	14	21	18	29	97
경부권	목표	6	5	6	7	8	32
	1차	6	5	6	7	11	35
	2차	6	5	6	6	11	34
동부권	목표	1	2	2	2	3	10
	1차	2	2	2	2	3	11
	2차	2	2	2	2	3	11
북부권	목표	4	4	5	5	7	25
	1차	2	3	5	4	7	21
	2차	1	3	5	4	7	20
서해안권	목표	6	6	7	6	8	33
	1차	7	4	8	7	8	34
	2차	6	4	8	6	8	32

※ 도민참여단의 이탈/불참 등을 고려하여 참여단 구성설계 규모보다 많은 수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하였음(예비 포함). 최종 참석자 수는 세부 구성설계보다 많을 수 있음.

II 조사 결과 분석

1.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심각성

-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설문조사 모두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숙의토론회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음.

Q1.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례수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	심각하지 않음
사전 조사	(101)	22.8	61.4	12.9	3.0	84.2	15.8
사후 조사	(97)	48.5	47.4	3.1	1.0	95.9	4.1
성별							
	남	(48)	47.9	45.8	4.2	93.8	6.3
	여	(49)	49.0	49.0	2.0	98.0	2.0
연령							
	18~29세	(15)	20.0	80.0	0.0	100.0	0.0
	30대	(14)	64.3	28.6	7.1	92.9	7.1
	40대	(21)	52.4	47.6	0.0	100.0	0.0
	50대	(18)	61.1	27.8	11.1	88.9	11.1
	60대 이상	(29)	44.8	51.7	0.0	96.6	3.4
권역별							
	경부권	(34)	61.8	35.3	2.9	97.1	2.9
	동부권	(11)	27.3	72.7	0.0	100.0	0.0
	북부권	(20)	40.0	55.0	5.0	95.0	5.0
	서해안권	(32)	46.9	46.9	3.1	93.8	6.3

2. 경기도민 공론화 필요성

- 도심 내 군공항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은 가운데, 이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도민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압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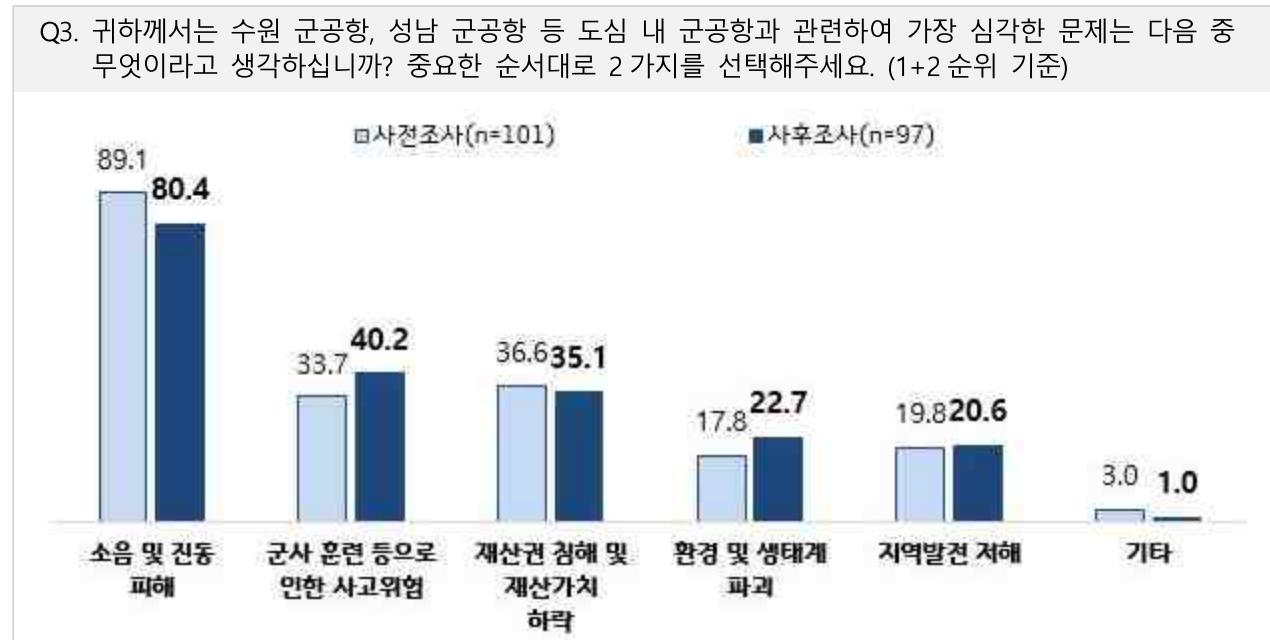


(%)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	필요하지 않음
사전 조사	(101)	58.4	38.6	2.0	1.0	97.0	3.0
사후 조사	(97)	72.2	26.8	1.0	-	99.0	1.0
성별	남	(48)	66.7	31.3	2.1	-	97.9
	여	(49)	77.6	22.4	0.0	-	100.0
연령	18~29세	(15)	60.0	40.0	0.0	-	100.0
	30대	(14)	64.3	35.7	0.0	-	100.0
	40대	(21)	85.7	14.3	0.0	-	100.0
	50대	(18)	72.2	22.2	5.6	-	94.4
	60대 이상	(29)	72.4	27.6	0.0	-	100.0
권역별	경부권	(34)	73.5	23.5	2.9	-	97.1
	동부권	(11)	72.7	27.3	0.0	-	100.0
	북부권	(20)	65.0	35.0	0.0	-	100.0
	서해안권	(32)	75.0	25.0	0.0	-	100.0

3. 도심 내 군공항 관련 심각한 문제

- 도심 내 군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전·사후 조사 모두 “소음 및 진동 피해”를 가장 많이 언급함.** (1+2순위 기준)
 - 사전 조사에서는 ‘재산권 침해 및 재산가치 하락’(36.6%)이 ‘군사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33.7%)보다 높았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40.2%)을 ‘재산권 침해 및 재산가치 하락’(35.1%)보다 더 많이 언급함.

Q3. 귀하께서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등 도심 내 군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2 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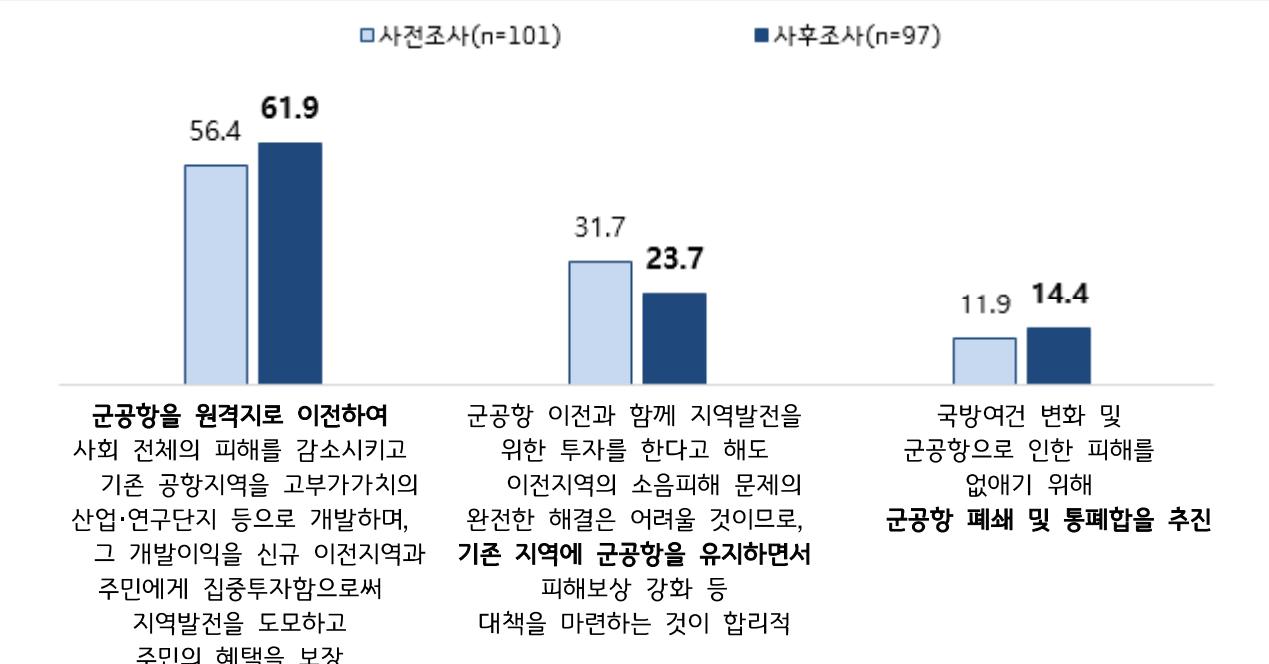


(1+2순위, %)	사례수	소음 및 진동 피해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재산권 침해 및 재산가치 하락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발전 저해	기타
사전 조사	(101)	89.1	33.7	36.6	17.8	19.8	3.0
사후 조사	(97)	80.4	40.2	35.1	22.7	20.6	1.0
성별							
남	(48)	77.1	33.3	39.6	20.8	27.1	2.1
여	(49)	83.7	46.9	30.6	24.5	14.3	0.0
연령							
18~29세	(15)	86.7	40.0	40.0	13.3	20.0	0.0
30대	(14)	85.7	42.9	35.7	7.1	21.4	7.1
40대	(21)	66.7	61.9	38.1	23.8	9.5	0.0
50대	(18)	77.8	38.9	27.8	33.3	22.2	0.0
60대 이상	(29)	86.2	24.1	34.5	27.6	27.6	0.0
권역별							
경부권	(34)	76.5	47.1	32.4	26.5	17.6	0.0
동부권	(11)	81.8	27.3	54.5	18.2	18.2	0.0
북부권	(20)	80.0	40.0	35.0	15.0	25.0	5.0
서해안권	(32)	84.4	37.5	31.3	25.0	21.9	0.0

4.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 방법

-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군공항 원격지 이전' 의견이 사전·사후 모두 가장 많았음. 한편, '기존 지역 군공항 유지'가 23.7%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도 14.4%임. (사후 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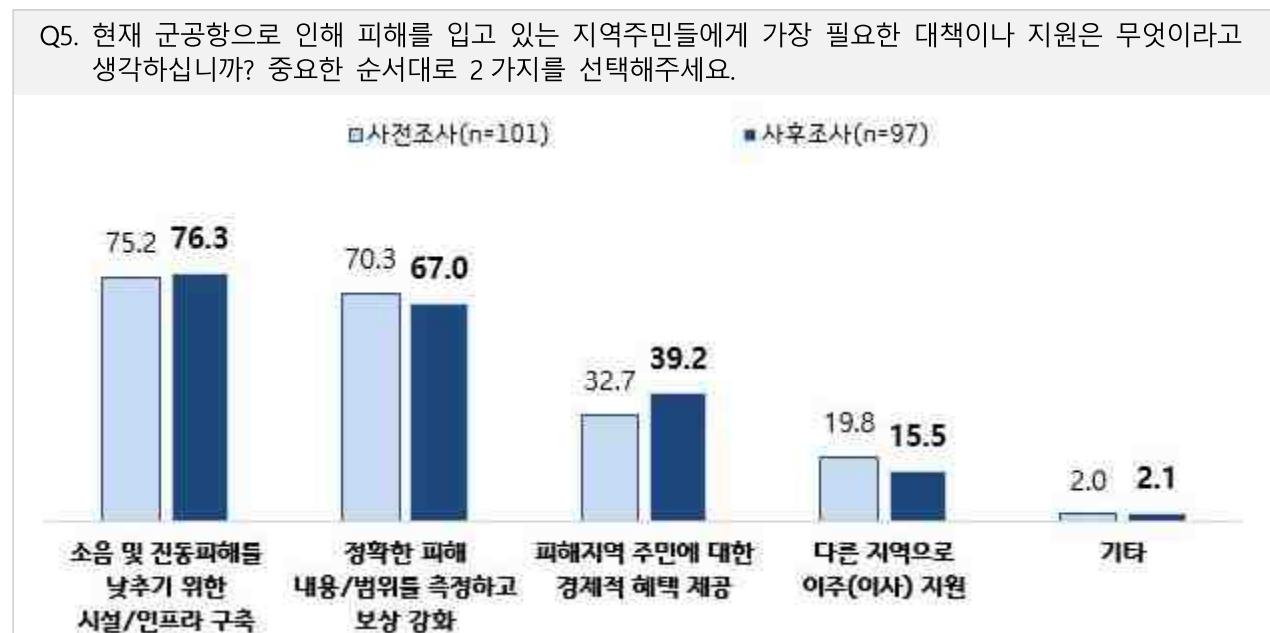
Q4.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사례수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	기존 지역에 군공항 유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사전 조사	(101)	56.4	31.7	11.9
사후 조사	(97)	61.9	23.7	14.4
성별				
남	(48)	58.3	22.9	18.8
여	(49)	65.3	24.5	10.2
연령				
18~29세	(15)	73.3	26.7	0.0
30대	(14)	71.4	21.4	7.1
40대	(21)	66.7	19.0	14.3
50대	(18)	55.6	27.8	16.7
60대 이상	(29)	51.7	24.1	24.1
권역별				
경부권	(34)	67.6	14.7	17.6
동부권	(11)	81.8	18.2	0.0
북부권	(20)	65.0	25.0	10.0
서해안권	(32)	46.9	34.4	18.8

5. 군공항 피해지역에 필요한 대책 및 지원

- 현재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소음 및 진동피해를 낮추기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과 '정확한 피해 내용/범위를 측정하고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전·사후 모두 일관되게 높았음. (1+2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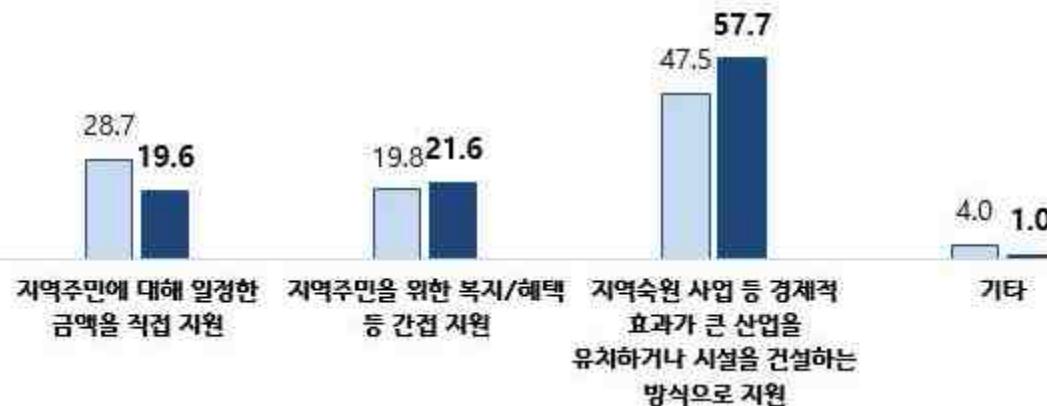
(1+2순위, %)		사례수	소음 및 진동피해를 낮추기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	정확한 피해 내용/범위를 측정하고 보상 강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	다른 지역으로 이주(이사) 지원	기타
사전 조사	(101)		75.2	70.3	32.7	19.8	2.0
사후 조사	(97)		76.3	67.0	39.2	15.5	2.1
성별	남 여	(48) (49)	72.9 79.6	54.2 79.6	52.1 26.5	18.8 12.2	2.1 2.0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 (14) (21) (18) (29)	66.7 78.6 76.2 83.3 75.9	80.0 85.7 81.0 61.1 44.8	53.3 28.6 33.3 38.9 41.4	0.0 7.1 9.5 11.1 34.5	0.0 0.0 0.0 5.6 3.4
권역별	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34) (11) (20) (32)	79.4 81.8 75.0 71.9	55.9 72.7 65.0 78.1	47.1 27.3 40.0 34.4	17.6 18.2 20.0 9.4	0.0 0.0 0.0 6.3

6.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

-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숙원 사업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하거나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전·사후 모두 가장 높았음.
- 경제적 보상방안으로 '지역주민 직접 지원' 의견이 사전 조사 대비 감소함.

Q6.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으로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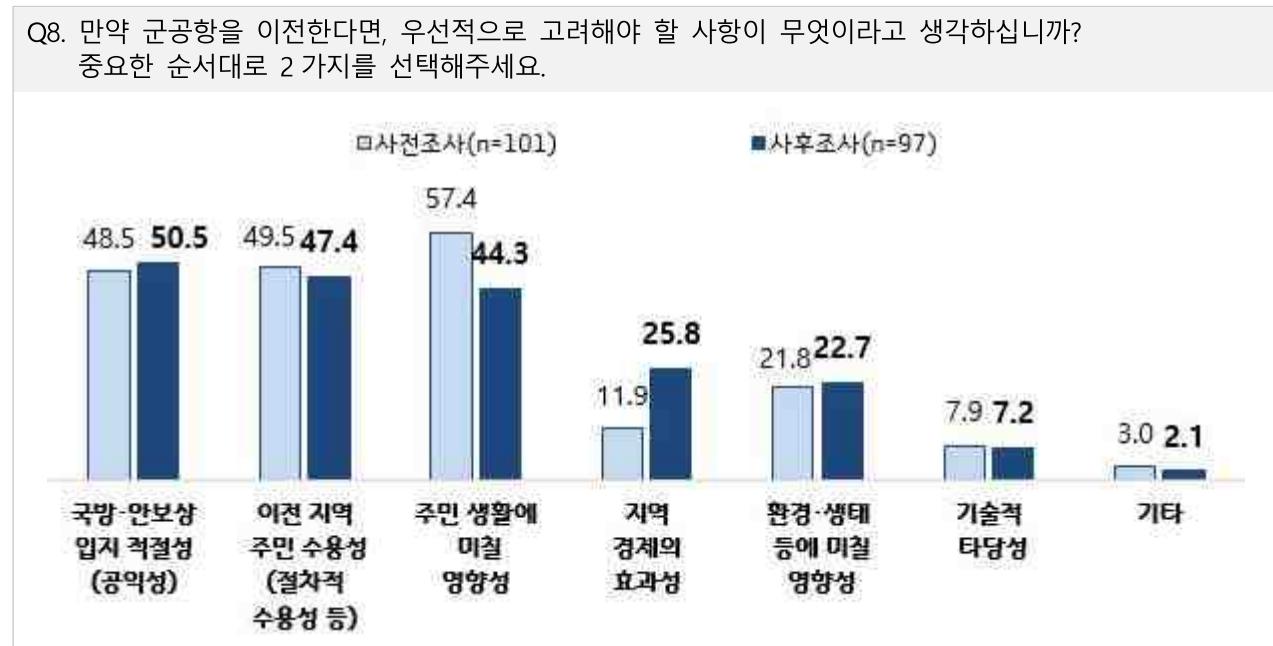
□사전조사(n=101) ■사후조사(n=97)



(%)		사례수	지역주민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혜택 등 간접 지원	지역 숙원 사업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타
사전 조사	(101)		28.7	19.8	47.5	4.0
사후 조사	(97)		19.6	21.6	57.7	1.0
성별						
남	(48)		10.4	20.8	68.8	0.0
여	(49)		28.6	22.4	46.9	2.0
연령						
18~29세	(15)		33.3	13.3	53.3	0.0
30대	(14)		21.4	21.4	57.1	0.0
40대	(21)		19.0	28.6	52.4	0.0
50대	(18)		22.2	33.3	44.4	0.0
60대 이상	(29)		10.3	13.8	72.4	3.4
권역별						
경부권	(34)		11.8	14.7	73.5	0.0
동부권	(11)		18.2	18.2	54.5	9.1
북부권	(20)		25.0	20.0	55.0	0.0
서해안권	(32)		25.0	31.3	43.8	0.0

7. 군공항 이전 시 우선 고려사항

-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공익성)', '이전 지역주민 수용성(절차적 수용성 등)'이 사전·사후 모두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1+2순위 기준)
-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은 사전 조사 대비 감소한 반면, '지역경제의 효과성'은 사전 조사 대비 상승함. '환경·생태 등에 미칠 영향성'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의견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임.



(1+2순위, %)		사례수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이전 지역주민 수용성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성	지역 경제의 효과성	환경·생태 등에 미칠 영향성	기술적 타당성	기타
사전 조사	(101)	48.5	49.5	57.4	11.9	21.8	7.9	3.0	
사후 조사	(97)	50.5	47.4	44.3	25.8	22.7	7.2	2.1	
성별		남 여	(48) (49)	62.5 38.8	35.4 59.2	43.8 44.9	27.1 24.5	18.8 26.5	10.4 4.1 2.1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 (14) (21) (18) (29)	73.3 57.1 42.9 38.9 48.3	53.3 50.0 47.6 50.0 41.4	33.3 35.7 57.1 38.9 48.3	20.0 28.6 23.8 38.9 20.7	20.0 0.0 23.8 27.8 31.0	0.0 14.3 4.8 5.6 10.3	0.0 14.3 0.0 0.0 0.0
권역별	경부권 동부권 북부권 서해안권	(34) (11) (20) (32)	50.0 27.3 55.0 56.3	41.2 54.5 50.0 50.0	47.1 36.4 40.0 46.9	26.5 36.4 25.0 21.9	23.5 36.4 20.0 18.8	8.8 9.1 10.0 3.1	2.9 0.0 0.0 3.1

8. 군공항 이전 시 선호시설 추가 인식

- 군공항 이전 시, 군공항 이외에 다양한 선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사전·사후 모두 매우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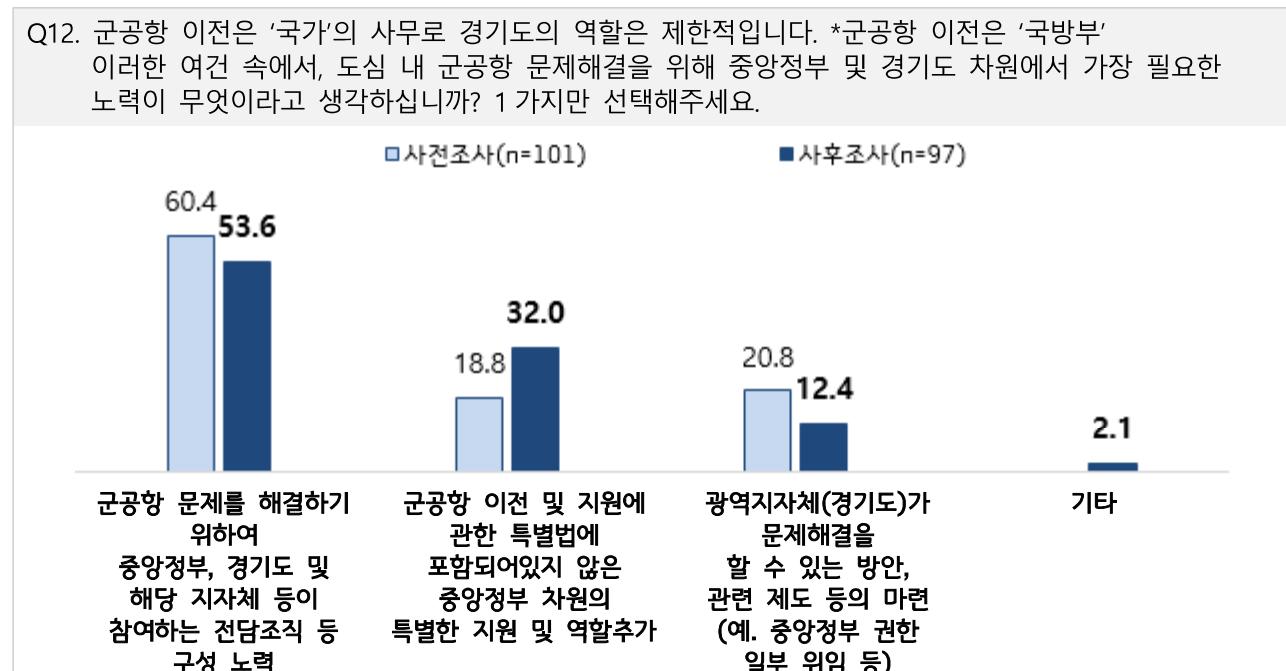
Q9. 만약 군공항을 이전한다면,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군공항 이외에 다양한 선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례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될 것	도움되지 않을 것
사전 조사	(101)	41.6	42.6	13.9	2.0	84.2	15.8	
사후 조사	(97)	63.9	30.9	4.1	1.0	94.8	5.2	
성별	남	(48)	68.8	25.0	4.2	2.1	93.8	6.3
	여	(49)	59.2	36.7	4.1	0.0	95.9	4.1
연령	18~29세	(15)	40.0	60.0	0.0	0.0	100.0	0.0
	30대	(14)	78.6	14.3	0.0	7.1	92.9	7.1
	40대	(21)	61.9	38.1	0.0	0.0	100.0	0.0
	50대	(18)	50.0	33.3	16.7	0.0	83.3	16.7
	60대 이상	(29)	79.3	17.2	3.4	0.0	96.6	3.4
권역별	경부권	(34)	67.6	26.5	5.9	0.0	94.1	5.9
	동부권	(11)	72.7	27.3	0.0	0.0	100.0	0.0
	북부권	(20)	55.0	40.0	5.0	0.0	95.0	5.0
	서해안권	(32)	62.5	31.3	3.1	3.1	93.8	6.3

9. 중앙정부 및 경기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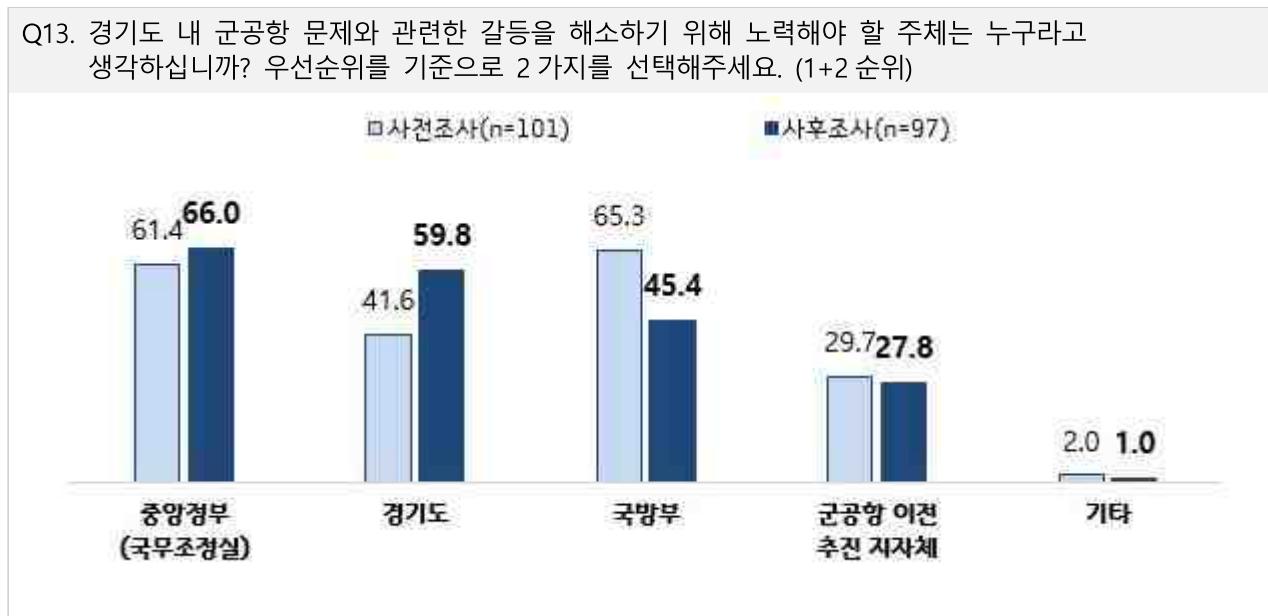
- 도심 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으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 구성 노력'을 꼽은 응답이 사전·사후에서 모두 가장 높았음.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 및 역할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전 조사 대비 상승함.



(%)		사례수	전담조직 구성 노력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 역할추가	광역지자체 문제해결 방안, 관련 제도 마련	기타
사전 조사	(101)		60.4	18.8	20.8	-
사후 조사	(97)		53.6	32.0	12.4	2.1
성별						
남	(48)		50.0	41.7	8.3	0.0
여	(49)		57.1	22.4	16.3	4.1
연령						
18~29세	(15)		66.7	20.0	6.7	6.7
30대	(14)		50.0	28.6	14.3	7.1
40대	(21)		57.1	28.6	14.3	0.0
50대	(18)		55.6	33.3	11.1	0.0
60대 이상	(29)		44.8	41.4	13.8	0.0
권역별						
경부권	(34)		61.8	29.4	8.8	0.0
동부권	(11)		36.4	54.5	9.1	0.0
북부권	(20)		45.0	30.0	20.0	5.0
서해안권	(32)		56.3	28.1	12.5	3.1

10. 중앙정부 및 경기도 노력

- 경기도 내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주체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순으로 언급함. (사후 조사, 1+2순위 기준)
- 사전 조사 대비 '경기도'를 꼽은 응답이 증가한 반면, '국방부'를 꼽은 응답은 감소하였음.



(1+2순위, %)	사례수	중앙정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국방부	군공항 이전 추진 자체	기타
사전 조사	(101)	61.4	41.6	65.3	29.7	2.0
사후 조사	(97)	66.0	59.8	45.4	27.8	1.0
성별	남	(48)	72.9	54.2	52.1	20.8
	여	(49)	59.2	65.3	38.8	34.7
연령	18~29세	(15)	60.0	53.3	46.7	33.3
	30대	(14)	71.4	64.3	50.0	14.3
	40대	(21)	57.1	71.4	47.6	23.8
	50대	(18)	72.2	61.1	44.4	22.2
	60대 이상	(29)	69.0	51.7	41.4	37.9
권역별	경부권	(34)	70.6	55.9	38.2	35.3
	동부권	(11)	36.4	81.8	45.5	36.4
	북부권	(20)	65.0	65.0	55.0	10.0
	서해안권	(32)	71.9	53.1	46.9	28.1

III 도민참여단 자유의견

1. 도심 내 군공항 유지 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

- 도심 내 군공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보상)”, “소음/진동 완화 대책”, “이주 지원”, “군공항 이전/축소/통폐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Q7. 도심내 군공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 인구 밀집 지역으로, 소음/진동 피해보상을 위한 많은 예산 지출
- 도심 내 안전사고 우려로 공군이 야간훈련 및 무장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보상)]

- 현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 훈련을 줄이고,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
- 안전이 확보되어있음을 주민에게 인지시키고 적절한 보상, 정확한 분배 진행
- 안전교육 강화, 성과보수 제공, 개별보상보다는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둔 보상대책 마련
- 예산 증액 및 주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
- 개개인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지나 다른 편의시설로 대체보상

[소음/진동 완화 대책]

- 근본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투,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연구 진행)
- 방음 방진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소음을 줄이기 위해 훈련시간 조절 필요
- 야간훈련을 시뮬레이션 등으로 대체

[이주 지원]

- 이주하도록 만들기
- 이전 비용지원, 그 자리는 활주로 만드는 데 쓰거나 분양하기. 좀 더 공간 확보 필요함

[군공항 이전/축소/통폐합]

- 이해관계인 및 인구밀도가 적은 곳으로 이전
- 점진적 폐쇄로 소음 진동 문제를 해결하여 예산집행을 줄이고 폐쇄에 의한 군 전략을 보완한 훈련 작전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

2.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

-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상 강화(인프라 확충 등)”, “군공항 관련 소통/홍보 강화”, “이전 지역 공모/선정”, “민간공항과 통합 건설”, “현행 유지/축소/통폐합”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Q10. 현재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 이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절차’에 따르면, 이전 지역에서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공항 이전은 불가함
- 현실적으로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거의 없음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상 강화]

- 이전에 대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주민 복지 강화가 확실하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나타날 것
-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할 때처럼 이전 시 파격적인 지원 약속을 하고 실행
- 최대한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설득될만한 보상 액수가 제시되어야 함
- 유인책을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유인책 설정 시 이번처럼 주민 공론화 과정 필요

[군공항 문제 관련 소통/홍보/설득]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유치 희망 지역 모집 또는 예비후보지 지역 자체와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당장은 없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전 지역을 모색
-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홍보, 자체와 중앙정부 소통 방안 마련, 주민투표 의무화

[이전 지역 공모/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선정
-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으니 선정을 할 수 밖에 없다
- 국방부에서 후보군을 다수 선정해서 공론화 진행해야

[민간공항과 통합 건설]

- 민간공항 함께 유치
- 군 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단점만 주는 것이니, 민간공항 통합,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장점을 내세워 이전
- 민간공항을 군공항과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주민에게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

[현행 유지/축소/통폐합]

-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주민의 불편은 크지만 설득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 도심 내 군 공항 단계적 축소 후 폐쇄

3.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시 발생하는 문제 관련

-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폐쇄/통폐합 불가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 저감 노력”, “보상과 이주 지원”, “군공항 이전/축소”, “국민 의견수렴/소통” 등이 언급됨.

Q11.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에 대해, 공군본부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 경기도 내 군공항(수원)은 수도 국방을 위한 최전방 공군기지로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2018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피해 저감 노력/보상]

- 국가 안보에 필요해 폐쇄가 어렵다면 첨단화 등을 통해 피해를 축소해야 한다
- 폐지 없이 유지하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함
 ex) 군사훈련 축소 등
- 국가안보를 위해 유지하되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
- 주민이 군 공항 반경 밖으로 나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
-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주변 필요 공간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소음 등 기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군공항 이전/축소]

- 안보 상황상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 해당 지역 피해가 크다면 이전해야
- 군 공항은 혐오시설일 수 있고 민간공항은 선호시설일 수 있으므로 적절히 통합/이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 반드시 필요한 기종과 부대시설을 남기는 것으로 규모를 축소

[국민의견 수렴/소통]

- 방법이 없다면 국민을 잘 설득하고 수용방안을 이끌어내는데 최대로 노력해야 할 듯
- 안보 국익이 우선이라면 여러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 국방을 명분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도에서 어긋남. 따라서 국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함
- 지역주민이 수원공항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함

4. 도심내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 사항

-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주민 의견수렴(토론회, 공론화 등)”,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소통, 홍보 강화 등)”, “보상에 대한 논의”, “중앙정부/국방부/경기도 역할”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Q14. 경기도 내 도심 군공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추가적인 주민 의견수렴(토론회, 공론화 등)]

- 화성시와 수원시 시민의 의견 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해 당사자 포함 전체 국민의 의견을 공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 공론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군공항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소통, 홍보 강화 등)]

-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대부분의 도민이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다
-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홍보와 토론, 더 적극적인 (주민)설득
- 국가안보 등 성역 없는 정보공개, 자유로운 논의가 필요
- 주민 대상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주민설명회, 인터넷(SNS), 지역언론(방송) 등

[보상에 대한 논의]

- 피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그 피해에 맞는 보상안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
- 전문가와 이러한 숙의 의견을 통해 모두의 의견을 합친 보상 관련법 개정이 필요
- 개인적인 보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보상 필요

[중앙정부/국방부/경기도 역할]

- 국가 주도의 기획단이 필요하고 분쟁이나 조정 등 여론 수렴에는 경기도 역할이 필요
-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민/군/관 합동 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전해야 함

[기타]

-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문 조사를 해도 될 듯
- 초기 단계에서 공론화를 진행해서 도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함
- 화성시 측에서도 교육자로 참여 필요

IV 도민참여단 만족도

- 「2022 경기도공론화」 2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97명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했음.

1. 운영과정의 공정성

- 경기도공론화 운영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사회자'(94.8%), '퍼실리테이터'(92.8%), '전반적인 운영과정'(87.6%), '자료집 및 참고자료'(79.4%),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67.0%) 등의 순으로 '공정했다'는 평가가 높았음.

Q1.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22 경기도 공론화의 운영과정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사후 조사, n=97%)



"매우+공정한 편" (%)		사례수	자료집 및 참고자료	전문가 발표 및 질의응답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전반적인 운영과정
사후 조사	(97)	79.4	67.0	94.8	92.8	87.6	
성별	남	(48)	77.1	62.5	93.8	93.8	85.4
	여	(49)	81.6	71.4	95.9	91.8	89.8
연령	18~29세	(15)	73.3	60.0	86.7	93.3	60.0
	30대	(14)	64.3	57.1	100.0	85.7	92.9
	40대	(21)	71.4	57.1	95.2	95.2	90.5
	50대	(18)	72.2	55.6	88.9	94.4	83.3
	60대 이상	(29)	100.0	89.7	100.0	93.1	100.0
권역별	경부권	(34)	73.5	76.5	88.2	85.3	82.4
	동부권	(11)	90.9	72.7	100.0	100.0	90.9
	북부권	(20)	90.0	75.0	100.0	100.0	90.0
	서해안권	(32)	75.0	50.0	96.9	93.8	90.6

2. 공론화 인식

- 경기도공론화에 참여한 후,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97.9%), '앞으로도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97.9%),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93.8%), '경기도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여도 경기도의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85.6%) 등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임.



"매우+ 그렇다" (%)		사례수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앞으로도 경기도 정책 수립 시 도민 의견 더욱 수렴	경기도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정책을 추진해도 경기도 결정 신뢰	이번 공론화의 최종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 존중
사후 조사		(97)	97.9	97.9	85.6	93.8
성별	남	(48)	97.9	97.9	85.4	93.8
	여	(49)	98.0	98.0	85.7	93.9
연령	18~29세	(15)	93.3	93.3	80.0	86.7
	30대	(14)	100.0	100.0	71.4	85.7
	40대	(21)	100.0	100.0	90.5	95.2
	50대	(18)	94.4	94.4	83.3	94.4
	60대 이상	(29)	100.0	100.0	93.1	100.0
권역별	경부권	(34)	97.1	97.1	85.3	88.2
	동부권	(11)	100.0	100.0	81.8	100.0
	북부권	(20)	95.0	95.0	80.0	95.0
	서해안권	(32)	100.0	100.0	90.6	96.9

3. 2022 경기도공론화 만족도

- 경기도공론화에 대한 만족도는 '도민참여단 선정과정'(91.8%), '운영과정 전반'(85.6%), '토론 및 숙의 장소'(83.5%), '토론 및 숙의 프로그램'(81.4%) 순으로 높았으며, 도민참여단 80-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Q3. 다음은 「2022 경기도공론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사후 조사, n=97%)



"매우+ 약간 만족" (%)		사례수	도민참여단 선정과정에서의 만족도	토론 및 숙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	토론 및 숙의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사후 조사		(97)	91.8	83.5	81.4	85.6
성별	남	(48)	89.6	79.2	77.1	83.3
	여	(49)	93.9	87.8	85.7	87.8
연령	18~29세	(15)	80.0	66.7	60.0	66.7
	30대	(14)	85.7	85.7	64.3	64.3
	40대	(21)	95.2	85.7	90.5	95.2
	50대	(18)	88.9	72.2	77.8	83.3
	60대 이상	(29)	100.0	96.6	96.6	100.0
권역별	경부권	(34)	91.2	82.4	82.4	85.3
	동부권	(11)	90.9	90.9	90.9	90.9
	북부권	(20)	85.0	80.0	80.0	90.0
	서해안권	(32)	96.9	84.4	78.1	81.3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22 경기도공론화에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를 비롯한 도민참여단 100명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주관기관 : 2022 경기도공론화추진단

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

SQ1. 귀하의 분임(조)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 조사는 숙의토론 진행과정에서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조사로 추이
분석을 위해 응답자 정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셔야 토론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 향후 활동비 지급
의 기준이 될 예정이오니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분임(조)

※ 먼저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평택오산 공군기지 등 다수의 군공항이 있습
니다.

그 중, 수원 및 성남에 소재한 군공항의 경우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피해 및 안전
문제 등으로 폐쇄, 이전 요구 등이 있습니다.

Q1.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대체로 심각하다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Q2.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도민 공론화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Q3. 귀하께서는 수원 군공항, 성남 군공항 등 도심 내 군공항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 _____(보기 1~5 로테이션)

- ① 소음 및 진동 피해
- ② 환경 및 생태계 파괴
- ③ 지역발전 저해
- ④ 재산권 침해 및 재산가치 하락
- ⑤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 ⑥ 기타 : _____

Q4. 귀하께서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주세요.(보기 1~3 로테이션)

- ①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여 사회 전체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기존 공항지역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개발하며, 그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혜택을 보장
- ② 군공항 이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전지역의 소음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지역에 군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 ③ 국방여건 변화 및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을 추진

※ 먼저 현재 군공항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Q5. 현재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이나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 _____(보기 1~4 로테이션)

- ① 다른 지역으로 이주(이사) 지원
- ②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
- ③ 정확한 피해 내용/범위를 측정하고 보상 강화
- ④ 소음 및 진동피해를 낮추기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
- ⑤ 기타 : _____

Q6.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방안으로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보기 1~3 로테이션)

- ① 지역주민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원
- ②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혜택 등 간접 지원
- ③ 지역숙원 사업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을 유치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지원
- ④ 기타 : _____

Q7. 도심내 군공항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 ▶ 인구밀집 지역으로, 소음/진동 피해보상을 위한 많은 예산 지출
- ▶ 도심 내 안전사고 우려로 공군이 야간훈련 및 무장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다음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절차에 따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여쭤겠습니다.

Q8. 만약 군공항을 이전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 순위: _____ 2 순위 : _____(보기 1~6 로테이션)

- ① 이전 지역 주민 수용성(절차적 수용성 등)
- ② 기술적 타당성
- ③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공익성)
- ④ 지역 경제의 효과성
- ⑤ 환경·생태 등에 미칠 영향성
- ⑥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성
- ⑦ 기타 : _____

Q9. 만약 군공항을 이전한다면,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군공항 이외에 다양한 선호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Q10. 현재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 이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절차’에 따르면,
이전 지역에서 군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공항 이전은 불가함
- ▶ 현실적으로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거의 없음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다음은 국방여건 변화 및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군공항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11.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에 대해, 공군본부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는데요,

- ▶ 경기도 내 군공항(수원)은 수도 국방을 위한 최전방 공군기지로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2018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귀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Q12.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사무로 경기도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심 내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¹ 1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보기 1~3 로테이션)

- ①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 등 구성 노력
- ②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 및 역할추가
- ③ 광역지자체(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관련 제도 등의 마련(예. 중앙정부 권한 일부 위임 등)
- ④ 기타 : _____

Q13. 경기도내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2 가지를 선택해주세요.

1 순위 : _____ 2 순위 : _____ (보기 1~4 로테이션)

- ① 중앙정부(국무조정실)
- ② 국방부

- ③ 경기도
- ④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
- ⑤ 기타 : _____

Q14. 경기도내 도심 군공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도민참여단 만족도 설문지

※ 지금부터는 2022 경기도공론화 참여단 만족도를 여쭙겠습니다.

2022 경기도공론화에 참여해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론화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도에 대해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Q1.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2022 경기도공론화의 운영과정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매우 공정했다	공정한 편 이었다	보통이다	공정하지 않은 편 이었다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1	자료집 및 참고자료	5	4	3	2	1
2	전문가(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	5	4	3	2	1
3	사회자	5	4	3	2	1
4	파실리레이터(분임토의 진행자)	5	4	3	2	1
5	전반적인 운영과정	5	4	3	2	1

Q2. 다음은 “공론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2022 경기도 공론화”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5	4	3	2	1
2	앞으로도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야 한다.	5	4	3	2	1
3	경기도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정책을 추진하여도 경기도의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5	4	3	2	1
4	이번 공론화의 최종 결과가 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5	4	3	2	1

Q3. 다음은 「2022 경기도공론화」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도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의 만족도	5	4	3	2	1
2	토론 및 숙의 장소에 대한 만족도	5	4	3	2	1
3	토론 및 숙의 프로그램 구성 만족도	5	4	3	2	1
4	운영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	4	3	2	1

Q4. 마지막으로 「2022 경기도공론화」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2022 경기도공론화 「도심 내 군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제 자료

I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

1. 1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9/27)

- 홍수정 행정과 갈등연구소 대표 -

2022 경기도 공론화 워크숍
전문가 발표

군 공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이슈

2022.09. 27.

홍수정 행정과 갈등연구소 대표

I

군공항 갈등 개요

- 01 국내군공항현황
- 02 군공항 갈등의 배경과 원인

01 국내 군공항 현황

-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16개의 육군공항, 8개 공군공항, 2개 해군공항 등 총 30여 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며 7개의 공항사업이 추진 중
 - 이중 경기도에는 육군공항 9개소, 공군공항 2개소, 미군공항 3개소 등이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의되는 항공작전기지 중 군용 전술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시설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로써 ‘군공항’(관련법상 정의)
 - 경기 4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2곳, 충청 3곳, 강원 2곳, 광주·전라 2곳이며,
 - 인구 100만 이상 거주 대도시에 4개(부산, 대구, 광주, 수원),
 - 인구 80만 이상 도시에 2개(성남, 청주) 기지 위치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 대통령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너목까지

3

01 국내 군공항 현황

4

<경기도 소재 군공항>

비행장 명	위치	비고
이천비행장	경기도 이천시	육군공항
수색비행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소비행장	경기도 남양주시	
파주비행장	경기도 파주시	
광단비행장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비행장	경기도 양주시	
가평비행장	경기도 가평군	
포천비행장	경기도 포천시	
용인비행장	경기도 용인시	
서울공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공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군공항
오산 공군기지	경기도 평택시	
USAG 험프리스	경기도 평택시	
캠프 스텐리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공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추진 중

<군사보호법상 전술항공기지>

명 칭	위 치
K-1	부산광역시 강서구
K-2	대구광역시 동구
K-3	경상북도 포항시
K-4	경상남도 사천시
K-6	경기도 평택시
K-8	전라북도 군산시
K-13	경기도 수원시
K-16	경기도 성남시
K-18	강원도 강릉시
K-46	강원도 원주시
K-55	경기도 평택시
K-57	광주광역시 광산구
K-58	경상북도 예천군
K-59	충청북도 청주시
K-75	충청북도 충주시
K-76	충청남도 서산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가~너목

02**군공항 갈등의 배경과 원인**

- 국가 안보차원, 군 작전상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토지(지역) 점유하고 있는 현실
- 군사시설에 대한 비선호 인식의 강화, 국방업무수행에 부정적 영향
- 군사시설 가운데 사격장, 훈련장, 탄약저장시설, 군공항의 사고위험성, 소음피해의 영향범위가 넓은 대규모 시설 가운데 한 비선호 인식의 강화
- 재산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의 제약으로 군사시설과 관련한 갈등 발생
- 군 공항의 경우, 1950~60년대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되었고 국가안보논리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 1980년대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특히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구·수원·광주 공항은 도시 중심으로 편입되며 '소음피해'와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 누적

 **1995년 지방자치제 시작과 재산권 및 사익추구, 참여의식 확산.. 피해 해결 요구**

**군공항 갈등사례**

- 01 대구군공항 갈등
- 02 광주군공항 갈등
-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01 대구 군공항 갈등



1950년대



2020년대

7

01 대구 군공항 갈등

● 갈등의 배경과 원인

- 1936년 일본군에 의해 비행장 건설되고,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한국군과 미 공군 주둔
-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공항 주변은 벌판이었으나 대구 시가지가 점차 커지고 주변 지역도 함께 개발되면서 소음문제 발생 시작

● 주요 갈등과정

- 2007년,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행단 이전을 요구하고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며 갈등 표면화
 - *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동부 지역, 북구 검단동·복현동·동서변동·연경동 등
- 이후 정치권의 관심으로 공약화, 이전건의, 영남권신공항과 연계되는 가운데 이전 후보지 갈등(군위군과 의성군)으로 확산
- 2020년,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최종합의, 확정. 기본계획 수립 예정

8

01 대구 군공항 갈등

● 주요 이해관계자

- 국방부(공군)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주민
- 예비후보지 지자체(군위군, 의성군 등), 예비후보지 지자체 주민
- 경상북도



<http://www.dg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



<http://www.heral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93>

01 대구 군공항 갈등

● 이전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주변 항공기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해소 · 시 · 도민의 여객 · 물류 등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항 건설 · 소음피해 배상액 절감 등 및 공군시설 현대화에 따른 국방력 강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신공항건설 및 종전부지개발 -사업규모 : 15.3km²(463만평, 현 규모대비 2.3배, 종전부지 6.71km²) -공군부지 : 11.7km²(353만평, 활주로, 격납고, 탄약고, 생활관, 관사 등) -소음완충지역 : 3.6km²(110만평)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2023년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조 2,465억원(기부대양여방식) -신기지 건설비(5조 7,744억원)-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3,000억 원) -종전부지 개발(6,363억원) -자본(금융이자)비용(5,358억원) (※ 민간공항은 이전부지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비 · 사업규모 확정)

10

02 광주 군공항 갈등



11

02 광주 군공항 갈등

● 갈등의 배경과 원인

- 1988년 광산군, 송정시가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송정일대의 광주공항도 함께 편입
- 1990년대 이후 송정일대에 여러 택지지구가 주변에 들어섰고 2000년대 후반에는 광주의 팽창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수완지구와 첨단2지구 지역 개발되면서 전투기(T-50) 소음에 대한 민원 발생

● 주요 갈등과정

- 2013년 4월, 군공항 소음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3년 9월, 광주광역시는 공군기지 이전에서 민간 공항까지 연계 이전 검토하며 기존 부지를 솔마루시티로 개발 발표(광주광역시 최대규모 신도시)
- 이후 정치권 관심으로 무안국제공항 패키지 이전 제안
- 국방부, 제1전투비행단 이전에 고흥군 등 추가후보지 발표, 지역주민 반발 및 확산
- 2022년 현재, 무안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나 극렬 반대중, 타지역도 검토 중

12

02 광주 군공항 갈등

● 주요 이해관계자

- 국방부(공군)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주민
- 예비후보지 지자체(무안군, 고흥군, 해남군 등 여타 대부분 지역), 예비후보지 지자체 주민
- 전라남도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35979>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10928106700054>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96>

13

02 광주 군공항 갈등

● 이전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 ·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 및 시설을 광주광역시에 양여하는 것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 사업규모 : 15.3 km² (463만평) - 공군부지 : 11.7 km² (353만평) - 소음완충지역 : 3.6 km² (110만평)
사업기간	· 2014년-2018년(진행중)
사업비	· 5조 7,480억원 (추정)

14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15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 갈등의 배경과 원인

- 1938년, 일제의 건설, 1949년 미군정관리, 1953년 2월 제10전투비행단 창설후 1954년 11월 수원화성비행장(K-13)을 인수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지리적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선에 존재(총면적 6.3km²중 수원시가 5.2km²)
- 당시 수원인구는 7.3천명이었으나 2021년 약 118만명으로 16배이상 증가, 공항주변에 주거 지역 등 형성되어 약 45만명의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화성시도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향남읍, 비봉면, 양감면, 정남면 등 7개 지역 주민 22만6천여명이 피해)
- 2000년대 들어 민원을 넘어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소송으로 진행. 2018년 기준 소송참여인원은 59만명(대구에 이어 2번째)으로, 이해당사자는 수원시 4개동((세류2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과 화성시 2개 동(화산동, 진안동)

● 주요 갈등과정

- 2003년, 군공항 주변(병점, 세류) 개발 및 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발족
- 2006년, 수원시의회,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특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대책요구
- 2013년 4월, 군공항 소음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4년 3월, 수원시, 국내 최초 군공항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 2017년 2월, 갈등관리협의체(국방부, 공군, 수원시, 경기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발표
- 이후, 화성시 및 지역주민반대, 갈등심화로 이전사업진행 중단

16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 이전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에서 신규 이전 군 공항 시설을 건설 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군공항건설,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사업 : 약 14.5 km²(440만평, 신군공항 건설) 종전부지개발 : 5.2 km² (160만평, 도시개발) 지원사업 : 소음완충지역매입(2.8.km²), 소음영향지역보상 이전주변지역(지역주민지원, 지역발전지원)
사업기간	· 2013년-2030년
사업비	· 6조 9,997억 원 (추정)

17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 주요 이해관계자

- 국방부(공군, 미군)
- 수원특례시, 화성시
- 수원특례시, 화성시 주민
- 예비후보지 지자체(화성시 등), 예비후보지 지자체 주민(화옹지구 등)
- 경기도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468>



<http://www.todayg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7>

18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 이전 반대의 목소리... 화성시 지역사회의 반대



화성시민 71%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이유는 "소음피해 우려"
2019/01/11 11:00

소음피해

화성시 어촌조사..."사람들의 광고한 반대여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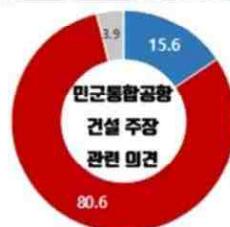
경기 수원시에 있는 군(軍) 공항을 이웃 자치체인 화성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민의 71%가 화성시로의 이전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77.4% 반대, 왜?

2021 시민안시도 조사 결과 화성시민 77.4%는 현대 경기남부 인근을 찾고 현재 화성에 비 같으며, 화성시와 주변 재개발이라는 이유로 이전하는 거지대로, 이전해야

* 화성시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
... 이전후보지 재검토!



19

03 수원화성 군공항 갈등

● 이전 반대 이유1 : 절차적 문제(후보지 선정과정의 부적절성, 지역수용성 부재)

- 2017년 2월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 지정되며 지역 의견청취가 없이 결정
- 화성시, 자치권한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12월 각하). 자자체간 논의, 사전 합의 전무

● 이전 반대 이유2 : 소음피해 (역사성(경험)에 기반한 경험과 재차 발생 우려)

- 이전후보지는 미공군 폭격장으로 54년간 사용한 매향리 사격장에서 8km 이격된 곳
- 당시 주민들은 소음피해는 물론 재산권을 침해당하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경험

● 이전 반대 이유3 : 지역이기주의(수원시 이익을 위한 이전, 비선호시설 타지자체에 떠넘기기)

- 수원시의 이익사업에 지나지 않은 이전사업의 목적성
- 개발 제한, 소음, 환경파괴 등 현재 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화성시민에게 전가

● 이전 반대 이유4 : 지역의 (현재와 미래)가치 무시(이전후보지가 갖는 환경성, 미래 가치)

- 자연·생태·역사적 유산, 문화관광측면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곳. 기후위기 대응 소중한 자산

● 이전 반대 이유5 : 지역발전(경제) 부정적 영향

- 군공항이 들어오면 기업들은 이전하고 세수확대도 안될 것이며, 주민재산권 피해 발생

20

III

군공항 주요 쟁점

- 01 전투기 소음피해
- 02 재산권 등 경제적 피해, 지역발전 저해..위험시설
- 03 피해 보상
- 03 이전 관련 논란과 이슈들

01 전투기 소음피해

● 소음피해 이슈의 시작

- 군 공항의 소음 피해를 둘러싼 갈등은 문민정부 출범 후인 90년대 초·중반부터 제기
- 2000년대 이후, 민원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

● 소음피해 소송의 최초 사례 : 군산 미공군 기지

- 2004년 1월 27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군산 미공군 기지 인근주민 2천35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소음도 80웨클(WECPNL)~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 명에게 32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것이 대표적

● 소음피해 소송의 대법원 사례 : 대구 군공항 사례. 이후 소송 급증

- 2010년 11월 25일, 대법원은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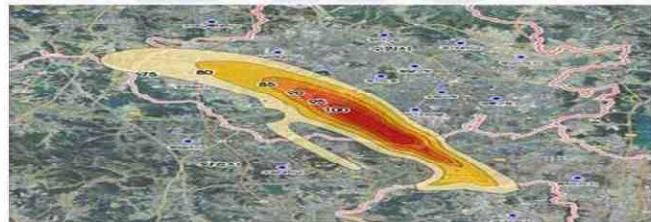
● 소음피해 보상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률 최초 발의

- 소송급증, 배상액 상승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안과 이전 법률 제정 필요 여론 확산
- 2009년 2월 12일, 김진표 의원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22

01 전투기 소음피해

구분	수원시	인구(명)	화성시	인구(명)
소음 영향 지역	면적(km) 면적(km)	인구(명)	면적(km) 인구(명)	
	26.18	184,784	8.02	59,590



□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용역 결과

(‘21. 6월 기준 단위: 교)

WECPNL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비고
75	14	8	2	1	0	25	70
80	14	7	5	3	0	29	
85	5	4	2	1	0	12	
90	2	1	0	0	1	4	
계	35	20	9	5	1	70	

* 학습권 피해

<http://kpenews.com/View.aspx?No=1854646>

23

01 전투기 소음피해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26549/view><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92>

24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41>https://news.airport.go.kr:448/article/selectArticleView.do?newsSeq=75445&newsType=NEWS_01

02 재산권 등 경제적 피해, 지역발전 저해.. 위험시설

● 각종 지역발전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

- 대상 군공항인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최소 200만평 이상의 면적을 차지
 - **비행안전구역**(150~164km², 4,673만 ~ 4,940만평) 필요. 수원시 전체면적의 절반인 **58.44km²** 가 비행안전구역. 6개 비행안전구역별로 건축물 고도 규제 적용되어 재산권 제한
 - 1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 2구역과 4구역은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건축 불가.
 - 3.5.6구역은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에서 45m 이내 건축만 가능
 -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 걸쳐 있고, 수원은 수원역 역세권을 비롯, 권선동, 호매실동 등 거주 지역이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됨
 - 화성시는 화성·병점 도시개발구역, 태안3택지 개발예정지구 등이 6구역 범위 내임
- 군 공항 기지와 인접한 곳은 노후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대하나 타 도심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조건의 고층건물 건축은 어려움(권선 6구역도 최대 층수는 15층 등)

● 탄약고 등 위험 시설

- 위험시설 공포(수원시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107만 3,049km². 여의도공원 5배) 25

03 피해 보상

● 소음피해소송과 보상제도화

- 군 공항의 소음 피해를 둘러싼 갈등은 문민정부 출범 후인 90년대 초·중반부터 제기
- 2000년대 이후, 민원을 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2년부터 주민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하여 관련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됨

● 소음피해구역 범위 설정과 피해 보상

- **소음피해지역**의 경우, 수원화성 군공항의 경우 수원시 26.18km², 화성시 8.02km²
- 1인당 평균 36만원 선(1종, 2종, 3종 구분. 1종일 경우 최대 72만원 선). 수원시는 2022년 현재 5만1600여명이 대상, 화성시는 2만3000여명이 대상
- 보상구역 거주하나 사업장 구역내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기도 함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대상과 관련 소음도기준 하향하여 대책지역범위 확대 등 요구

26

04 이전관련 논란과 이슈들

● 법상 이전 대상 문제

- 전술항공기지으로 이전 대상 한정되어 있는 현행법
- 이전요구는 대부분 도심내 군공항 보유 지자체·도시의 팽창, 무기체계 등 관련 기술 발전과 신 안보체계를 바탕으로 재편하고 이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공항 이전 어려운지

● 이전을 요구하는 지자체 만을 지금 공항 문제의 이해당사자로 볼 것인가? 후보지 주민은?

- 현재 운용지와 이전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 모두 이 사안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
- 지금 공항운용에 따른 문제는 결국 이전해도 똑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동의 문제 (소음, 지역발전저해, 학습관, 재산권 피해 등 모두)

● 이전사업방식(재원부담 등)의 논란

- 기부채납,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공항 기능 추가 형식이 과연 해결책인지
* 기부대양여: 지자체가 군이 원하는 시설 등을 건설해 주고, 군은 지자체에게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주는 방식

● 해결주체/동의주체의 문제

- 결국 결정권자는 국방부·절차적 문제, 이전후보지 지역의 반발 등 이해와 설득만은 한계
-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선정절차, 상위 정부기관 개입은 어려운지

● 이전지에 대한 대책

- 현재 도심군공항주변 주민 반발이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이유와 다를 바 없음
- 지금 군공항주변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 필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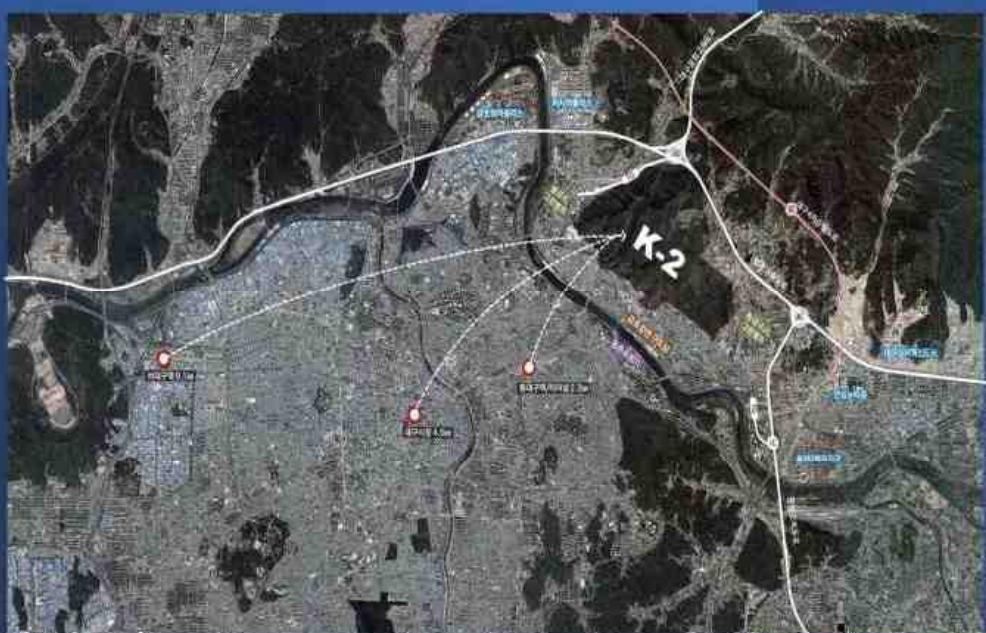
2. 2차 전문가 워크숍 발제 자료(10/14)

-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2022년 경기도 공론화 사업
제2차 전문가워크숍(2022.10.14(금))

대구공항(K-2) 이전사업 시사점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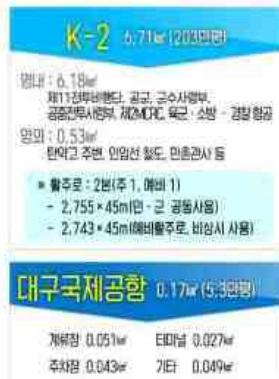


대구공항 개요

군 공항(K-2)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으로 구성

운행시간	05:00 ~ 24:05 14시(한글)
소유기관	■ 대한민국 중관
운영기관	■ 대한민국 중관 ■ 국군 항공 ■ 민주공항 등
차액	대구국제공항 경상북도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광장로 111(지하동 405-5)
거점 항공사	• 한진항공 • 아주항공
건설사기	1938년
사용시기	1958년 ~ 1965년(일본 미군 육군 활공대) 1964년 ~ 1971년 (미국 공군) 1970년 ~ 현재 (대한민국 중관)
활용기관	11전투비행단

▣ 출처: 위키피디어(2021.08.20 기준자료 염8)



대구공항 개요



도심공항의 문제점

전국최대의 소음피해 유발

피해면적
49.1 km²
대구시 면적의
약 5.6%

피해규모
24만 명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소음피해 노출
39개 학교
'11년 해시초 이전'



K-2 운용기종(F15K) 특성상 광주의 3.4배, 수원의 6.2배의 주력으로 소음피해 전국최대
로 소음피해배상액 4,275억원(2010~2019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걸림돌

고도제한
114.33km²
대구시 면적의
약 13%

인접지역 등
도시발전 걸림돌



K2 소음 피해 언제까지 소송만...대구 주민 배상금 3657억원, 변호사만 계속 승소금 쟁거

제작단장: 서도 2018 국경 2020년 | 누적 조회 20,757회



대구국제공항 홍보영상을 찾은 관계자가 전국 기자회견에서 대구 국제공항에 대한 저지성장을 규탄

지난 2010년 이후 대구 K2 군공항 소음 피해로 주민들에게 지급된 배상금이 3천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항 건설 추진 필요성

대구공항 수용한계 초과

□ 2019년 이용객 467만 명으로 수용한계 초과(여객처리용량 375만 명)

□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항 확장 불가

□ 활주로 신설 및 연장에 한계 (장거리 취항 항공기 노선 유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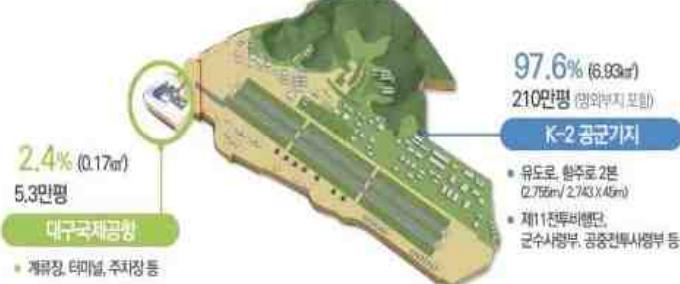
제1회 이후 이용객 추이



통합(군+민간공항) 이전 추진의 배경

대구공항 존치, 군공항 단독이전? 불가

- '기부 대 양아'에 의한 K-2 군공항 이전 재원 마련 불가
 - 활주로 등 공항 주요시설 및 부지 **대부분은 국방부 소유**
 - 기존 공항시설과 **부지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면 이전 재원 마련 불가**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군 공항 이전? 실현 불가

- 전국 16개 전술형공작전기지 이전 요구 시 천문학적 국가재정 소요로 정부 수용 불가
 -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이전이 과거 수 차례 대선공약에 반영되었으나 번번이 무산



11전투비행단만 이전? 불가

- 군 전력 운용상 국방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 각 전술 학과 학전기자별 평생·유사 시 기능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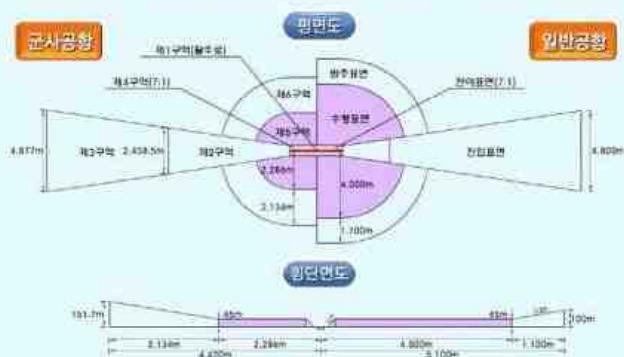
군 공항 단독이전 부지 확보? 불가

- 견본도 및 이전호보지에서 토학이전마 수용하다는 의자 표면



대구(민간)공항 존치? 고도제한 범위 확대

- 대구공항만 남는 경우 민간공항 관련 법률 적용으로 고도제한 범위 확대
 - 수평면(5구역) 45m 고도제한(한경 2,286m → 4,000m 면적 32km² → 77km²)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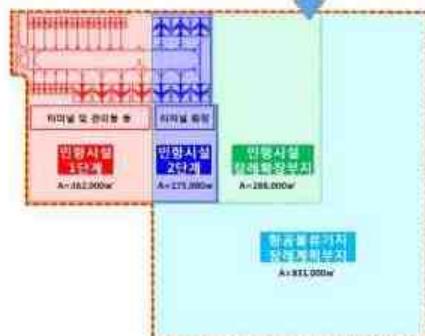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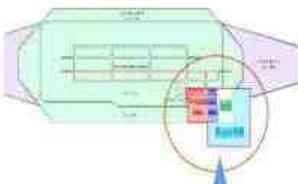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개요 (이전건의서 기준 2016년)

K-2 군공항 이전 건의서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8년 공항건설, 종전부지 개발
- 【사업규모】 15.3㎢, 현 규모 대비 2.3배
- 【민간공항 이전 건설】 → 공항신도시 포함 200만평 (1조 6천억원)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검토 내용

- 활주로** 활주로 2본 중 1본 민항전용, 1본 군항 전용
→ 추가활주로 확장성 확보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 부지** 장래 항공수요 감안, 부지 확장 가능성 확보
→ 항공수요 1,000만 명 이상 수용
- 접근성** 수요확보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항철도 연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방식



사업 방식 : 창립위원회TF 결정 2016년

- 【군공항】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
 - 후적지 개발 후 신기지 건설 재원 마련
- 【민간공항】 기존부지 매각대금 + 정부 재정
 - 현재 K-2 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
 -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 가능한 충분한 규모로 건설
- ※ 대구 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기본 계획 수립 중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 공항 동시시작 및 개항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계획



그림 출처: 연남정보(2020.07.31)





□ 대구 군·군수 이전주 브랜드 시민제작(안) 사업현황

분야	주제	운영체제	세부사업
기술	글로벌 기술, 혁신 11개	글로벌 기술, 혁신 11개	
생활 기반	주민 중심 시장 확충	주민 중심 시장 확충	주민 중심 시장 확충 주제 글로벌 협력 주제
기술 기반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 생태계
기술 기반	주민생활편의 10개	도로, 철도, 하수도, 경비, 소방, 청정, 환경	
기술 기반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생태계 가공, 농업 생태계	
기술 기반	전선 주행표	전선 주행표	
복지 사업 행복	주민 주거지역 확충	주민 주거지역 확충	주민 주거지역 확충, 주거지역
복지 사업 행복	보건의료시설 확충	보건의료시설 확충	보건의료시설 확충
복지 사업 행복	주민복지시설 확충	주민복지시설 확충	주민복지시설 확충, 주민복지시설 확충
복지 사업 행복	보건의료시설 확충	보건의료시설 확충	보건의료시설 확충
환경 생태	환경시설	시설설비, 재활시설, 공동체 및 사업장, 공동 설비, 주거시설, 공동체 및 생활시설 운영	
	자연재난	재난 및 환경시설	
	환경친화형 도시 시장	환경친화형, A/S 및 환경친화형 주제, 도시 시장 환경친화형 주제	
	환경친화형 주제	환경친화형 주제	
환경 생태	수족기/수중증류, 조성	수족관 기관관, 과학관, 청장, 유자 가족관, 수 족관 조성	
	농수산물 디자인 판매	농수산물 디자인 판매 및 관리(포장 및 표지)	
	환경시설	환경설비, 환경기기 조성 및 관리, 환경설비 설비 및 환경기기 조성 및 관리	
	환경기술	환경기술 설비 시장	
환경 생태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기술	환경기술, 환경기기 조성 및 관리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친화형 시장	
환경 생태	환경친화형 건설	환경친화형 건설	
	환경설비	환경설비 조성	
	환경기술	환경기술 조성	
환경 생태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환경 생태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환경기술 조성	

九集 三缺一 为数甚微

[초읽기 몰린 爲公항 이전]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어떻게

大士體。白居易《新羅寺碑》云：「坐知而得，處事而無。」



수원, 2년 공들여 최초 승인받고 예비후보지 선정 1년여째 답보
1년 늦게 출발한 대구, 추진 박차...광주도 이달 안 자문회의 끝나



“군공항 이전, 정부가 나서라”…시민 공동 대응

2020 RELEASE UNDER E.O. 14176



[단독] "군공항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도를"

第16章



| 광주전남 해안 여름조사 | 구글맵 이전 주제는

제작자는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행위를
제작본권한이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제작부진한 이유 백화점 크나큰 이익 해
극장부 100% 철수대 120% 총리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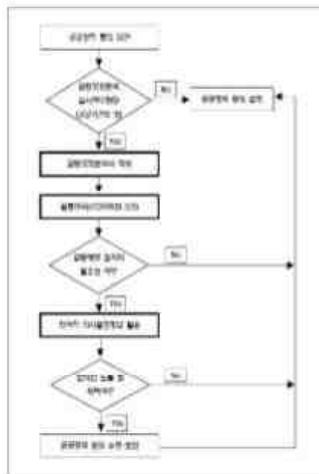
국장부 18% 경제부 12% 관리부 6%



[경주·전남·현안·여론조사 | 군공행 이전 주체는]

‘팔주 군포창’ 이전 사업을 주도할 주체에 대해 광주 전남지역민 철분 가까이가 광주시와 전남도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이전 관련 갈등 관리 대비 (국방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철거가 보다 투명해지고, 보상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 (이경록 오, 201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법 제정만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이경록 오, 2014)

(표 4) 군 공항 이전 사업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사업단계	갈등관리 방안
사업주관 본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간접 교육 • 협동동향 파악 및 대응 • 홍보도 채택 및 홍보활동
시민간까지 전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관부지 개설에서 갈등관리계획 구제회 • 비고→종관부지 갈등 대비 대책 수립
비전·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행정본부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갈등관계 관리체계 AED·작성·활용
이전 및 지원 사업·수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관리사항·이전 비중 감축 • 계획된 예산 조기 확보 및 갈등관리 세부 수립

표 출처: 이경록 외,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의 과제와 대책방향.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103호, 2014.

(그림 2) 국방부 갈등관리 업무흐름도(국방부, 2011b)

그림출처: 국방부, 국방갈등관리 매뉴얼, 2011

갈등 완화의 시작

I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은 항상 내포

- |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사이 갈등의 당연
- | 갈등 해소 방안의 실효성이 문제

| 갈등 완화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도는 있으나, 실질적 참여에서 한계 노출

- | 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은 전문가와 정부당국자에 의해 입안
- | 입안 이후 참여는 형식적 과정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 → 실행단계에서 격한 갈등 유발

| 실행 지역과 비용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된 계획안의 입안’이 근본적인 대안

- | 입안 이전 단계에 전문가, 당국, 해당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 | ‘대원칙’ 등 ‘큰 틀에서 합의된 계획안’의 입안

▶ **프로젝트 개념화,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계획안 마련, 영향분석 및 평가 등 일련의 통합된 계획 프로세스**

20

갈등 완화

3대 원칙

I 협업(Collaboration)

- 공간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문제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얹혀 있기 마련
-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은 필연적

I 틀(Framework)

- 협업 과정은 반복된 작업의 연속
- 정형화된 틀 마련 → 참여자의 역량 강화, 적극 참여
- 계획가(전문가)는 창의적 발상에 집중, 참여자는 신속한 대안 제시 → 온라인 툴도 가능

I 참여자의 역량 강화

- 동일한 정보 접근성 제공
- 자료 및 의견 공유, 계획안 스케치, 의사결정지원 도구(framework & platform)
- 체험학습과 현장답사,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 문제점과 개선과제

I 이전사업 관련 주체별 역할 명확화하고, 일원화된 특수 조직 필요

- 이전사업 이해관계자 : 국방부, 기재부, 중앙부처, 이전지 지자체, 사업시행자(민간 시행대행자) 등 다양
- 기부대 양여사업 시행자가 재무적 투자,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협의, 지역갈등에 대한 민원대응 등 총체적 부담
- 사업지연 등에 따른 손실은 국방부, 이전지 지자체, 종전지 지자체에 심각한 부담 초래
-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주체)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일원화 하는 것이 중요

I 사전준비과정부터 체계적 추진, 관련 주체 모두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인식

- 불필요한, 불명확한 사업과정에서의 지연 요인 해소가 사업 성패에 직결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의견 조율, 협상 진행,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시민 참여 유도
-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준비과정까지 포함한 사업기획

22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전 후적지의 공공재적 활용 관점 반영

- 군 공항 이전 건의 평가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
- 국유지로서 '재산적 가치'에 중점을 둔 양여 자산 관리(수익적 관점에서 평가)
- 군사시설(국가적 필요에 따라 설치된 공익시설) 조성 과정에서의 가치(공공목적 우선) 부여 관점 견지 필요
- 국유 재산 이전에 지역사회의 미래 자산으로 인식하여, 사업성에 의존한 개발방향과 사업시행은 지양

■ 비선호시설에 대한 이전지 주민의 수용성 제고

- 비선호시설인 군공항에 대한 인식개선 (*선호시설이 되려면? 원자력발전소에 벼금가는 지원?)
- 선호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전략 필요
-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민간 공항 운영 병행?)
- 수용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이 없는 현재가 좋다'(지역 여론)면? 사업추진 가능성 낮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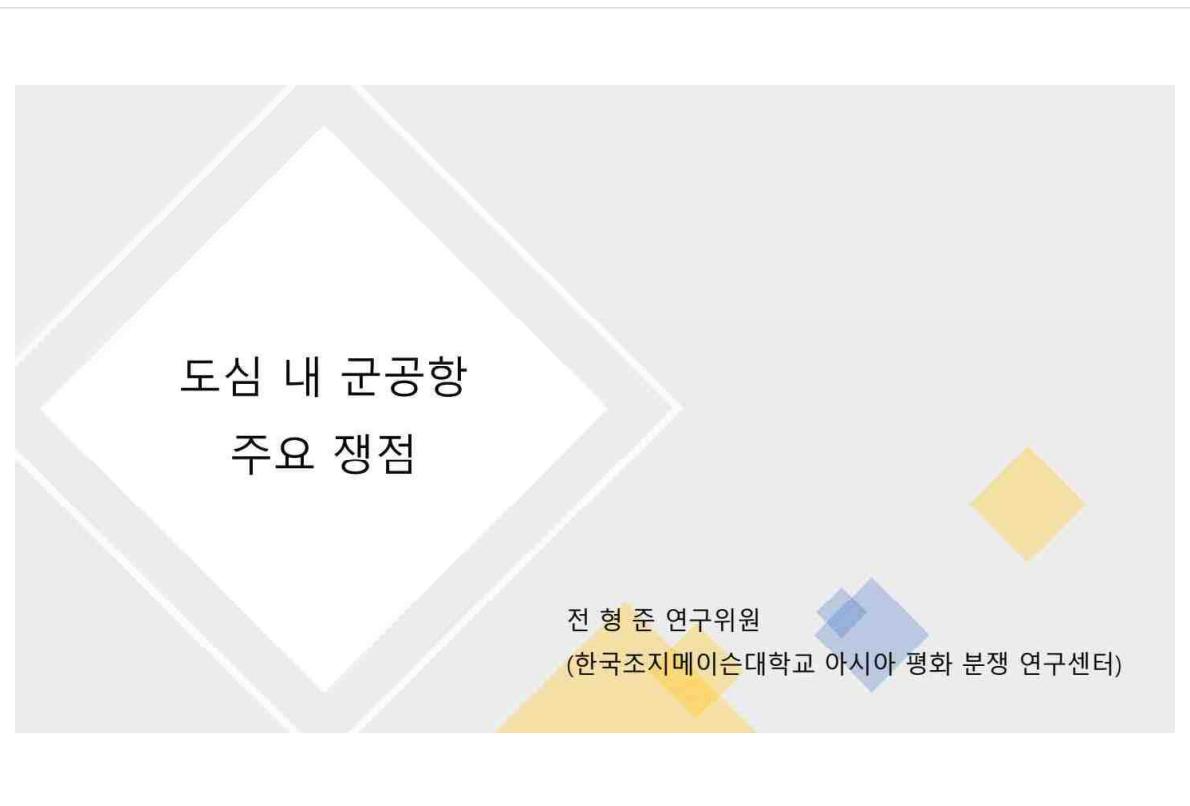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I 숙의토론회 발제자료

1. 1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10/29)

-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위원 -



| 전형준 연구위원 소개

- 주요 갈등영향분석 참여 사례
 - 대구·수원·광주 군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 부평구 지하보차도 관련 갈등영향분석
 -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R&D 갈등영향분석
 -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 주요 조정협의체 구성 및 진행 사례
 -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갈등조정
 - 원전 주변마을 집단이주 요구 관련 갈등조정
 - 북안산변전소 관련 갈등조정
 - 부평구 지하보차도 관련 갈등조정
 - 명승지 관련 갈등조정 (제주도)
 - 고속도로 건설 관련 갈등조정 (경기도)
- 주요 공론화 관련 참여 사례
 - 평택역광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자문
 -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경기·대전 지역순회토론회 기획 운영
- 학력 및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화학과 (학사)
 - KAIST 화학과 (석사)
 - 뉴욕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석사)
 - 미주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
 - 현)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
 - 현)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심의위원
 - 현)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
 - 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관리 자문관
 - 현)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
 - 현)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1. 군공항 이전 논의 관련 배경

군공항 이전 논의의 배경

- 2002년 5월 서울지방법원은 김포국제공항 소음 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공항공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최초로 인정하였음 (2002가합6945)
 - 이 판결은 2005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03다49566), 주목할 점은 85 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임
-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최초의 소송은 군산 미 공군 기지를 상대로 진행되었음
 - 2004년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는 군산 미 공군 기지 인근주민 2,0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0웨클~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878명에게 3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함 (2002가합33132)
 - 단 "군산 비행장에 민간항공이 취항한 후 전입한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알었거나 실수로 모르고 입자했다고 보이므로 손해액의 30%를 줄여 배상하라"고 결정함

군공항 이전 논의의 배경

- 2010년 11월 대법원은 대구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를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2007다74560)
- 이후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여 2012년 말까지 모두 179건(참여인원은 68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7건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모두 승소함
- 2016~2018년 8월까지 공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500건 정도(참여인원 172만 명)로 늘었고, 이 중 종결된 약 400건을 보면 원고 측이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한 소송이 대부분으로 알려졌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군공항이전법이 제정(2013년)되었고,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이전건의서를 낸 지방자치단체는 총 3곳임
 - 수원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우리나라 비행장의 초기 역사

-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은 1916년 당시 민간이 드물었던 여의도에 건설됨
- 1938년 현 김포 공항이 건설됨
- 1946년 민간 항공사가 최초로 여의도 비행장에 취항함
- 1958년 여의도 공항이 너무 잦은 침수로 민간 공항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민간 공항 기능이 김포 공항으로 이양되고, 여의도 공항은 공군 기지로 이용됨
- 1968년 제방공사를 통해 여의도가 더 이상 범람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지만, 1971년 군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새로 조성된 현 서울 공항으로 이전됨 => 여의도 광장의 탄생



<초기 여의도 비행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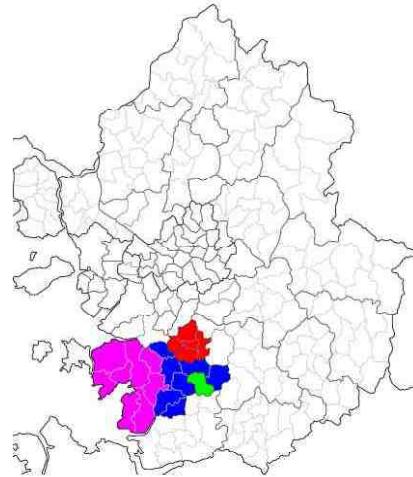


<1945년 여의도 비행장 모습 >

내용 및 사진출처: 영
등포구 포토소설역사
관 및 인천공항세관
66년사

수원과 화성의 행정명칭 역사

- 1413년 조선태종 13년 남양도호부, 수원도호부 설치
- 1793년 정조 17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
- 1895년 고종 32년 남양군, 수원군으로 개편(수원군 9개 면 남양군 이속)
- 1914년 남양군과 수원군을 수원군으로 통합(도서 제외)
- 1949년 수원군을 화성군으로 개편, 수원군의 일부인 수원읍은 수원시로 승격(인구 5만)해서 분리
- 1963년 화성시 태장면과 안릉면의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 나머지는 태안면으로 합면
- 1988년 수원시 인구 50만 (최근 120만 내외)
-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
- 2010년 화성시 인구 50만 (최근 90만 내외)



- 화성시 가운데 과거 수원유수부에 해당하는 지역
- 화성시 가운데 과거 남양도호부에 해당하는 지역

내용출처: 화성시청 수원시청 홈페이지
그림출처: <https://namu.wiki/w/수원시>

수원군공항의 역사

- 1938년 비행장이 건설되어,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동안 사용함
-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 1950년 대한민국 공군의 소규모 부대가 수원 비행장에 주둔함
- 1950년 7월 3일 대한민국 공군 첫 출격작전
- 1950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
- 1954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공군이 수원 비행장을 인수하고,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 비행장으로 이전함



<1952~3년 수원 비행장 모습 >



<1952~3년 수원 비행장 근접촬영 >

사진출처: 수원박물관

수원 군공항 구성요소



사진출처: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주요 경위

- 2014.3.20.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최초로 제출 (탄약고 부지 미포함)
- 2014.12.3. 수원시가 이전건의서를 수정해 접수 (탄약고 부지 포함)
- 2015.2.3. 화성시의회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원시와 국방부에 전달
- 2015.3.20.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 최종본 제출(탄약고 부지 제외)
- 2015.6.4. 국방부가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5.6.23.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2015.7.14.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발대식
- 2017.2.16.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1곳 선정(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
- 2017.2.17. 화성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시작
- 2017.3.27.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 대응 담당관 신설
- 2017.3.28. 화성시 범시민대책위가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결사 반대 집회'를 개최
- 2017.3.~5. 수원시가 라디오, TV에 군 공항 이전 찬성 광고 실시
- 2017.4. 화성시가 현법재판소에 권한행의심판을 청구: 화성시의 자치권 및 이전건의권 침해 및 이전후보지 선정 결정의 무효 주장 (2017.12.28.에 각하 결정됨)
- 2017.4.12.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추진단을 군 공항 이전협력국으로 개편
- 2017.7.12. 화성시 범대위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3만7천 명 서명부를 국정 기획자문위와 국방부에 전달
- 2017.8.21. 화성시장이 이전 반대 긴급 기자회견 실시
- 2017.9.~12. 수원시가 화성 지역 영화관에 군 공항 이전 찬성 광고("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통") 실시
- 2017.10.14. 화성시가 "평화가 허락해 준 소통 in 매향리" 평화축제 개최
- 2017.11.~12. 화성시가 수원 지역 영화관에 군 공항 이전 광고("평화와 자연") 실시
- 2017.12.15. 수원시가 화성시에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 기초 현황자료 제공 및 지원방안 수립과 관련된 화성시 의견 요청
- 2017.12.28. 화성시가 수원시의 요청에 대해 협력 불가 및 수원시의 이전 건의 철회 요청
- 2018.4.~11. 수원시민협의회가 수원 군공항 앞에서 이전 촉구 1인 시위

내용출처: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영향분석 등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주요 경위

- 2019.5.7. 화성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화성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이슈에 대한 인지도는 82%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대해 찬성 24%, 반대 70%
 - 이전반대 이유로 소음피해 우려가 61%, 도시 이미지 훼손이 21%, 재산권 침해가 14% 등이었음
 -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당관은 언론인터뷰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추진 철자상 화성시가 반대하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화성시민 대다수인 70%가 반대하는 이상 전투비행장을 절대로 이전할 수 없다”고 말함
- 2019.12.18. 경인일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화성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수원군공항이전사업 관련 의견은 찬성이 35.2%, 반대가 51.8%
 - 군공항과 민간공항 공동유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40.3%, 반대가 50.3%
- 2020.2.4. 경기신문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화성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수원 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계획에 대해 69.2%가 알고 있었음.
 -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건설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고, 44.8%가 반대함.
 -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44.5%, 반대 45.4%였음
- 2020.2.13. 경기신문 여론조사 후속 논란
 - 화성시 범대위가 경기신문 본사를 찾아가 ‘경기신문 ‘군공항 이전 여론 활용’ 여론조사 규탄’ 한다며, 이라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함
 - 반면, 경기신문 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 문형 내용도 공정했다”고 말함
- 2021.2.3. 화성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반대 77.4%, 찬성 22.6%가 나옴.
 - 민군통합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 80.6%, 찬성 15.6%가 나옴(경기신문)
- 2022.4.25. 충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화성시 거주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질문에 찬성 49.1%, 반대 36.1%
- 2022.9.2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군공항 이전담당관은
 - “민선8기 화성시의 기조는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반대하고 유치를 원하는 지역으로 군공항을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화성신문)

내용출처: 파이낸셜 뉴스, 화성신문, 경기신문, 충부일보, 미디어와이 등

대구 공항의 역사

- 1936년 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에 비행장이 건설됨
-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 1950년 대한민국 공군 최초 운용전투기인 F-51D무스탕 전투기가 동촌 비행장에 착륙함
- 1958년 8월 1일 제11전투비행단 창설하여 동촌 비행장에 주둔함
- 1961년 민간공항의 역할을 시작함
- 1996년 국제공항의 역할을 시작함



<1950년대 대구 군공항 >



<2020년대 대구 공항 >

내용출처: 경상북도 니시밀리카이브
그림출처: 충수청(2022) 군 공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이슈

대구 공항 이전 관련 주요 경위

- 2014.5.30.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 제출
- 2016.8.23. 군위, 통합신공항 반대 탄원서 접수
- 2016.8.30. 국방부가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6.9.1. 경북도의회가 중립적인 입장의 공항이전 특위 구성
- 2016.9.6. 군위군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모임 발대식
- 2016.9.9. 대구시의회, 추진 입장의 공항이전 특위 구성
- 2016.10.21. 군위, 통합공항 유치 호소문 접수 (소보면 공항유치위원회)
- 2016.10.27. 1차 예비이전후보지(안) 식별 및 관련 지자체 주민 소통 간담회
- 2016.12.7. 의성, 통합공항 유치찬성 서명부 접수
- 2016.12.27. 군위, 통합공항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유치 결의대회 (600명), 군위 군수 의성공동유치(소보면) 반대 성명, 단독유치 희망
- 2016.12.30. 의성군수, 비안면 일대 단독유치 추진의지 표명
- 2017.1.5.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대구공항 존치 주장
- 2017.1.9.~12. 2차 예비이전후보지 식별 및 관련 지자체 주민 소통간담회
- 2017.1.17.~3.3. 대구시장, 시정공감토크 진행
- 2017.1.25. 군위군수, 우보면 주민과 소통간담회
- 2017.1.26. 군위군 의회, 통합공항 유치 결의문 체택
- 2017.1.31. 군위 K2 군공항 이전유치결사반대추진위원회가 군청 앞에서 투쟁결의문 발표
- 2017.2.8. 군위군, 통합신공항 반투위 1차 유치 반대 집회(200여명)
- 2017.2.16. 예비이전후보지 2곳 선정
- 2017.2.28. 군위군, 통합신공항 반투위 2차 유치 반대 집회(500여명)
- 2017.3.7.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출범식
- 2017.12.29. 대구 통합 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4개 지자체장 회의 개최
- 2018.3.14. 이전후보지 2곳 선정
- 2018.3.24. 대구YMCA와 대구공항 활성화 시민모임 등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전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개최 (150명 참석)
- 2019.11.12. 속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합의
- 2019.19.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12.4.~5. 개최)
- 2020.1.21. 주민투표 실시
- 2020.7.31. 유치신청 실시
- 2020.8.28. 최종 이전부지 1곳 (군위소보·의성비안) 선정
- 2022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내용출처: 경상북도 웹사이트 등

광주 공항의 역사

- 1929년 일본 육군이 치평리에 임시 활주로 개설
- 1938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임시 활주로를 민간 비행장으로 바꾸어 개장
- 1944~5 일본 해군이 군공항으로 징발하여 사용함
- 1948년 교통부가 광주비행장으로 개설
- 1949년 2월 10일 상업 운항 시작
-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 1964년 현재 위치인 광산군 송정읍 신촌리로 이전
- 1966년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함
- 1988년 광산군, 송정시가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송정 일대의 광주공항도 함께 편입됨
- 1995년 6월 24일 국제공항으로 승격
- 2007년 11월 8일 전남 무안군에 서남권 중점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 신설
- 2008년 5월 27일 무안광주고속도로가 완전개통하면서 국제선 기능이 무안 국제공항으로 전부 이전



<1950년대 광주 공항 >



<2020년대 광주 공항 >

내용출처: 나무위키, 위키백과
사진출처: 홍수정(2022) 군 공항관련 갈등사례와 주요 미슈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요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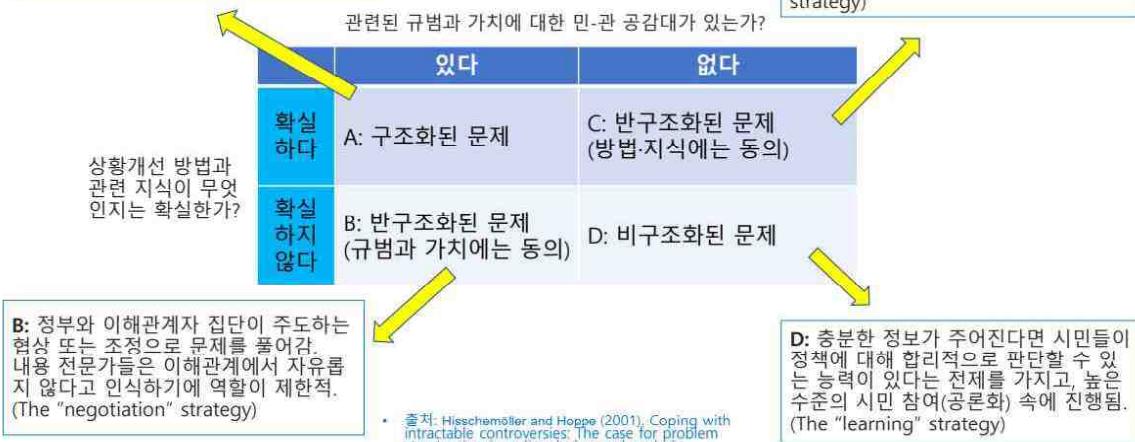
- 2014.10.14.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 제출
- 2016.8.19. 국방부가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6.11.8. 광주시 주관 적정지역 조사 용역 추진
- 2017.12.28.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 적정지역 조사 용역 결과 통보
- 2018.2.~7. 예비이전후보지 적정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 2018.7. 20. 군공항대용 TF 구성 (3명, 무안군)
- 2018.8.20.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과제 채택
- 2018.10. 국방부가 무안군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요인사 개별 면담
- 2018.10.~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바로알기 설명회 실시 및 무안군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설명 (무안군)
- 2018.11.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및 반대 특위 구성
- 2018.11. 무안군수, 군이회 시정연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천명
- 2018.11. 9개 읍·면 군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무안군)
- 2019.1.30.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 2019.2.22.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출회 및 결의대회 개최 (광주시)
- 2019.3.~ 이장·부녀회장 등 기관·사회단체 회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투비행장 주변 소음실태 현장 견학 실시 (무안군)
- 2019.3.12.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국방부 장관 면담
- 2019.4.~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사업 바로알기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반대 마을 순회 홍보 (무안군)
- 2019.5.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국방부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촉구 결기대회 개최
- 2019.6.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
- 2019.8.27.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 대구·수원 연합시민단체 대책회의
- 2019.10.31. 군용비행장 군사격침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11.18. 범군민대책위원회와 무안군의회가 광주시에 항의 방문 (무안군)
- 2020.5.14. 광주·전남 군공항 이전 공동 정책대안 마련 TF 구성
- 2020.6.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홍보 주민주도형 주민강사 마을 방문 실시 (무안군)
- 2020.6.30. 무안·화성·군공항 이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간담회
- 2020.10.21.~11.17. 군 공항 이전 결사반대 읍면 월례회 결의대회 개최 (무안군)
- 2020.12.9. 광주광역시장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4자 협의체에서 결정" 입장 발표
- 2021.1.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이동식 홍보관 (전담홍보 영상차량) 운행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홍보를 위한 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무안군)
- 2021.5.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애니메이션 5편 제작 (무안군) 내용출처: 광주광역시, 무안군청 웹사이트 등

2. 군공항 문제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정책 갈등 문제의 해결 전략

A: 일사분란한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도
(The "rule" strategy)

C: 협상이 이뤄질 경우 가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양자 모두 협상에 소극적임.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집단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내용 전문가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음. 협상태가 유지되며, 한 쪽이 다른 쪽의 입장을 수용하는 접근이 없다면, 갈등이 장기화됨. (The "accommodation" strategy)



개인이 아닌 집단이 문제 해결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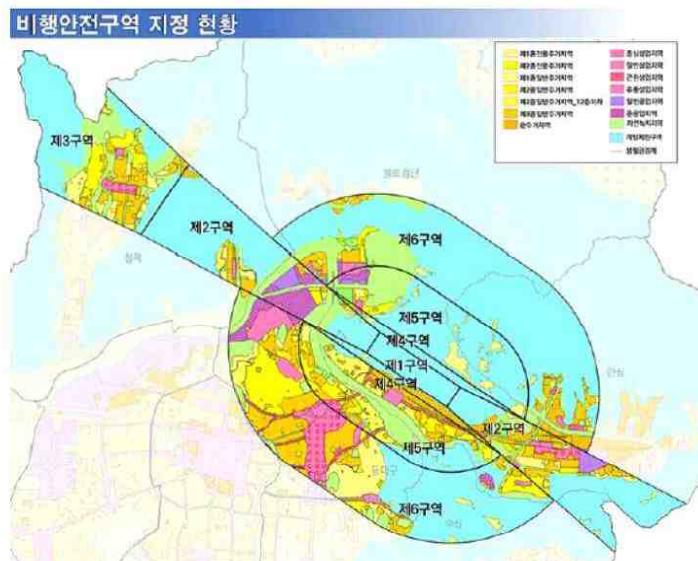
- 심리학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
 - 개개인의 추론 능력은 종종 형편 없다는 점
 - 그러나, 다양한 사람이 모일 경우 그 그룹의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날 수 있다는 점
 - 개인 추론 강화가 아니라 의사 소통 강화가 필요
 -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 위기는 개인의 추론 능력을 키움으로써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극복할 필요가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민주적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역량과 관련되어 있음
 - 숙의민주주의는 개인의 지식, 선호도, 투표와 관련
 - 시민과 지도자, 상호 정당화, 경청, 존중, 반성, 설득에 대한 개방성과 관련
- 출처: Fisikian, et. Al. 2019.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e science of deliberation: Citizens can avoid polarization and make sound decisions. *Science*. 35 March 2019. 363(6432). 1144-1147.

3.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소음 발생의 문제

-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는 문제
 - 추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소음 피해 규모는 군 소음 보상법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 8만 4천 명, 수원+화성 8만1천 명(5만2천+2만9천), 광주 5만7천 명으로 알려져 있음
 - 군 공항을 이전한다고 해서 소음 피해 범위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공항 이전은 소음 피해 인구의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기보다는 더 적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낫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거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주의 인식이 강한 경우 설득력이 낮음
- 시사점
 -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역적 정체성이 강하거나 개인주의 인식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한 번 시설이 들어오면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관점도 있는데, 수십 년 후 기술적 상황이 바뀌거나 지리적·인구적 상황 등이 바뀌면, 그곳에서 다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필요

건축물 고도 규제 방식



건축물 고도 규제의 문제

- 고도 규제의 목적: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
- 제1구역: 활주로
- 제2구역 및 제3구역: 이착륙시 비행 공간
 - 규제 수준은 3층인 곳도 있을 수 있고, 활주로에서 면 곳은 최대 50층인 곳도 있을 수 있음
- 제4구역: 공군기지 최근접 지역
 - 규제 수준은 7층인 곳도 있을 수 있고, 12층인 곳도 있을 수 있음
- 제5구역 및 제6구역: 활주로 주변 타원형 구간
 - 규제 수준은 12층인 곳도 있을 수 있고, 50층인 곳도 있을 수 있음

경제적 파급 효과의 수준

- 국방부에서 2016년 용역으로 진행한 군 공항 이전 관련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역	대구	수원화성	광주
건설 투입 예산	5조 2,625억 원	4조 104억 원	3조 5,539억 원
생산 유발액	7조 2,899억 원	5조 5,751억 원	4조 8,299억 원
취업 유발인원	5만 1,784명 (연간 8,630명)	3만 9,062명 (연간 6,510명)	3만 6,297명 (연간 6,050명)

- 군부대 주둔에 따른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함으로써,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 (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시사점
 - 경제적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피해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누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4. 군공항이전법이 현실적인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 제정이유
 - (도심 팽창으로 인한 지리적 요인) 도심 팽창에 따라 공항이 도시 중심에 자리하게 됨
 - (소음 문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음
 - (정부 재정부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특성: 이전 후보지가 될 수도 있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는 종전 부지의 가치에서 나옴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 선정 요건: 군사작전 적합성, 공항입지 적합성 등
 - 선정 주체: 국방부 장관
- 입법 과정에서의 우려: 비선호시설에 대한 반대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과연 200~300만 평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공모제가 가능한가?

- 공모제: (사전적 의미)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하는 제도
 - 충분한 정보와 조건의 사전 제공
 - 진행과정의 투명성
 - 자발성에 기초한 응모
- 현행 군공항이전법에 공모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님
 - 다만, 현행 군공항이전법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성 검토를 한 후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제로 할 경우 먼저 응모를 받고 그곳에 대해 작전성 검토와 입지 적합성 검토를 하여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유사한 예로, 스웨덴 고준위 방사능폐기장 선정 시 지질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먼저 유치 신청을 받은 후 지질 조사를 하여 적합한 것이 확인되면 유치 후보로 확정했음
 - 만약 공모제로 진행된다면, 인센티브가 먼저 공개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공모제 참고 사례

- 경주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
 - 공모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역공모제 방식
 - 주민 거부권 부여 등을 통해 주민 우려 최소화
- 장성광산변전소 공모제 사례
 - 공모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유치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이에 힘당한 지원금을 제공
 - 유치에 성공한 곳 뿐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탈락 마을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 (참고로 주민공모제 상황임)
 - 주민간담회를 100회 이상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림
- 시사점
 - 입지공모위원회를 지역 추천인사로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가 주도적 역할 수행
 - 지역과 많은 소통을 실시

2-1. 2차 속의토론회 발제 자료(11/12)

-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





I.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법

'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다른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전국군공항 대상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

대체시설에 지원사업 포함

이전부지 선정절차 구체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개소

근거: 법 제2조 / 시행령 제2조



신설군공항 + 주변지역지원사업

근거: 법 제9조

기존군공항

기부 (사업시행자→국방부)

근거: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제)

양여 (국방부→사업시행자)

근거: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일반 기부대 양여 사업

근거: 군사시설사업법 제12조

군 공항 이전사업

근거: 법 제44조

이전 건의

근거: 국방부사령부령 제13호

타당성 통보

근거: 법 제44조

이전부지 선정절차

근거: 법 제44조

협의 (안)

근거: 법 제44조

이전 사업

근거: 법 제44조

최종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기부 양여

근거: 법 제44조

기부 협의

근거: 법 제44조



II. 다각적인 해결 방법 (투명성 확보)



※ 예비이전후보자 선정 요건을 법령에 명시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자 선정 요건 (시행령 별표)

공항입지 적합성

지형조건, 소음비용, 임지가능, 접근성, 기반시설, 환경성, 확장성, 총 7개 항목

군사작전 적합성

항공작전 운용, 전력 배치, 공역, 비행안전, 비행절차, 기상조건, 총 6개 항목

※ 이전후보자 선정기준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

이전후보자 선정기준 (대구 군 공항 사례)

제도적 타당성

타 법령 저촉 및 제한 여부

종전부지 활용을 통한 이전·지원사업 비용 축감 가능성

사업적 가능성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성

5



II. 다각적인 해결 방법 (효율성 확보)



※ 특별법에 따른 절차
확정된 절차

※ 위원회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구성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장관

(정부)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차관 등

(지자체) 종전·[예비]이전후보자 지자체장

(민간 등) 국방부부 위촉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정부)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차관 등

(지자체)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민간 등) 국무총리 위촉

6

II. 다각적인 해결 방법 (민주성 확보)



※ 종전부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이전 건의
이전건의서

이전건의서 포함 내용

- 1) 종전부지 활용방안
- 2)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시행방법, 소요재원 등
- 3) 공청회 등을 통한 지자체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
주민투표법에 따른 국방부의 주민투표 요구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관계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음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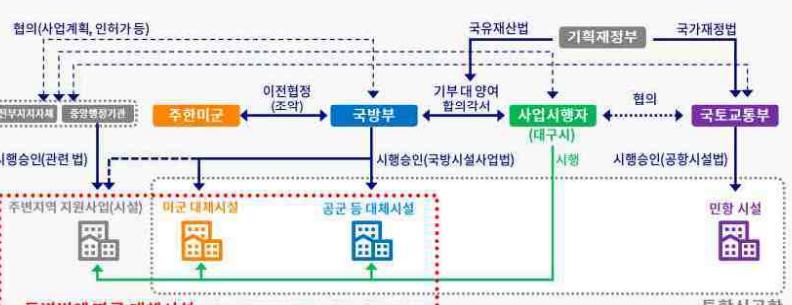
III. 현실성 있는 해결 방법

대구·수원·광주 군공항 현황



→ “선례 마련”
대구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 “선례 마련”
대구군 공항
이전에 따른
사업체계개념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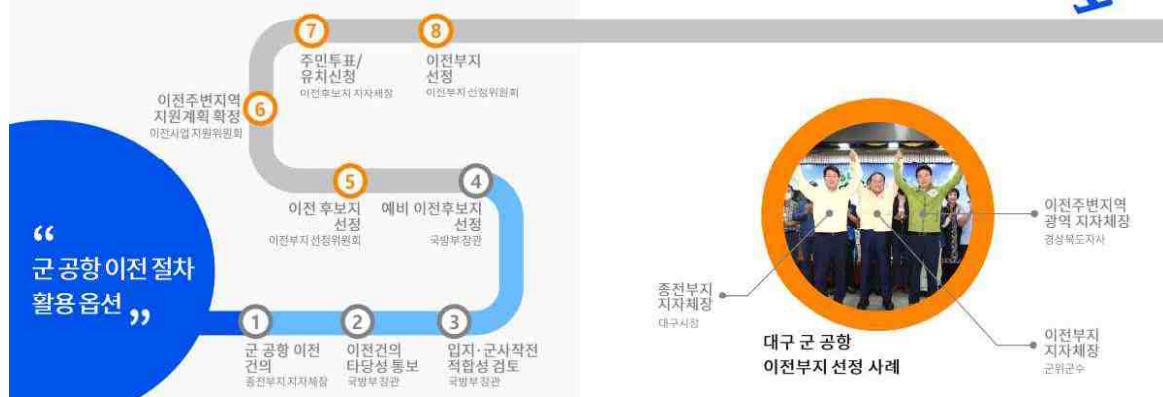


8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각적이며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법**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간 합의 정신



감사합니다.



우정범 jbwoo@kida.re.kr
군공항이전/주한미군기지/군사시설건설

- (現)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 Univ. of Tokyo 공학박사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방 조직 및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21 /책임)
- 군 공항 내 미군시설의 대체시설 건설 추진방안 연구('20 /책임)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미군시설 이전협상 핵심의제 개발 연구('19 /책임)
- 한미 공동작전기지 내 미군시설 이전방안 연구('18 /책임)
- 국내갈등이 국제문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20 /참여)
- 미래 한미동맹 국방협력 방전방향('18 /참여)
- 원활한 군사시설 이전 및 안정적 주둔을 위한 국방갈등관리체계 구축('17 /참여)

2-2. 2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11/12)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문제의 대안적 접근

- 수원군공항 점진적 폐쇄를 중심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눈

- 공군기지 인근 주민의 고충 해소
- 이전 후보 지역 주민의 반발 고려
- 국익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결론부터 말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하다.

7조원 안팎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감내할 정도로 안보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 군사력의 비약적인 신장(1)

- 남한 세계 6위 VS 북한 세계 30위(2022년 기준, 핵무기 제외)
※ 북핵은 한국형 3축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으로 대처
- 남한 전투기의 첨단화와 북한 전투기의 노후화 교차
- 남한 미사일 전력의 급성장
※ 전투기의 임무는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작전이 핵심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이러한 전투기의 임무를 일부 대체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군사력의 비약적인 신장(2)

- 헬기 전력의 급강화 :
양적, 질적으로 북한 압도전장이 좁은 한반도의 특성상
헬기의 임무도 중요한데, 한국은 양적으로도 북한보다 2
배 가량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압도적인
세에 있다.
정보 전력의 비대칭성: 고성능 망원경 VS 안대

불필요한 안보 위협 증대

- 화옹지구는 중국의 산둥반도와의 거리는 불과 360여km
- 대규모의 공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미 공군이 기착지로 사용할 가능성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2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SOFA 합의의사록에는 “적절한 통고의 면제가 미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여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 이는 미국이 적절한 통고를 하면서, 혹은 필요에 따라 이조차도 없이 대한민국의 비행장이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해협 충돌 발생시

- 해외 기지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은 ‘많을수록 좋다’
- 화옹지구에 대규모 공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으로서는 대만 유사시 중국의 북양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중국의 동양함대를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포착하게 될 것
- 미국의 사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주권적 장치 부재
-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중국 해군 기지 위치와 화옹지구



중국의 해군은 북양함대, 동양함대, 남양함대 등 3개의 함대로 편제돼 있으며, 사령부는 각각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 저장(浙江)성 낭보(寧波), 광동(廣東)성 잔장(湛江)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사례

- 미군 함정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 2017년 3월: 이지스 구축함 '스테덤'
 - 2017년 11월: 핵잠수함 '미시시피함'
 - 2018년 10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 “제주해군기지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을 겨냥한 단두대의 칼” (데이비드 서치타 전 해군 작전참모)**

탄소 제로에 역행

- 습지와 해초림은 ‘블루카본 보고’, 산림과 초지에 비해 50배 이상의 속도로 탄소 흡수!
- 화옹지구에는 대규모의 습지 위치
- 공군기지 건설시 탄소 흡수량은 크게 줄고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것임：
전투기의 연비는 자동차의 30-50분의 1 수준,
공중 배출은 지상 배출보다 4배 가량 지구온난화에 영향

최선 : 수원 군공항 점진적인 폐쇄

- 노후화로 찾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F-4와 F-5의 도퇴 시기를 압당겨 군공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을 전후해 완전 폐쇄 및 민간용으로의 전환 검토
-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를 현재 약 400대에서 2025년에 350대 정도로 줄이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대안임
- Low-High에서 Middle-High로의 추세에도 부합

차선 : 규모 축소와 무인기 기지화

- 수원 군공항 완전 폐쇄가 어렵다면, 규모를 현재의 2분의 1 이하로 축소하고 무인기 중심의 기지로 운용하는 방안
- 현대전과 미래전에 있어서 무인기의 임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 반영
- 도입 예정인 K-UCAV: 속도 마하 0.85, 작전반경 280km, 스텔스 기능, 감시정찰 및 공대지 임무 수행 가능
- 터보팬 엔진으로 소음은 상대적으로 경미

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갈등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2차 숙의토론회 발제 자료(11/12)

- 허태성 (주)유신 부사장 -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옵션검토 (군공항외 국제공항건설을 통한 도시발전)

2022. 11. 12

 (주) 유신 부사장 허태성

목차

1. 발생 가능 수요 -----	3
2. 공항 건설 동향 -----	15
3. 건의 내용 -----	21

1. 발생 가능 수요

전국 35 공항
군공항 26개, 민간공항 7개, 기타

상용화 공항수 : 15개 공항

• 민공항 : 7개 (가덕신공항, 울릉)

- 국제선 : 5 (인천, 김포, 무안, 양양, 제주)

• 민군공항 : 8개 (대구통합신공항)

- 국제선 : 3 (김해, 대구, 청주)

국제선 8개, 국내선 7개

추진 예정 공항 : (경기남부, 무안광주통합, 제주 2, 촉산, 서산, 백령, 포천)



4

신공항 건설 방향



경기도내 공항

구분	공항 명	소재지
공군공항	서울공항	경기도 성남시 수원구
	수원공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미군공항	오산공군기지	경기도 평택시
	USAG 험프리스	경기도 평택시
	캠프 스텐리	경기도 의정부시
육군공항	9개소	이천, 고양, 남양주, 파주, 양평, 양주 가평, 포천, 용인
추진중	포천공항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경기도내 군공항 14개소, 공군공항 도내 중심권에 위치

5

신공항 건설 방향



위계별공항과 분담역할

구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증추공항	인천공항			
거점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대구공항 (통합신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 (제주 제2공항)
일반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서산공항) (백령공항) (포천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울릉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군산공항 (흑산공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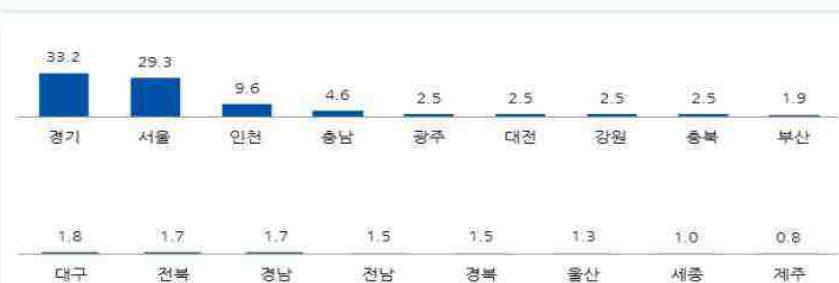
■ 국제, 국내 여객·화물 수요실적(2019년)

공항별		국제여객(천명)	국내여객(천명)	소계(천명)	화물(천톤)
민간 공항	인천공항	70,578	592	71,170	3,766
	김포공항	4,272	21,176	25,448	253
	제주공항	2,668	28,648	31,316	259
	울산공항	0.5	787	787	4
	여수공항	-	636	636	3
	무안공항	687	208	895	7
	양양공항	32	22	54	0.5
민, 군 공항	김해공항	9,591	7,340	16,931	172
	대구공항	2,576	2,093	4,669	35
	광주공항	-	2,027	2,027	13
	청주공항	496	2,513	3,009	19
	사천공항	-	219	219	0.9
	원주공항	-	111	111	0.6
	포항공항	-	94	94	0.4
	군산공항	-	307	307	2
	총 계	90,900	66,773	157,673	4,533



■ 인천공항 이용객의 거주지 분석

- 경기 33.2, 서울 29.3, 인천 9.6, 충남 4.6, 13개 시도 23.3(%)



이용객 거주지(국내 거주자)_인천공항(항공여객 O/D 및 특성조사 . 2019)

인천공항 이용객의 30%는 경기남부 세력권에서 발생



■ 경기도 주변 인구분포

- 경기 : 1,360만명
 - 경기 남부 : 1,000만명
 - 경기 북부 : 360만명
- 서울 : 950만명
- 인천 : 280만명
 - 부산·울산·경남 : 780만명
 - 대구·경북 : 500만명
 - 전라남북·광주 : 500만명
 - 충남·대전·세종 : 420만명
 - 강원 : 150만명
 - 제주 : 67만명



주) 통계청 나라지표 2021

경기 남부인구는 1,000만명으로 공항권역 증 최다

9



■ 인천공항 지역별 화물물동량

- 경기 33.0 %
- 서울 27.8 %
- 충청권 10.7 %
- 경남권 10.2 %
- 인천 8.1 %
- 경북권 7.0 %
- 전라권 2.3 %
- 강원 0.5 %
- 제주 0.4 %

구분	물동량(톤)	비율
경기	416,881	33.0%
서울	350,126	27.8%
인천	102,163	8.1%
충남	76,089	6.0%
경북	60,708	4.8%
경남	55,426	4.4%
부산	52,253	4.1%
충북	39,845	3.2%
대구	27,241	2.2%
울산	21,272	1.7%
대전	13,971	1.1%
광주	13,745	1.1%
전북	9,277	0.7%
전남	6,202	0.5%
강원	5,902	0.5%
세종	5,269	0.4%
제주	5,255	0.4%
합계	1,281,625	100.0%

2016년 품목별 수출입 항공화물 실적

인천공항 물동량의 25%는 경기남부에서 발생

10



■ 공항별 활주로 시설능력 분석

공항별		활주로 수	활주로 용량 (회)	운항횟수 (회)	기동률 (%)	2030년 기준	기동률 (%)
민 간 공 항	인천공항	4개	600,000	404,104	67.4	597,200	99.5
	김포공항	2개	226,000	140,422	62.1	225,300	99.7
	제주공항	2개	189,000	175,366	92.8	294,100	155.6
군 공 항	김해공항	2개	152,000	111,276	73.2	152,800	100.1
	대구공항	2개	60,000*	31,236	52.1	-	-
	청주공항	2개	60,000*	18,648	31.1	22,300	37.1

주) – 운항횟수 2019년 기준,
 – 2030년 수요 예측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 대구공항은 청주공항 용량 기준 적용
 – 인천공항 활주로 용량 : 제4활주로 포함, 제주공항은 확충사업 시행시

2030년경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용량한계에 도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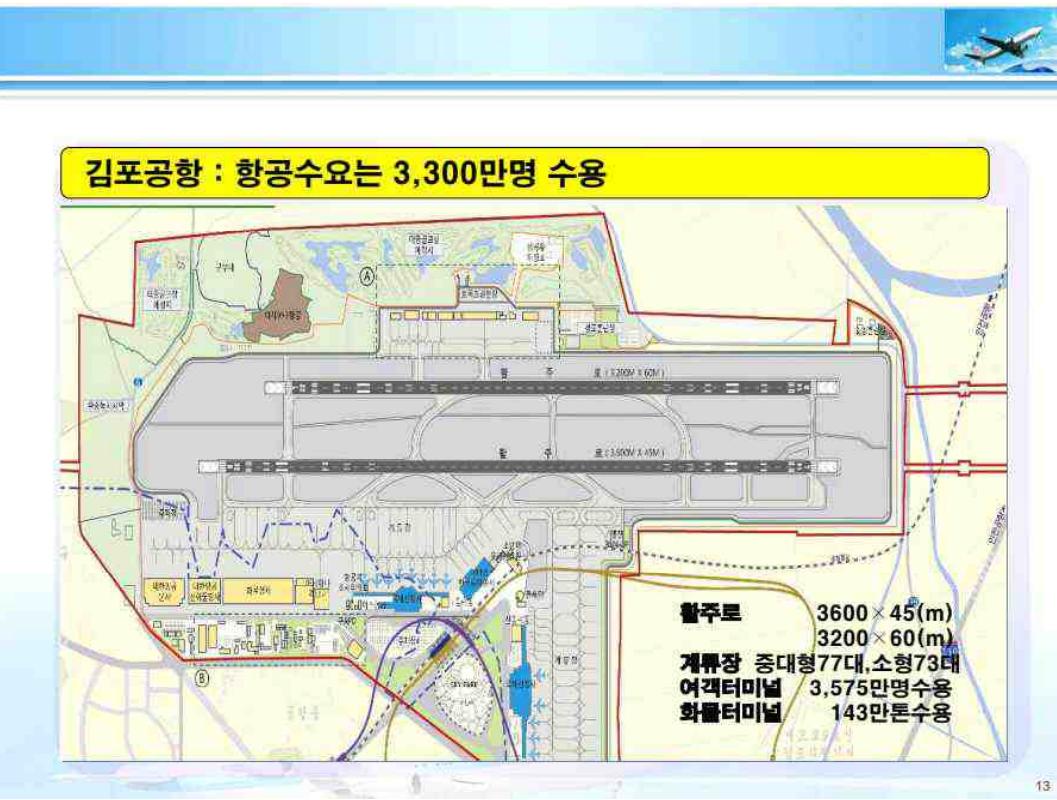
■ 항공수요 전망 (제 6차 중장기 종합계획)

단위 : 만명, 천톤

구 분		2025	2030	2040	2050
여객	국내선	7,299	7,687	8,267	8,649
	국제선	9,307	11,900	15,781	18,538
	인천공항	7,330	9,520	12,728	15,029
	김포공항	2,782	2,953	3,171	3,330
화물	국내선	611	643	692	723
	국제선	4,817	5,407	6,370	7,149
	인천공항	4,490	5,023	5,901	6,603

여객 약 5000만명, 화물 150만톤 초과 예상

12





2. 공항건설 동향



공항 발전 형태

제 1단계 : 여객과 화물의 운송

- 여객운송, 화물운송, 군 전투기

제 2단계 : 공항민원, 서비스개선, 화물단지, 공항도시

- 소음피해방지, 교통망개선, 자유무역지대, 공항 주거지역조성

제 3단계 : 물류, 관광, 리조트 조성

-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복합상업시설, 호텔, 관광 기점화

제 4단계 : 항공산업 단지, 유통, 제조클러스트 구축

- 항공 정비단지, 바이오, 전자제품의 생산공장 집적화

15

■ 인천공항 주변 (드림아일랜드사업)

- 여의도 면적의 1.1배(332만 m^2)의 부지규모
- 민간자본 2조 321억원을 투입
-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연구시설, 테마공원



17

싱가폴 창이공항

창이공항의 복합상업시설 “쥬얼”은 여객터미널과 보행자 전용로를 연결



18



- '쥬얼'의 총 면적은 13만4천m²
- 280여개의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레저시설이 입점
- 여행객과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복합상업시설을 운영



19



두바이 공항

■ 세계최초 통합물류 복합공항

- 두바이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자유무역지대, 두바이항만을 연계하여 하나의 보세구역으로 설정
- 모든 물류 서비스는 one-stop 처리
- Dubai Logistics City 개발, 제벨알리항만 및 자유 무역지대를 연계한 Sea&Air 복합 운송체계 구축



20





21



1. 2030년경 인천공항, 김포공항 용량 한계 도달
2. 인천, 김포공항 초과 수요는 여객수요 5,000만명
화물 150만톤 발생 예상

**경기남부에 5,000만명처리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을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를 창조**

2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